좋은 동네에서 살자 :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협동조합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6.05.25.

협연구동(動)

2016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2016. 5. 25(수)
13:00-18:00

협동조합 지식의 숲을 이루는 십년을 향해

① 기념심포지엄

"좋은 동네에서 살자: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협동조합"

1.사례연구발표
-조합원이 그려나가는 생활정치: 진주아이쿱생협의 실험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의 활동풍경
-생협매장사업은 지역사회에 무엇을 남기나: 대전지역 아이쿱생협의 사업특성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 활동

2.대담
신동욱_한양대국제대학원, 허준기_고려대학교 대학원
황지애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화령_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김창진_성공회대학교, 박종현_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염찬희_성공회대학교, 김정희_율목아이쿱생협
김형미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② 기념식

진행 김창진_정치학자

③ 축하만찬

일시 2016. 5. 25(수) 13:00-18:00

장소 여성플라자 아트홀 & 국제회의장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주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문의 02-2060-1373
icoop-institute@daum.net

협동연구동(動)
2016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재) icoop 협동조합연구소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좋은 동네에서 살자: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협동조합”

시 간	내 용
13:10~13:25 (15분)	조합원이 그려가는 생활정치 : 진주아이쿱생협의 실험 (신동욱, 허준기)
13:25~13:40 (15분)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 조합원의 활동 풍경 (황지애)
13:40~14:00 (20분)	질의응답
14:00~14:15 (15분)	생협 매장사업은 지역사회에 무엇을 남기나? :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사례 연구 (정화령)
14:15~14:30 (15분)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 (김형미)
14:30~14:45 (15분)	질의응답
14:45~15:05 (20분)	휴식 및 대담 준비
15:05~16:20 (75분)	대담

대담자

신동욱_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허준기_고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황지애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화령_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김형미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창진_성공회대학교
염찬희_성공회대학교
박종현_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정희_율목아이쿱생협

목 차

10주년 기념 연구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에 부쳐 ····· 4

조합원이 그려가는 생활정치: 진주아이쿱생협의 실험 ····· 7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 조합원의 활동 풍경 ····· 29

생협 매장사업은 지역사회에 무엇을 남기나?
: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사례 연구 ····· 46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 ····· 68

국가, 공공정책, 협동조합
-지역사회 생활정치를 위한 인식론적 기초와 전략 구상 ····· 99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다시 생각하기 ····· 120

지역의 부는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경제학자들의 시각 ····· 128

지역사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주민복지활동의 힘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을 읽고서 ····· 140

10주년 기념 연구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에 부쳐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누구나 동의하기 쉬우며 단조롭고 평범한 이 표현이 왜 10주년 기념 연구 주제로 떠오르지? 싶었습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10주년을 맞이하며 준비한 지식 작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쿱의 협동조합운동의 초창기를 이끌어 온 리더들의 기록을 남기는 것. 이 작업은 차형석이 인터뷰하고 신철영·진경희·신복수·이정주·김주숙·정병호가 참여한 책 《아이쿱 사람들》(알마, 2016)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 활동의 경험을 조명하고 해석하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과 관점에서 이 경험을 다룰지 생각할 때 떠오른 게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였습니다. 2015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회에서는 10주년 기념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번 토론했는데 결국 이 주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봅니다.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제7원칙 때문에? 조합원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어서? 이 주제를 다루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이유들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 기사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 좋은 동네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1)]

이 주장은 부모 소득이나 교육수준이라는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안 좋은 동네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성장 후 경제적 성공에서 불리하다는 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붙인 제목입니다. 10주년 기념연구 결실을 교류하는 심포지엄의 제목을 <좋은 동네에서 살자: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협동조합>이라고 붙인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더 나쁜 영향을 개인 소득에만 한정하여 보았으나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이들이 안 좋은 사회에서 자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비극과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다고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처럼 좋은 동네를 찾아서 이사 다니는 게 대안일까. 한국 사회 불행 중 하나는 어떤 '좋은' 곳에 진입한 후 타자가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만드는 것이며 그들과 우리를 분단하여 차별하는 현상이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소득에의 쏠림이 너무나 심합니다.

---

1) 뉴스 페퍼민트(인터넷) 2016.3.29. 게재 기사에서. http://newspeppermint.com/2016/03/28/neighborhood/

좋은 사회는 좋은 동네, 좋은 공동체(communities)입니다. 이미 세계는 국내총생산(GDP)이나 1인당 국민소득(GNI)만 지표로 삼아 성장, 발전을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삶의 질, 행복, 공정한 발전,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그 지표를 개발하는 국제적인 흐름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종합되어 인류에게 공통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리 달라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시민권을 얻기 시작하는 변화도 눈에 띄는데, 한국 사회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실감은 그리 없습니다. 왜 그럴까. 비약과 단순 환원의 위험과 오류를 무릅쓰고서라도 이야기하자면 현 시기 한국인의 삶의 수준을 규정하는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 정의와 윤리가 사라지면서 사회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대와 이해관계 조정, 합의의 장이라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없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노동경제학자 R. Layard는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를 개인소득, 가족관계, 일, **공동체·친구와의 유대**,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이렇게 7개로 제시했습니다.[2] 이 요소를 실제 도시 주민들의 행복 인식에 적용한 연구 '10대 도시에서 행복 추구 이해하기'[3]에서는 공공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하며 문화와 레저가 풍요로운 도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일 때, 공동체와 유대를 느끼는 경우에 행복을 느끼며 자신이 사는 도시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 더욱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는 탐욕이나 부의 집중이 아니라 안심 생활과 부의 분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런 사회가 지속가능하며 위기에 강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co-operatives build a better worl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사는 공간으로 좁혀 들어가면 협동조합은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나은 동네를 만듭니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규범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실증적으로)는 훨씬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역시 2010년에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염찬희·엄은희·이선옥) 를 통해 생협의 매장사업, 친환경무상급식 활동,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실증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4]

이번에는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 상호작용에 더 주목했습니다. 감히 오해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하거나 평가를 받고 싶은 연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

2) Layard, R.(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Books.
3) Leiden. K.M, Goldberg. A, and Michelbach, P.(2011), Understanding the Pursuit of Happiness in Ten Major Cities, *Urban Affairs Review* vol.47, pp.861~888. accessed at http://uar.sagepub.com/
4) 2010년 12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

연구, 즉, 조합원 활동이 협동조합 내부에서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 맺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고 서로 역량을 부여하며 협동이 보다 빈번해지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사례연구를 통해서 다루고자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에 관심이 높은 신진 연구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뒷받침하는 담론을 또 다른 연구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연구와 심포지엄이 신진 연구자와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극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례연구 대상은 아이쿱생협의 5개 지역조합, 일본의 1개 지역조합입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와 상담하여 83개 지역조합(2015년 09월 기준) 중 역사성과 지역성, 활동 특징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 조합을 선정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을 지닌 이들로 지역의 생활협동조합들이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생활정치, 협동하는 문화, 지역사회 부의 형성, 복지라는 관점에서 연구 대상을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는 소비자들의 협동조합인 생활협동조합에 한정되지만 김창진, 염찬희, 박종현이 제기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담론과, 신동욱·허준기, 황지애, 정화령, 김형미가 연구한 6개 지역조합의 사례가, 협동조합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 그 잠재능력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지식의 장으로서 독자들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를 세상에 선보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액기부로 참여하는 아이쿱 조합원들에게 이 연구를 바칩니다. '활기찬 협동의 지역사회' (Communities with Vibrant Co-operation)를 만들어 가는 조합원의 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형미

조합원이 그려가는 생활정치: 진주아이쿱생협의 실험

신동욱[1)]
허준기[2)]

1. 우리는 왜 생활정치에 주목하는가

올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으며, 내년은 19대 대선이 있는 해이다. 굵직한 선거를 전후로 스타 정치인이 등장하고, 다양한 정쟁 등이 벌어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달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영남지역에서 상당한 숫자의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중심의 폐해 속에서 지방도시는 정체되어 있었고, 변하지 않는 삶을 바꿔보려는 생각이 매번 지역을 차지해오던 정당에 대한 교체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정치를 바라고 있으며, 피폐해져가는 지역의 삶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망은 더욱 크다. 이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활정치에 주목했다. 정치인들만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여의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바꿔낸다는 생활정치가 작동하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지역의 변화는 국회의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를 통해서도 지역의 생활정치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좋은 동네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들, 생활정치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역의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아이쿱생협)이 시도하는 생활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 다시금 성찰해보고 지역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삶을 개선해가기 위한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 이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추구하는 조합원의 생활문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활동은 생활정치의 차원보다는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의 활동이 주목받기 이전에 안전한 마트로 국한되어 버리곤 한다. 생협을 둘러싸고 소비자주의, 중산층 대상의 한계적 협동조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협은 정치·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동체로서의 목적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 속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미미함은 여전하며, 이러한 지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생활정치운동을 통해 생협이 추구하던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을 변화시킨다면 생협의 성장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

---

1)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석사과정
2)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 때문에 어떤 활동이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어떤 점이 부족하기에 생활정치운동이 미약한지 진단하는 일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쿱생협과 지역사회가 생활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탐색하며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 이외에도 정치·사회적 필요와 욕구에 생협이 응답하는 과정을 점검하여 생협가치[3]의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하는 성찰과 재정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생활정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생활정치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에 따라 저마다 내리는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대의적 정치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담론이며 제도[4]로 보려고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운동과 정치의 영역은 주로 '노동해방'과 같은 계급운동이라는 거대한 의제에 집중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정당과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민주주의 제도 개혁을 통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를 관통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등의 일례로 발현되었으며 거대한 사회변화를 추동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고도화된 분화는 민주화와 사회운동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냈고 일상세계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으며 정치의 영역은 더욱 협소하게 인식되어 생활세계와 괴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등장한 것이 생활정치다. 생활정치는 일상을 위협하는 권력과 폭력에 저항하는 정치이며, 삶의 보수화를 벗어나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5] 독일의 사회학자 하버마스는 생활정치를 공공영역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정의하며 생활단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협소화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생활세계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6] 현재 여의도 정치로 대표되는 정치의 협소화가 불러일으키는 일상생활의 소외와 공동체 의사에 대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일상을 주목한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생활 속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정치형태로서 '평의회'를 통한 생활정치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며,[7] 앤서니 기든스 또한 기존의 '해방정치'가 놓쳤던 문제들을

3) 우리는 이 글에서 '생협가치', 또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제시된 안을 참고하여 정의했다. 이 총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라고 채택했다. 생활정치의 강화는 이러한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4) 서정갑·오문환. 1995. "생활정치 사상의 모색."『사회과학논집』. 26: p.15.

5) 오재환. 1996. "일상생활의 구조와 생활정치."『사회조사연구』. 11(1): p.101.

6) Habermas, J. 2006.『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장춘익 역:『의사소통행위이론1, 2』). 나남.

7) 서정갑·오문환. 1995. "생활정치 사상의 모색."『사회과학논집』. 26: p.15.

‘생활정치’로 해결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든스는 특히 불평등, 권력, 정의의 문제를 정치학적으로 풀어내려는 해방정치와 도덕적 생활양식, 삶의 방식 등의 문제에 주목한 생활정치를 비교하여 설명하며 자아실현의 영역을 강조하였다.[8] 거대질서 속에서 탈각되어온 개인의 문제, 일상의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신사회운동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 생활정치의 등장을 알린 것이다.

이처럼 해방정치와 생활정치는 주요 이슈, 주된 운동, 민주주주의 영역의 세 가지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9] 해방정치와 달리 일상의 삶을 바꿔내는 운동으로 생활정치운동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의 일상적 삶이 이뤄지는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3. 진주아이쿱생협을 바라보는 이유

진주아이쿱생협은 2002년 8명의 준비위원과 17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다. 이듬해 100여명의 조합원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11] 현재 등록된 조합원 수는 3,500명가량으로, 이중 매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수는 2,896명(2016년 5월 초 기준)[12]이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기준으로 보면, 진주지역의 13만8천여 세대 중[13]에서 약 2%가 진주아이쿱생협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매장은 신안평거점과 초전점 두 군데에 있다. 매출액을 보면 2015년 작년 한 해 동안 총 63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수매선수금[14] 참여율도 36.8%로 전국 지역조합의 평균인 30%[15]를 상회하고 있다.

진주아이쿱생협에서 주로 하는 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판매, 환경호르몬 유발 식품 및 GMO 반대운동 등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각종 모임들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협력 등이 있다.[16] 최근 지역연대활동의 측면에서는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시민대책위는 경남도청의 진주의료원 폐쇄조치에 반대해 만들어진 단체로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면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진주시 의정 감시단 운영, 진주시 예산 분석 모임, 진주협동사회적경제연대회의 참여 등 지역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

8) Giddens, A. 2006.『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권기돈 역:『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9) 조대엽. 2014.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현상과인식』. 38(4): pp.134-137.
10) 오재환. 1996. “일상생활의 구조와 생활정치.”『사회조사연구』. 11(1): p.101.
11) “생활협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단디뉴스. 2016년3월8일.
12) 진주아이쿱생협. “5월1주차업무보고(5/2~5/4).” http://coop.jinju.or.kr/. (2015.12.31.).
13) 진주통계정보시스템.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tat.jinju.go.kr/. (2015.12.31.).
14) 수매선수금은 이용할 물품 대금을 미리 내는 것으로, 조합원 모두가 이용할 농산물의 생산, 수매에 사용되는 자금(생산계약금, 수매자금)을 말한다.
15)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2016. “2016년 제1차 전국대표자회의 자료집.” p.72.
16)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소개.’ http://coop.jinju.or.kr/. (2016.5.12.).

표1. 진주아이쿱생협의 기본 현황 (2015.12.31.기준)

조합비 조합원 수 (명)	신안평거점 연매출액 (천원)	초전점 연매출액 (천원)	수매선수금 참여율 (%)
2,833	3,377,197	2,984,351	36.8

출처: 진주아이쿱생협(2016). '2015년 진주iCOOP생협 감사 보고서'

표2. 2016년 진주아이쿱생협의 출자자와 조합비 조합원의 규모

구 분		1월	2월	3월
2016 조합원 수	출자자	3,452	3,482	3,511
	조합비	2,846	2,865	2,891

출처: 진주아이쿱생협(2016). '2016년 4월 정기이사회 자료'

우리는 이러한 진주아이쿱생협이 추진한 생활정치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우리가 생활정치운동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사례 중 진주아이쿱생협에 주목한 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진주가 비수도권 지역 중 하나라는 점이다. 수도권 중심의 지역발전에 따른 지역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며 정치영역과 사회운동의 경우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생활정치에 관한 담론을 비롯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책도 서울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자체장이 추구하는 목적이 생활정치의 측면과 닿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운동적 자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을 증가시켜준다. 따라서 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운동 사례로 비수도권 지역을 택하게 되었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 중 진주로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전체의 아동 무상급식을 중단시켰으며, 진주의료원 폐쇄도 추진하여 진주지역의 교육·의료적 측면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경남도지사의 정책방향이 한 지역주민의 삶에 급작스럽게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이 과정에서 진주아이쿱생협은 생활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생활정치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주목 받는 생활정치 이슈의 등장과 그에 따른 대응을 포착하기에 진주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지역사례를 선정한 이후, 우리는 진주아이쿱생협이 생활정치의 측면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지역정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총 9명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9명은 진주아이쿱생협 내부의 활동가와 조합원들, 그리고

외부의 진주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우선 진주아이쿱생협에서 '시의회 모니터링단' 운영 등 생활정치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 1명, 진주아이쿱생협에서 주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3명, 직장을 다니는 이유로 아이쿱 매장만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 1명, 직장을 다니지 않지만 생협활동도 적극적이지 않은 조합원 1명을 대상으로 진주아이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진주아이쿱을 둘러싸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심층면접 참가자들을 통해 생활정치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진주아이쿱생협 외부의 시선에서 생활정치운동을 바라보기 위한 시도로 진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했다. 진주의료원 노조활동가 1명, 진주의료원 대책위 활동가 1명, '진주같이(진주 생활정치운동 단체)'[17] 활동가 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이들을 통해 진주아이쿱생협이 진주지역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고 있는지 들으며 입체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했다.

표3. 심층면접 명단[18]

번호	사례	소속	심층면접 일시
1	A	진주아이쿱생협 활동가	2016.04.02.
2	B-1	진주아이쿱생협 조합원(적극 활동층)	2016.01.23.
3	B-2	진주아이쿱생협 조합원(적극 활동층)	2016.01.23.
4	B-3	진주아이쿱생협 조합원(적극 활동층)	2016.01.23.
5	C	직장으로 인해 매장만 이용하는 조합원	2016.02.20.
6	D	직장을 다니지 않지만 활동하지 않는 조합원	2016.02.20.
7	E	진주의료원 노조활동가	2016.01.24.
8	F	진주의료원 대책위 활동가	2016.04.02.
9	G	진주같이 활동가	2016.02.20.

17) 진주같이: 진주지역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삶에 기반한 지역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세워진 시민단체로 정식 명칭은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이다. 현재 진주지역 시민 12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18) 심층면접 참가자들에 대한 자세한 인적정보는 최대한 생략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의 크기가 작아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진주아이쿱생협 생활정치 활성화의 외부적 배경

우리는 진주아이쿱생협이 진행하고 있는 생활정치운동이 활발한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명확한 요인을 찾아 변화정도를 분석하기 보다는 탐색적 연구로서 다양한 배경을 찾아보려고 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진주아이쿱생협의 사례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진주아이쿱에만 해당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보다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 활동을 톺아본다는 생각으로 여러 배경들을 두루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진주지역의 생활정치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외부적 배경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질문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관한 것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시도한 대표적 행정활동으로 '무상급식 폐지'와 '진주의료원 폐쇄'는 진주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운동에 기폭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조합원이기에 먹거리 문제와 의료 복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 부분을 건드렸던 것이다.

진주아이쿱생협의 세 조합원은(B-1,2,3) '아이들이 먹는 밥을 뺏어간다는 것'으로 무상급식 폐지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활동에서도 아이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으로 참여했다. 주목할만한 지점은 처음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참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의료공공성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적극적 참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진주지역을 살펴보면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병원이 밀집해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모든 진주시민이 애용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던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던 여론이 존재했다고 심층면접 참가자들이 답했다. 그러다 메르스 사태의 발생으로 공중보건 문제가 부각되자 진주의료원 폐쇄가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도 태도를 달리하게 된 것이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투표 서명을 받는 활동을 좀 했는데, 공공의료의 개념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전체 5%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별로 접해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진주라는 지역적 한계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힘든 과정이었는데, 5월말에 메르스가 처음 발생을 하고, 이후 막 번지면서, 6월 달 이때는 많은 분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메르스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메르스를 계기로. (E, 인터뷰 2016/1/24)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반발이 즉각적으로 생활정치운동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층면접 참가자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다고 인식할 때 참여의 적극성 정도가 더 달라졌다.

진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세 명의 심층면접에서도 단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정에 대한 반발로 생활정치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이전부터 관련한 활동을 조합원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계기를 맞이했을 때 활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진주지역만의 특색이 진주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운동을 수월하게 만든 가능성을 물었다. 진주의 지역운동이 이전부터 활발했던 측면이 있었기에 진주아이쿱생협의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자 했다.

> … 생협이 지역에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하고 같이 한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 처음 생협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 교류를 통해서 회원을 확대를 하고, 그 분들이 각 동네에서 마을모임이라든지 아는 사람들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 (E, 인터뷰 2016/1/24)

위의 심층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주아이쿱이 활동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진주지역 내의 활동가들을 통해 아이쿱생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진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학교가 많은 편이며, 이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회운동을 시도하면서 아이쿱생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진주같이' 활동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다.

> … 1/3은 아토피가 키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1/3은 시대적 흐름(녹색가치에 대한 요구)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 기존에 원체 단체나 조직 활동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은 아이쿱생협이다 하면 조합원 가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존 토대가 있다고 봐야죠.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죠. … 아무리 토대가 좋아도 결정적인 것은 추진해나가는 분들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죠. (G, 인터뷰 2016/2/20)

그런데 진주같이의 활동가는 아이쿱생협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적 환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점은 볼 때 온전히 지역적 기반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주아이쿱생협을 만들었던 초기의 구성원들이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주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지점을 볼 때, 초기 배경만이 생활정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에 함께 대응해온 진주대책위의 활동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지역적 특성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땐 아이쿱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쿱이 출발하고 10년 만에 3,00

0조합원 수를 이룩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안전한 먹거리만으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발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시했었죠. 보니 다양한 소모임들과 많은 마을단위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튼튼하다 보니 …. (F, 인터뷰 2016/4/2)

우리는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진주아이쿱생협이 시도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접했고 외부적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한 사안들은 진주지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위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생활정치 운동에서 기제가 되기도 했다. 더불어 진주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시민운동적 자원이 진주아이쿱의 초기 형성단계에서 도움을 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부적 배경만으로 진주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운동이 활발해졌다고 말하기에는 진주아이쿱생협만의 내부적 활동이 진주지역의 생활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간과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진주아이쿱생협이 추진해왔던 생활정치운동 사례의 심층적 분석을 시도했다.

5. 진주생활정치 사례: 시의회 모니터링단

5-1) ‘내가 낸 세금 바로알기’ 생활정치 사업의 시작

진주아이쿱생협이 시도한 생활정치운동은 특정 생활정치사업의 틀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방면에 걸쳐서 녹아들어있는 측면이 크다. 대표적으로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강조는 생활정치와 맥이 닿아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하기 위한 행동이나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활동도 일상생활의 가치를 지켜내고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생활정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주아이쿱생협이 추진했던 생활정치 사업인 ‘시의회 모니터링단’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했다. 특정 사안이 발생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갔던 생활정치 사업보다는 진주아이쿱생협만의 독자적 활동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들이 생활정치의 의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기획해나가는지 첫 단계부터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아이쿱생협이 주된 생활정치 사업으로 진행한 활동은 진주시 예산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었다. 진주아이쿱생협은 이 사업을 통해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참관하고, 때로는 직접 초청하여 시정에 관한 이야기도 들으며 생활 속에서의 요구를 전달하는 통로로 만들고자 했다. 또한 시 예산분석을 해봄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배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19] 진주아이쿱생협은 생활정치와 관련한 사업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의정 모니터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 간단하면서도 단시간에 정치의 영역을 느끼게 해주는 소극적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 진주아이쿱생협. 2015. “생활정치 사업 보고서.”

[1] 조합원이 그려가는 생활정치: 진주아이쿱생협의 실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전혀 생활정치 쪽으로 너무 거부 반응, 정치라는 이름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일반주부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 딱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 그게 저는 모니터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회의진행 하는 것들만 봐도, '내 세금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은 엉뚱하게 하고 있구나.', '이쪽에선 질문을 해주어야 하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해왔구나.', 그 사실들을 한 시간만 딱 앉아 있어도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쿱 조합원들이 하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하기에는 의회모니터가 쉬우면서도 간편하고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꼭 필요하고. (A, 인터뷰 2016/4/2)

시의회는 주로 낮에 열리기 때문에 주부가 대다수인 조합원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기에 유리했다는 점도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기존의 시민단체는 주로 상근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지만 진주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산분석에 관한 교육과 모니터링, 이후 보고서 작성을 통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갔다.

표4. 진주아이쿱생협 생활정치 사업내용

	사업명	일시	내용
1	예산학교 강사 양성과정	3월	활동가들이 예산학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강사가 됨
2	찾아가는 예산학교	9~10월	마을모임과 소모임에 찾아가는 예산학교 진행
3	진주시의회 모니터 1차	9월	제17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모니터 진행
4	진주시 2015년 예산분석	11~12월	2015년도 진주시 예산 검토, 분석 및 기자회견
5	진주시의회 모니터 2차	11~12월	제17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모니터 진행

출처: 진주아이쿱생협(2014). "생활정치 사업 보고서."

표5. 진주시의회 모니터 보고

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활동보고
복지산업 상임위 모니터	4.20	진주시의회	학부모 30명 방청 외 다수는 1층 로비에서 대기	복지산업위원회 시의회 모니터(서민자녀교육비지원조례안 부결)
복지산업 위원회 모니터	5.26	진주시의회	학부모 다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추경예산안 통과 반대방청(시비36억여 원 중 15억 2천여만 원 삭감되어 통과됨)
본회의 모니터	5.27	진주시의회	학부모 다수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교육복지카드 지급)을 위해 시비로 편성된 22억 6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인 11억 3천여만 원을 삭감 통과

출처: 진주아이쿱생협(2014). “생활정치 사업 보고서.” 中 일부 재구성.

5-2) 마을모임: 생활정치의 플랫폼

진주아이쿱생협에서는 시의회 모니터링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먼저 이사진을 비롯한 핵심 활동가들이 시 예산 분석과 모니터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하여 배우며 학습회를 진행했다. 이후 조합원들의 개별 모임 등으로 찾아가 생활정치 사업을 알려냈다. 이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식지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전달하였다. 특히 ‘윤소맘’이라는 소식지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 등을 보여주었다.

> … 윤소맘이라는 소식지가 매달 나와요. 시도 있고 안건도 있고. 항상 정치적 안건이 있더라고요. … (D, 인터뷰 2016/2/20)

하지만 소식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시의회 모니터링단 사업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소식지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이 지면의 한계 때문에 충분치 못했고, 조합원들이 일회성 공지로 인식하여 내용에 대해 쉽게 잊어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주아이쿱생협 사무국에서는 전화모니터를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였고 각종 소모임과 마을모임 참석을 통해 생활정치 사업의 일환으로 시의회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진주아이쿱생협 활동가들은 마을모임[20]과 다양한 소모임[21]을 생활정치를 알려내기 위한 연결통로로 인식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 조합원은 마을모임을 통해 먹거리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문제와 진주의료원에 관한 소식을 접하기도 하였으며 시 의회 방청도 참여할 수 있었다. 다른 조합원들도 생활정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마을모임을 언급했고, 조합원으로서 의식이 생기는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 … 의회 방청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마을 모임을 갔는데, 우리가 다음 마을모임을 한 달에 한번 하는데 그걸 전원 의회 방청을 하기로 했어요. (B-3, 인터뷰 2016/1/23)

마을모임은 아이쿱생협의 사업에 대해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간 조합원들 사이에서 모니터링단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참여하는 계기가 형성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조합원 심층면접을 통해서 마을모임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의 정보습득에서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소식지나 홈페이지만을 통해서 아이쿱생협의 활동을 접하는 조합원들과 달리 마을모임을 통해 교육과 토론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같은 공지문자에 대해서도 달리 반응하고 더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 소모임을 하게 되면 좀 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매장에 포스터를 붙여 놓아도 소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보거든요. (B-2, 인터뷰 2016/1/23)

마을모임 이외에도 생활의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위원회나 소모임도 조합원들을 생활정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각종 모임에서 진행하는 생활정치에 관련된 강연이나 세미나는 조합원들의 활동을 다양한 영역으로 더 확장시켜주었다.

> … 저는 정치 문제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위원회 활동을 식품안전위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먹거리 외에 매달 한 달에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우연치 않게 탈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김의준 교수님 강의를 듣다보니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좋은 먹거리를 위해 신경써봤자 오늘 먹은 고등어가 방사능에 오염된 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더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는 거죠. … (B-2, 인터뷰 2016/1/23)

지금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심층면접 과정에서 마을모임의 전과 후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마을모임을 참여하기까지 조합원들이 활동을 주저했다면, 참여 이후 마

20) 마을모임은 거주지역이 비슷한 조합원 사이에 갖는 모임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모여 조합원들 간에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아이쿱생협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장으로 사용된다.
21) 소모임은 마을모임과 비슷한 활동을 진행하면서도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며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을모임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을모임은 정해진 사업과 목적이 있기보다는 참여로 가기까지 고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작동했다. 생활정치사업도 조합원 개개인을 만나서 설명하기 보다는 마을모임이라는 공간으로 찾아가 여러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참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마을모임이 하나의 공론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추동한 것이다.

5-3) 시의회 모니터링단이 가져다준 삶의 변화

진주아이쿱생협이 시의회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시 예산에 대해 분석하면서 변화하는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여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1,045,073,000,000원의 예산 중 0.7%에 해당하는 7,313,000,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주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주시의원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시의회의 일정 등에 참여하여 회의 진행 과정을 방청하자 시의원들의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 … 우리의 변화도 있었지만 시의원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 이분들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레. … 시의원들이 의식을 해요. 그냥 넘어갈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 또 갔더니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달갑지 않았는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 그분들이 자세가 달라졌어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러 오셨구나. …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변화는 바로바로 오는 것 같아요. … (B-3, 인터뷰 2016/1/23)

시의원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자 모니터링 활동에 참가했던 아이쿱생협 조합원들도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 시의회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으로 만들어갔다.

> … 사람들 생각이 매우 달라졌죠. 시의회를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가 안 봤을 때는 시의원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구나 정도였는데 직접 가서 보니 우리 시의 돈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이 없었구나, 시의원장의 자질이 저 정도 밖에 안 되나 등을 느끼고. … 확실히 시민이 참여할 때 그 사람들도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랑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과 다르죠. 그런 면에서 생활정치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B-1, 인터뷰 2016/1/23)

진주시의회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진주시예산이 더욱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바꿔내면서 진주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운동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정치영역에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참여하면서도 일상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발굴했다는 점은 생활정치운동에서의 실천사례로 볼 수 있었다.

[1] 조합원이 그려가는 생활정치: 진주아이쿱생협의 실험

시의회 모니터링단은 진주지역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참가했던 조합원에 더욱 영향을 주었다. 처음 참여할 때 조합원들이 받았던 느낌은 어색함과 민망함이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거듭할수록 '정치'에 대해 친숙해졌으며 시의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 … 전 예전에 정치라는 단어 자체가 싫었어요. 뉴스도 안보고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지 이런 쪽. 복지과에서 하는 거를 가서 보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 진주에 생긴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도 듣고, 사건에 대해서도 듣고 공감이나 직접 나서게 되더라고요. 참여도 많이 하고 싶고. 시각도 달라지고. 요즘에 드는 생각이 최근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냈잖아요. …
>
> … 참석을 안 하시는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유심히 봐요. 어떤 의원은 자기 활동하는 날도 안 나오는데 그 의원은 다른 시민단체들이랑 시민이 예산공고를 하는데 또 참석을 안 하셔서 그때 느낀 게 분명 자기 의제하는 날도 안 오고 그 뒷번에도 시민들이 공부하면서 발표하는 날인데 또 그날도 안 오시니 무슨 배짱으로 이러시는 걸까? … 이제는 시의원들이 저래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예산도 뉴스 듣더라도 하나 더 보게 되죠. 저 돈을 저렇게 쓰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거던데. … (B-3, 인터뷰 2016/1/23)

진주아이쿱생협은 정치에 대해서 자신의 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왔던 조합원들에게 실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체감하게 되었고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한발 떨어져서 뉴스 등의 매체로만 접하던 정치를 직접적 대면을 통해 친숙해질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인 정치인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찾기도 했다.

> … 아예 관심 없다가 열성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냥 놀러 왔다가 활동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저도 약간 그런 경우이구요. 정치적인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경상도에서 컸고 부모님께 세뇌당한 부분이 많았는데 활동하며 '뭐야? 뭐야?'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죠. … 근데 저희는 부부가 둘 다 바뀐 케이스에요. 신랑이 관심 없었는데 제가 알고 계속 주장하니 남편도 바뀌게 되었죠. 가정에도 확실히 영향이 있었죠. (D, 인터뷰 2016/2/20)

조합원들의 삶에 대한 변화는 조합원이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물론 모든 가정에서 가족들이 조합원의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며 함께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조합원의 가족들은 조합원들이 아이쿱생협의 활동에 만족하며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지를 보냈다. 육아와 가사노동에 치중되어 있던 여성조합원들의 삶에 아이쿱생협 활동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생활정치 사업은 정치영역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며 삶의 변화요소로써 조합원들로부터 만족감을 이끌어냈다.

6. 생활정치가 더욱 잘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주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만족감을 표시하며 정치에 대한 인식이 바뀐 조합원들도 생겨났으며, 진주시에 변화를 가져온 지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주아이쿱생협이 시도한 생활정치운동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부족한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이는 비단 진주아이쿱생협에만 요구될 개선지점이라기 보다는 전국의 아이쿱생협이 생활정치를 확산시켜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개선해나가야 할 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정치운동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할 필요성도 존재했다.

6-1)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지역정치

아이쿱생협의 생활정치운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 지역정치가 지역주의로 변질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이다. 좋은 동네에 살기 위해 좋은 동네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정치가 발현한다. 하지만 좋은 동네 만들기가 다른 지역에 대한 배제나 거시적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다면 이전의 지역주의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 퇴행적 지역주의는 다른 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원까지도 끌어오게끔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생활정치로서 비판적 지역주의는 '예산폭탄'이라고 불리는 이득을 위해 작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지역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분석하여 지역 내 토건계층 등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을 비판적 지역주의의 단적인 예로 말할 수 있다. 지역예산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작동되게끔 이끄는 활동이 생활정치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또한 국가적 규모의 중앙정치에 대한 폐해가 지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정치의 활성화가 요구되었지만, 중앙정치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지역정치도 더 큰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던 정치와 사회운동이 미시적 차원의 삶과 괴리되어왔기 때문에 미시민주주의와 지역정치-생활정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지만, 거시적 차원의 문제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지역의 정치와 행정체계와 법적 시스템은 국가 중앙부처나, 입법부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국가단위와 지역, 거시적 차원의 문제와 지역의 미시적 행위자들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아이쿱생협이 생활정치운동 사업을 기획하고자 할 때, 전국적 차원에서 전체 아이쿱생협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을 바꾸기 위해 지역만을 바라본다면 지역을 넘어서는 생협가치의 확산은 바랄 수 없으며, 지역내부에서도 변화의 폭을 더 크게 그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2) 다른 협동조합과 공생관계에 대한 확립과 공동행위의 모색

거시-미시적 연계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아이쿱생협이 생활정치를 확산시켜 가기 위한 활동들은 의도와 다르게 아이쿱생협이 배타적으로 활동을 점유해 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생협사무국과 조합원들의 열성적 활동은 열성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이쿱생협의 활동이 시장에서 한정된 지분을 확보하며 다른 협동조합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전체 협동조합의 규모가 위축되는 '역동성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조직과의 관계 맺음도 중요하나, 협동조합들이 동일한 운영원리와 가치, 상호성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간 협력은 지역에 더 일관되고 의미 있는 변화가 된다. 협동조합간 공동행위는 협동조합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공동행위가 수단이 되면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목적이 되면 협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22] 협동조합의 제 7원칙 중 하나인 협동조합 간 협력에 주목해보더라도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지역 협동조합간의 연대 협력은 필수적이다.

협동조합의 천국이라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방[23]과 캐나다 퀘벡[24]에서도 협동조합 조직간 협력 강화는 중요한 가치이다. 진주아이쿱생협의 연대 활동을 살펴보면, 다양한 생활정치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드러나지만, 협동조합 간 교류는 아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진주에는 '한살림 진주지부', '행복중심 진주생협' 등 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외에도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푸드', '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기본법에 근거한 먹거리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다.[25] 이들과 좀 더 밀접한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른 협동조합과 공생관계로서의 상호 연대 구축과 공동 사업 모색을 위해서는 사무국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향과 조합원들 사이에 교류를 시도하는 방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만 대책위의 형태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역 전체에 확산시키고 많은 지역주민들을 가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공통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업이 상시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각 조합들 간의 조합원들 사이에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협동조합 내부의 소모임이나 마을모임 간의 교류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다.

---

22) Zamagni, S. and Zamagni, V. 2012.『Cooperative Enterprise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송성호 역:『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협동조합기업』). 북돋움. p.75.

23) "[힐링코리아] ③'협동조합의 천국' 伊 에밀리아로마냐주." 세계일보. 2013년8월8일.

24) "신협이 캐나다 퀘벡으로 간 이유는." 세계파이낸스. 2015년7월1일.

25) 협동조합 홈페이지. '협동조합 설립현황.' http://www.coop.go.kr/. (2016.5.12.).

6-3) 개선 불가능의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진단

우리는 조합원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한계지점을 들을 수 있었다. 조합원들은 무조건적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는 활동을 경계하면서 조합원 교육을 통한 질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입 시 조합원 교육의 강화와 이미 가입된 조합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조했다. 조합원이 단순히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한 마트 고객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생활정치에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기제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참여의 강조로 이어지고 대부분의 생협활동이 마을모임을 통해 시작된다는 점에서 마을모임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된다. 이를 통해 마을모임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마을모임의 문제점도 짚어주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자신의 집을 돌아가며 마을모임 장소로 사용해오던 방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모임 유지를 위한 공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을 제공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조합원들의 참여율을 떨어트리는 문제로 직결된다.

> … 마을 모임 자체가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 차례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이라면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섞이면 우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무얼 할지도 모르겠고 … 그래서 다음에 내 차례가 된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C, 인터뷰 2016/2/20)

공간은 사회적 과정 속에서 의미를 달리하며 생산과 재생산을 반복하는 기반이면서도, 사회·정치·경제적 실천의 장소이기도 하다.[26] 마을모임을 위한 주거공간은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고, 변화된 맥락 속에서 마을모임 성사를 위한 공간으로 주거공간이 아닌 또 다른 실천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제시된 문제점들이 이번 심층면접을 통해서 처음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불가능으로 이끌고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6-4) 가사노동 중심적 운영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가족, 특히 아이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생협에 가입한 주부들이 많으며, 생협이 추진하는 사업에 주로 참가하는 조합원들도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주부들이다. 우리는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주부조합원들이

---

26) 최병두. 1999.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를 위한 생활정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 p.82.

육아와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다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신만의 활동을 구축하며 자아실현을 이룬 과정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취미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던 조합원들이 소모임을 만들고 참여하며 기존에 해오던 활동을 이어가게 되어 삶의 활력이 생긴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의 활동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이엄마 친화성'[27]을 장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집에서만 존재하는 엄마가 아닌, 집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자아실현의 측면으로 내세웠다.

> 아이들이 볼 때에도 그런 것을(생협활동) 보면 엄마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대의원도 손만 들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 우리 아이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의원을 하면 자기 엄마이름이 나오면 우리 엄마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엄마로서는 별거 있나요? 내 아이에게 '엄마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 지나치게 활동을 하면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아이쿱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도 애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더 잘 챙기면서 활동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생협 자체가 아이와 함께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B-3, 인터뷰 2016/1/23)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마냥 주부조합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생협이 활용되며 생활정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가사노동에 대해 사적 영역의 전유물로서 한정되는 지점을 벗어나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역할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전부터 담당해오던 여성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생협의 프로그램이 영향을 주었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기존의 인식을 허물기보다는 견고하게 형성되도록 만들었다. 자식의 건강을 우려하며 시작한 협동조합 활동은 대부분 자식과 가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이는 '좋은 엄마 되기'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기존에 생협이 기획해왔던 프로그램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부조합원들에게 육아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생활정치의 의제로 만들어 가는 방향이 아닌, 단순히 가사노동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식의 '주부교실화' 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생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은 의도치 않게 육아와 가사노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통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 과정에서 가사노동이 소홀해지는 것에 대

27) 자녀를 둔 주부조합원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협이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책과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 나타내는 특징을 '아이엄마 친화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육아의 사회화를 말하기보다는, 육아에 종속되는 과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중노동에 투입되는 것과 달리, 아이쿱생협은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아이엄마' 정체성의 유지를 택했다. 이는 사적영역을 공적영역으로 정치화했다기보다는, 공적영역마저도 사적영역을 확대시킨 무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영역, 즉 아이쿱생협의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역할이 주부조합원으로 한정된 상황을 내버려둔 채, 수월성의 측면에서 지원의 방식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생활정치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적영역을 공적영역으로 끌어내어 사회화시키는 기획이 필요하다.[28] 이를 위해 아이쿱생협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조합원들을 위해 가사노동(부담)의 사회화를 생활정치의 의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여성으로서 개인에게, 특히 직장인 여성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생활정치의 의제를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설정하게 되면, 가사영역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직장인 여성조합원들에게 참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란 오직 여성만이 담당해오던 가사노동을 국가의 정책적 차원이나 지역기구를 통해 덜어내는 것, 역할의 변화를 통해 남성도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생협의 활동은 고립된 위치에서 온전히 감당해오던 가사노동을 주부조합원이 됨으로서 함께 짊어진 측면이 있지만 사회화시키지 못한 채 성역할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 때문에 주부조합원들만이 생협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고 가사노동을 함께 공유하는 것조차 버거운 직장인 여성들은 참여하기 힘든 구조였다.

> … 맞벌이를 안 한다면. 하면 못하겠지만. 주부들은 맞벌이하면 저녁에 집 가서 또 일해야 하니 절대 못할걸요. 마을모임도 다 전업주부들 밖에 없고 그래요. (D, 인터뷰 2016/2/20)

위의 심층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협활동이 주부조합원에 맞춰서 운영된다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조합참여는 확대되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생협활동으로 나타나는 의도치 않은 효과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조합의 확장을 방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유연화와 저임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하는 남성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가정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생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획을 통해 전업주부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가정만이 생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을 고칠 수 있다. 또한 주부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도 협동조합활동의 참여가능성을 확대시켜주어 조합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으며, 중산층 지향적 운동이라는 비판을 바꿔낼 수 있다.

---

28) 이현희. 2004. "생협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의 가능성." 『2004 여성학논집』. 21(2): p.138.

7. 결론

지금까지 진주아이쿱생협이 생활정치 사업을 하며 활동해온 궤적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운동에 함께하며 시민생활의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갔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 이외에도, 진주아이쿱생협만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온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시의회 모니터링단을 기획하여 일반 조합원들로 하여금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도록 했고 시에서 책정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정치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있는지 깨달아가며 정치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참여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는 예산을 밝혀내어 바로잡으며, 이러한 활동이 진주시와 자신의 삶을 바꿔준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생활정치운동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갔다. 이들의 활동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었으며, 시민을 시민답게 만드는 기제로서 역할을 해냈다.

그렇다고 해서 진주아이쿱생협의 사례가 생활정치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했다고도 볼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간에 생활정치를 표방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던 시도들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내리기도 힘든 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진주아이쿱생협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생활정치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 그리고 생활정치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네 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언해보았다.

첫째,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지역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을 끌어와 자신의 지역만 잘사는 지역주의가 아닌, 다른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다른 협동조합과 공생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시장영역 안에서 어떤 협동조합이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경쟁만 하게 된다면 생활정치의 확산은커녕, 협동조합의 위기가 동반될 수 있다.

셋째, 개선 불가능의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진단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조언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이전부터 제시되었던 제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지점으로 강조되는 이유는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왜 해결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며 사태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사노동 중심적 운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가사노동의 영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지게 만들고, 역할 규정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여성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직장을 다니며 생협활동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조합원들까지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이쿱생협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시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정치의 영역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아이쿱의 사례가 더

욱 중요하며, 진주아이쿱생협과 같은 시도는 더욱 많아져야 한다. 생활정치를 향한 진주아이쿱생협과 같은 시도들이 누적되고 역사를 만들어갈수록 이에 대해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성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진주아이쿱생협의 사례가 저마다 다른 지역적 특색으로 다른 지역에 고스란히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준거로 남으리라 본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만났던 한 조합원은 생협조합원들에게서 '생협스러운' 기운이 느껴지기에 멀리서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다며 생협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생협스러운' 삶과 가치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고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웃들의 삶도 바꿔내는 생활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아이쿱생협과 한국 사회에 더 큰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길이라 본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서정갑·오문환. 1995. “생활정치 사상의 모색.”『사회과학논집』. 26: pp.1-31.
오재환. 1996. “일상생활의 구조와 생활정치.”『사회조사연구』. 11(1): pp.89-103.
이현희. 2004. “생협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의 가능성.”『2004 여성학논집』. 21(2): pp.111-150.
조대엽. 2014.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현상과인식』. 38(4): pp.131-155.
최병두. 1999.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를 위한 생활정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 pp.81-108.
Giddens, A. 2006.『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권기돈 역:『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Habermas, J. 2006.『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장춘익 역:『의사소통행위이론1, 2』). 나남.
Zamagni, S. and Zamagni, V. 2012.『Cooperative Enterprise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송성호 역:『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협동조합기업』). 북돋움.

[아이쿱생협 제공 문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2016. “2016년 제1차 전국대표자회의 자료집.”

[진주아이쿱생협 제공 문헌]
진주아이쿱생협. 2014. “생활정치 사업 보고서.”
진주아이쿱생협. 2015. “생활정치 사업 보고서.”
진주아이쿱생협. 2016. “2015년 진주iCOOP생협 감사 보고서.”
진주아이쿱생협. 2016. “2016년 4월 정기이사회 자료.”

[웹사이트]
진주아이쿱생협. “5월1주차업무보고(5/2~5/4).” http://coop.jinju.or.kr/. (2015.12.31.).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소개.’ http://coop.jinju.or.kr/. (2016.5.12.).
진주통계정보시스템.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tat.jinju.go.kr/. (2015.12.31.).
협동조합 홈페이지. ‘협동조합 설립현황.’ http://www.coop.go.kr/. (2016.5.12.).

[인터넷 기사]
“생활협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단디뉴스. 2016년3월8일.

“신협이 캐나다 퀘벡으로 간 이유는.” 세계파이낸스. 2015년7월1일.
“[힐링코리아] ③’협동조합의 천국‘ 伊 에밀리아로마냐주.” 세계일보. 2013년8월8일.

[심층면접 자료]
진주아이쿱생협 소속 활동가 A,
진주아이쿱생협 소속 조합원 B-1, B-2, B-3, C, D,
진주의료원 노조 소속 E,
진주의료원 대책위 소속 F,
진주같이 소속 G
를 대상으로 2016년 1월~4월 사이에 진행.

[감사의 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를 위하여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진주아이쿱생협의 여러 활동가분들과 조합원님들, 그리고 진주지역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심층면접을 위한 관계자 소개 및 조정을 도와주신 진주아이쿱생협의 김경순 님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 조합원의 활동 풍경

황지애[1)]

1. 들어가며

아래는 정현종의 시 <섬>[2)]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의 필요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관한 이 연구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인용한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위 시의 '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섬'을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의사소통의 벽으로 보고 '그 섬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벽을 넘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소망과 의지로 본 해석도 있고, '섬'을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 상상 속의 이상적 공간으로 본 해석도 있다.

필자는 '섬'을 당장은 발견도, 해결도 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지만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필요'라 해석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섬에 가고 싶다'는 표현은 공통의 필요를 함께 발견하고 해결하고 싶은 욕구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의 행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지닌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이 담겨 있지 않을까.

사실 이처럼 공통의 필요를 함께 찾고 해결하려는 욕구는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었다. 협동조합 선구자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누구와, 어떻게 협력하며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이러한 협동조합운동사의 연장선상에서, 필자는 경북권역의 두 지역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을 사례로 생협 조합원이 지역주민과 공통의 필요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platform)'[3)]의 역할을 할

---

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2) <섬>은 정현종의 두 번째 시집『나는 별아저씨(1978)』에 수록된 시이다. 시인은 현대 산업 사회 이후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이 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한다(이완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홈페이지 참고)
3) 플랫폼의 뜻은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인데, 작업을 하거나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구조물을 두루 뜻한다. 각 플랫폼에는 기본 기능이 있으며, 부가 기능이 결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차역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게 하는 것인데, 플랫폼에 입점한 매점, 각종 편의시설은 이동의 필요 외에도 승객들이 지닌 다양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일본 이케다(池田) 시 <지역커뮤니티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참고사례로 제시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협동조합을 지역사회의 역사와 다양한 지역주체와의 폭넓은 관계 속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논문 2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명호·이아름(2013)은 국내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이 타 지역의 동종 조직에 비해 높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요인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원주 지역의 장애인 생산공동체인 '행복한 시루봉'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의 지속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헌신해 온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역사로 쌓아 온 신뢰, 호의, 네트워크가 이 두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염찬희(2014)는 캐나다 서스캐처원 지역에서 복수의 협동조합들이 설립, 발전, 대중화되면서 '협동조합적 지역사회'를 형성하게 된 배경을 지역의 경제·정치·사회적 역사와 조건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서스캐처원 지역 농민들의 농민운동 경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사상과 경험, 다양한 결사체 조직 간의 연대는 1920년대에 문을 연 서스캐처원밀생산자협동조합(Saskatchewan Wheat Pool: SWP)을 구심점으로, 지역에서 정유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보험, 농기계제조 등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상호 활성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다. 연구자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망들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 두 논문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나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조직이 아니며, 다양한 지역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조건을 바탕으로 다른 조직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북권역에 있는 대구행복아이쿱생협(이하 대구행복아이쿱)과 포항아이쿱생협(이하 포항아이쿱) 조합원의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때로는 협동조합과 시민단체라는 '조직 대 조직'의 관계 뿐 아니라, 조합원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헌신에 기반하는 인간관계를 통해 활성화되는 데에도 주목할 것이다.

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플랫폼을 넓게 정의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본 기능과 부가 기능을 지니면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15년 11월 말부터 구상을 시작하여 2016년 5월에 마무리하였다. 연구 초반에는 대구와 포항 각각 하루씩 현장을 방문하였고, 총 6건의 대면인터뷰와 2건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문헌조사와 정기 월례 연구모임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먼저 현장방문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조합원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진행했다. 대구행복아이쿱은 <신생조합 준비위원회>에, 포항아이쿱은 <대의원 만남의 날>에 각각 참관하였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토론과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활동에 관한 조합원들의 생각과 활동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터뷰는 각 생협의 활동가와 먼저 진행한 후, 이 활동가로부터 소속 생협의 활동가나, 함께 활동한 지역 민간단체 관계자 3명을 소개받아 2명과는 대면인터뷰를, 1명과는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조합 내·외부의 시선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뷰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표1. 인터뷰 관련 정보

인터뷰 참여자	소속/직위	인터뷰 형식	인터뷰 일시
A	대구행복아이쿱 임원	대면	2015.12.15.
B	대구행복아이쿱 前활동가	전화	2016.02.22.
C	대구여성광장 임원	대면	2016.01.21.
D	대구 지역아동센터 임원	대면	2016.01.21.
E	포항아이쿱 임원	대면	2015.12.10.
F	포항환경운동연합 임원	대면	2016.01.20.
G	포항급식연대 임원	전화	2016.02.25.
H	포항 지역아동센터 임원	대면	2016.01.20.

문헌조사 자료로는 대구행복아이쿱과 포항아이쿱의 2015년, 2016년 총회자료집과 홈페이지 게시글을 참고하였다. 자료를 통해 각 생협의 최신현황과 인터뷰에서 접한 활동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활동가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다.

월례 연구모임에서는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내용을 보완해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작성하면서 두 생협 조합원의 지역 활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생협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연대 경험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였음을 밝힌다.

4. 연구내용

4-1) 대구행복아이쿱 조합원의 활동 풍경

(4-1-1) 대구행복아이쿱 기본현황

대구행복아이쿱은 2003년 대구생협에서 분할된 '달서행복생협'으로 출발하였으며, 2007년 공식 창립했다. 대구행복아이쿱의 2015년 기본현황과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표2. 2015년 대구행복아이쿱 기본현황

조합원 현황 및 활동		사업 및 매장/사무국 운영	
조합원	5,738명	총매출액	약 135.2억 원
- 조합비조합원	5,151명	- 매장공급액	약 115.5억 원
- 책임출자금 참여	184명	- 가정공급액	약 19.6억 원
- 수매선수금 참여	35%	매장	4개
활동가	69명	매장 직원	4-50여명
마을모임	52개	사무국 직원	4명
동아리	32개	나눔활동비	약 678만원

출처: 2016년 대구행복아이쿱 총회자료집

그림1. 대구행복아이쿱 조직도

출처: 대구행복아이쿱 홈페이지

2015년 대구행복아이쿱은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사업에서는 4번째 매장인 월배점을 개설하였으며, 수성구와 경산지역 활동가들이 대구지역의 4번째 신생조합인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의 창립을 지원하였다[4]. 대구행복아이쿱은 구미, 대구, 대구참누리 지역아이쿱 생협과의 공동 출자를 바탕으로 매장경영 부담을 덜고 조합원 활동에 집중하기 위하여 매장운영회사 (주)쿱스토어대구를 설립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활동에서는 <예외 없는 식품 완전 표시제>에 참여했으며,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다이빙벨 감독과의 만남과 <세월호 600일, 대구시민 기억과 다짐의 날>을 지원, 동참하였다. 이 밖에 영덕 원전유치반대 주민투표 독려 지원활동을 했으며, 마을 축제, 대구시 사회적연대 박람회에도 참석하였다.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매장수익의 일부를 지역 이웃과 나누었으며, 지역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4-1-2) 대구행복아이쿱 조합원의 활동 사례

대구행복아이쿱 조합원의 활동은 크게 3개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구여성광장[5]과의 관계이다. 대구여성광장 임원 C는 처음에 대구여성광장과 대구행복아이쿱 간에 '조직 대 조직'의 연결고리는 없었지만, 대구행복아이쿱의 강좌를 대구여성광장 회원이 개인적으로 들으러 가고, 반대로 대구여성광장의 강좌를 대구행복아이쿱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들으러 가면서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전했다. 대구행복아이쿱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이라 대구여성광장 회원과 공감대를 쌓기가 더욱 쉽기도 했다. 두 조직의 회원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의 "조직 안을 더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계를 다져나갔고,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먼저 두 조직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서명운동에 매주 함께 참여하였고, 이후 2015년 11월 평화콘서트에 함께했다. C는 콘서트 두 달 전쯤부터 사람을 모으고 협동하는 과정이 대구행복아이쿱, 여성광장, 노동세상, 여성광장, 정의당 달서구(여성광장과 연계된 단체로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음)' 등의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합창단원들은 2015년 12월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송년회에서 야외 공연을 하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감동을 느끼고, 주인공이 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또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세월호 1주기에 다이빙벨 상영회를 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대구행복아이쿱에서는 영화 판권 구매를, 다른 한 조직은 현수막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단체끼리 품앗이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대활동 경험 이후 대구행복아이쿱 조합원과 대구여성광장 간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서로가 서로의 회원이 되기도 했고, 대구여성광장 회원이 대구행복아이쿱 마을모임에서 타로 상담을 하거나, 월례 성교육 강좌를 열기도 했다. C는 이러한 구성원 간 교류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4)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은 2016년 4월 29일 법인 창립함.

5) 대구여성광장은 '여성의 내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여성의 힘으로 성평등한 세상과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창립한 생활, 문화, 배움의 여성 공동체로 기획사업(강좌, 역사기행, 우리동네 평화축제 등), 회원사업(책모임, 바느질모임, 영화감상모임 등의 동아리 및 회원모임 등), 부설기관 사업(북카페 공중그네, 성교육센터)을 운영한다(대구여성광장 홈페이지 참고)

[2]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 조합원의 활동 풍경

대구여성광장에 타로상담가,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대구행복아이쿱생협에는 사람이 많은 만큼 얼마나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런 인적 자원들이 교류하면 외부 강사를 비싼 강의료를 책정해서 섭외하지 않고도 주민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죠.

덧붙여, C는 회원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단체 간 교류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활동의 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로 손을 잡고 판을 만드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보수적인 지역 정치 환경에 갑갑함을 느꼈던 단체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만나는 계기들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동네가 변화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C는 활동을 계속할 힘을 얻는다고 밝혔다. 대구행복아이쿱의 한 활동가는 활동 과정에서 한 단체와 다른 단체를 연결하는 "디딤돌"이 되는 구성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살펴 볼 관계는 대구행복아이쿱의 식생활교육팀과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의 관계이다. 대구자연과학고는 1910년 '대구공립농림학교'로 창립한 농생명 산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6]로, 학교 교육의 취지가 생협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식생활교육팀의 조합원들은 아이쿱 조합원이었던 이 학교 선생님의 의뢰로 처음으로 학교에 직접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으며[7], 약 4개월 동안 총 50강의 강의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이론 수업(15분), 만들기 활동(25분)으로 각 강의를 정성들여 준비했다. 예를 들어 우리밀 강의에서는 우리밀의 특성, 우리밀과 수입밀의 비교를 이론으로 전달한 수, 우리밀샌드위치 만들기 활동을 함께했다. B는 조합원 간의 협동과 외부 단체의 도움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선 팀원들끼리는 월 1회 학습회를 통해 식생활 관련 책을 읽고 단원별로 요약하거나 방송자료를 함께 보았고, 직접 요리실습도 했다. 강의 내용은 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8]에서 받았던 식생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고, 강의에서 만난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강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B는 강의를 통해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원래는 주로 대구행복아이쿱 활동가들끼리만 친분이 있었는데, 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교육에 다녀오고 나니까 같이 교육을 받았던 안심협동조합, 참누리생협, 한살림생협 등 다양

6)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는 학생 797명, 교직원 96명이며, 학년당 9학급씩 다음 6개 학과가 있다: 응용화훼과(2학급), 생물산업기계과(1학급), 바이오식품과(2학급), 생태조경과(2학급), 식품유통관리과(1학급), 생물과학과(1학급)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7) 원래는 초·중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생협에 와서 강의를 듣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한다.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 생협의 조리공간을 활용한 것이다.

8) 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생태계의 보전, 농어업·농어촌의 활성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배려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창립한 기관이다. 지역식생활교육, 활동가와 교사,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농어촌체험학교, 채소과일많이먹기캠페인, 청소년생태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는 대구행복아이쿱생협, 대구한살림, 안심협동조합, 협동조합곰네들 등 총 12개이다(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참고)

한 그룹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생협과 우리 생협이) 이런 것은 비슷하네, 이런 것은 차이가 있네? 같은 재료인데도 이런 재료는 이런 방식으로 만드네? 하면서 색다른 방법을 알 수 있었고, 반가웠죠. 실습을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연계가 돼서 초청 강의를 하기도 했구요.

이처럼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같은 주제로 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들과 협동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스스로 노하우를 개발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간다. 특히 위 사례처럼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단체와 협력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빠르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향후 식생활교육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관계는 대구행복아이쿱과 도원동지역아동센터[9]와의 관계이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과 후원으로 운영되는데,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 대구행복아이쿱 이사회는 조합원이자 센터장인 D의 요청으로 현재 빵 등의 간식류를 후원하고 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생협이 지역아동센터와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2) 포항아이쿱 조합원의 활동 풍경

(4-2-1) 포항아이쿱 기본현황

포항아이쿱은 2002년 결성된 준비위원회를 거쳐 2004년 임의단체 간 창립총회로 문을 열었다. 2015년 포항아이쿱의 기본현황과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표3. 2015년 포항아이쿱 기본현황

조합원 현황 및 활동		사업 및 매장/사무국 운영	
조합원	4,633명	총매출액	약 100.3억 원
- 조합비조합원	3,839명	- 매장공급액	약 90.2억 원
- 책임출자금 참여	104명	- 가정공급액	약 10.1억 원
- 수매선수금 참여	1,297명(33.2%)	매장	3개
활동가	70명	매장 직원	51명
마을모임	24개	사무국 직원	4명
동아리	22개	나눔활동비	1,199만원

출처: 2016년 포항아이쿱 총회자료집

9) 도원동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권리 및 유익 도모'를 목적으로 2009년 창립하였으며, 교육,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원동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 참고)

그림2. 포항아이쿱 조직도

출처: 포항아이쿱 홈페이지

2015년 포항아이쿱은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사업에서는 기존의 이동점, 두호점에 더하여 3번째 매장인 장량점을 개설함으로써 매출 100억 시대를 열었다. 또한, 경주지역위원회 활동가의 황성점 매장 개설 활동을 포항이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다음으로 활동에서는 전국단위 캠페인인 <예외 없는 식품 완전 표시제>를 포항시민에게 적극 알렸으며, 매장을 통해 1,5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였고 1,300여만 원의 펀딩자금을 조성하였다.

포항아이쿱은 경주 지역 조합원의 자치활동과 매장사업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조직분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아이쿱은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포항 인근의 영덕원전건설 찬반주민투표에 동참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시민연대에 참여하였으며, 매장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급식봉사, 물품꾸러미 증정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4-2-2) 포항아이쿱 조합원의 활동 사례

포항아이쿱 조합원의 활동은 크게 3개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포항아이쿱과 포항환경운동연합[10]과의 관계이다. 포항아이쿱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0)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시민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환경교육운동과 홍보사업을 목적으로 1999년 문을 열었다. 주요사업은 회원조직화사업(회원위원회 구성, 가족영화제상영 등), 지역현안사업(포항, 경북

2006년 한미FTA 반대를 위한 지역 차원의 캠페인,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시작으로 함께 활동해왔으며, 2014년에는 포항시 남구 통합정수장 설립 반대운동에도 함께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임원 F는 전국 최초로 정수장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려 했던 수도민영화의 움직임을 소수 단체들의 힘으로 백지화시킨 데 대해 참여자들이 느낀 보람이 컸다고 전했다.

연구자는 생협 조합원들이 어떻게 안전한 먹거리라는 필요를 충족하는 데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연대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궁금해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포항아이쿱 임원 E는 전력수급문제, 원전 건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등의 이슈를 환경오염, 방사능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의 문제로 쉽게 풀어서 조합원과 공유하고, 전문가 초청강의, 마을 모임에서의 공유로 조합원들의 관심사가 확대된다고 답했다. 최근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화두가 던져졌을 때 이야기가 퍼지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임원 F는 조합원들이 여러 문제 간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관심사를 넓히게 되는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단체들끼리) 서로 설명하고, 제안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역 문제가 우리 모두의 건강, 환경, 먹거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연관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꼭 자기단체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문제, 시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쿱이 너무 여기저기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조합원도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F는 지역 사안에 대한 전문 정보를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대응행동 과정에서 공감하며 알게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안에 대한 참여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아이쿱은 서로 공통 이슈를 많이 지닌 조직이다. 친환경·유기농산물생산소비체계 구축과 관련된 생협의 지향과 환경보호에 관한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지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일부 회원 및 직원이 포항아이쿱 조합원이기도 하고, 포항아이쿱조합원이 포항환경운동연합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F는 그간 포항아이쿱과 주로 기업의 불공정한 행동에 대응하는 이슈 파이팅 문제로 연대해 왔는데, 다른 쪽으로도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두 단체 간 관계가 깊어진 사례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활동과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2가지가 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스코가 2015년 5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비용절감을 위해 설립하기로 계획한 시설이다. 포항은 청정연료사용지역이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은 현행법에 위배된다. 이에 포스코는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11월에 정부에 규제완화를 청원하고 연료변경신청을 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아이쿱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서명운동이 통·반장과 하청업체를 동원한 편파적인 여론 몰이임을 밝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및 비전 제시), 연대사업(지역시민단체와의 연대, 지역시민운동 활성화)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참고)

냈다. 포스코와 연관된 이해관계가 시의회, 협력업체, 연관업체까지 공공연히 뻗어 있는 삭막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음으로 영덕 핵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포항 시민단체들과 전국핵발전소반대전국시민연합 연대체 등이 함께 추진한 이 활동에서 포항아이쿱의 탈핵동아리 구성원들은 주민투표를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했다. 그간의 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으며, 꼭두새벽부터 이어지는 활동에도 각자의 시간을 쪼개어 활동에 참여했다. 포항아이쿱 이사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년 11월 10-11일 이틀 동안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는 놀라웠다. 영덕군민 총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10,274명(97.1%)이 영덕 핵발전소 건립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투표율은 보궐선거 평균 투표율보다 3배 높은 60.3%에 이르렀다. F는 준비, 홍보, 운영, 결과 정리 등의 모든 활동을 주민들이 "발품을 팔아" 준비한 투표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에 추진위원들이 "진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뭉클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비록 주민투표 결과가 정책이나 제도권에 정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전히 민간의 힘으로 이루어 낸 성과였다. 참여자들은 반대 목소리로 일갈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긴 줄을 서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보며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겼다고 한다.

두 번째로 살펴 볼 관계는 포항아이쿱과 포항급식연대[11]와의 관계이다. 포항급식연대는 경북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다. 예산 확보는 쉽지 않았는데,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자 하는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포항아이쿱 활동가들은 캠페인,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여 직접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다음은 당시 활동에 대한 G의 경험담이다.

>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포항아이쿱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도 함께했어요. 서울이랑 다르게 포항은 아침에 청소년들이 학교에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등교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날을 잡아서 아침밥 먹고 등교하자는 말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떡도 나누어주고, 아침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홍보도 했어요. 아이쿱은 조합원이 많고, 활동가가 많은 단체인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활동에서 지역사회에서 여론력이 커요.

한편, 포항아이쿱의 모든 조합원이 친환경무상급식에 같은 정도로 동의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G는 조합원 중에는 친환경급식에는 동의하나 무상급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다면서, 조합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

11) 포항급식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조례 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포항시 초중고등학생 및 유아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 급식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공동 대응을 위한 포항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의 연대모임'으로 2013년 창립하였다. (포항급식연대 홈페이지 참고)

이러한 의견차로 인해 때론 조합에서 긴장감이 조성될 때도 있으며, 조합원들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활동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항아이쿱과 포항바다솔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센터는 2005년 지역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진 포항여성회 활동가들이 지역 공부방 형태로 시작한 곳으로, 2008년에는 급식 문제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로 시스템을 전환하였다. 센터 임원 H는 지역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온 포항여성회 활동가이다. H는 민주화 관련 활동 과정에서 포항아이쿱 활동가들을 알게 되었는데, 보수적인 지역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해오다보니,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역 이슈가 생길 때에는 서로 자연스레 연대를 제안해왔고, 따라서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끼리는 "얼키설키 엮여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즉, 이들은 대부분 서로가 서로의 회원인 "다중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H는 포항에는 정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지역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낮고, 때로는 활동이 소수 단체들끼리의 메아리로만 남는 것 같을 때는 힘이 들지만 다중멤버십에 속한 단체들 간 연대에서 희망을 느낀다고 전했다.

현재 포항바다솔지역아동센터는 포항아이쿱으로부터 베이커리 류의 간식과 연 1회 식품안전교육을 지원받고 있다. 원래 이 센터는 대부분의 식재료를 생협 식재료로 사용하다가, 상근 선생님들의 노동환경과 노동량(요리-배식-정리 등)이 과중되면서 단체급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였다. H는 전환 전후로 계속 직간접적으로 생협을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다른 지역아동센터 임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생협을 알리거나 생협 식재료를 홍보하고, 음료수 등을 생협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의 아이들은 두호동 생협 매장에서 직접 장보기 활동을 하기도 했다. H는 향후 생협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활동과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대구행복아이쿱과 포항아이쿱 조합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조직들과 공통의 필요를 해결하고 연대하거나, 상호 지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조합원과 지역주민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보고, 일본 이케다 시의 <지역커뮤니티추진협의회> 활동을 지역주민 간 협동의 참고사례로서 고찰하며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다.

5-1) 협동조합의 '플랫폼' 역할과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

'플랫폼'을 앞서 정의한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본 기능과 부가 기능을 지니면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장'으로 볼 때, 생협은 소비자조합원에게 윤리적으로 생산된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본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마을모임, 동아리, 강좌 등을 통해 조합원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학습의 욕구, 안전 및 환경 보호의 욕구, 여성의 권리 보장 등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다양한 관심사를 교환하고, 함께 해결하면서 지역의 내발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협동조합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단체 역시 소속 구성원에게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소속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필요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 촉발되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는 개별 조직의 존속을 보장하는 동시에 서로의 지속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지역지성'을 함께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살펴본 사례들처럼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에서 고립된 필요의 섬들에 다리를 놓고 해결해나가는 협동의 풍경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지역을 협동조합적으로 재구성하면서, 필요를 공동으로 발굴, 해결하는 지역의 내발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음은 이 과정에서 생협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C의 의견이다.

> 주민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이윤이 있는 곳에만 몰리는데, 협동조합의 실험이 지역사회 협동에 대한 기본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협동조합 하면 생협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능성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생협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참여라는 경험, 새로운 역할도 하게 되잖아요.

위 의견을 통해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생협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생협 활동 경험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생협의 활동가들이 주위의 시민단체의 역량 있는 활동들과 연대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내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협이라는 플랫폼의 특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협은 내용적으로는 먹거리나 조합원 대부분인 여성과 관련된 이슈와 보다 친근하게 얽힐 수 있는 유인을 많이 갖는다. 생협이라는 플랫폼의 기본 기능이 윤리적으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윤리적인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의 관심사는 먹거리(친환경적 식생활, 무상급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슈와도 결합력이 높다.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과 같이 환경과 안전과 같은 일상적인 이슈와의 결합력도 높은 편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생협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이 농업, 환경에 직결되는 이슈에만 집중하여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자신의 연령대, 취업 여부, 입점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활동의 우선순위를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이에 관한 생협 활동가 A와 E의 이야기이다.

[2]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 조합원의 활동 풍경

어제 마을모임, 동아리 참석여부 문자를 보냈더니 직장맘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달라는 답장이 왔더라구요. 생협에 전업주부들이 많다보니 강의가 오전에 많은데 직장에 다니면 오전 강의를 못 들으니까요. 직장인들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혜택은 다른 조합원에 비해서 못 받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사실 이전에 활동국장으로서 직장인 요리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내용 준비를 활동가 혼자 하니 한계가 있더라구요. 따라서 그런(직장인모임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요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활동가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활동가의 역할을 강사 섭외, 장소 대여 등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판을 까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예전에 황금기획단이 운영될 때에는 활동 안하던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동가가 되는 과정들도 있었어요. 지금 조합원 5천명 중에서 활동가가 57명이라 활동가가 너무 적은데, 기획단 활동을 많이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무대도 만들고 싶어요. 예전에 기타치고 노래하는 활동을 만드니까 조합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구요. 음악동아리 활동을 하면 기타 연습도 하고,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매장 입지지역 특성에 따라서 각 지역 조합원들의 필요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포항에서 전반적으로 남구는 포스코 산업단지가 많고 주거지가 적고, 반대로 북구는 주거지가 많은데요, 조합원 연령대를 보면 남구는 젊은 엄마들이 많고, 북구는 40대 중반이 많아요. 매장 이용 경향을 보면 남구 이동점은 조합원 대부분이 차를 갖고 매장에 오니까 한번 와서 많이 사가고 정육 매출도 높아요. 북구는 일일 방문자 수는 많은데 객단가는 낮아요. 장량은 아이 엄마들이 많아서 이유식, 간식을 많이 찾아요. 활동 수요조사를 하면 남구는 육아나 애들과 같이 하는 활동을 많이 찾고 북구는 중고등학생 자녀 관련 활동을 많이 찾아요.

이렇게 조합원의 필요가 다양하고, 여기에 따라서 활동도 달라지니까 남구와 북구 활동을 차별화하려 하죠. 가입연도에 따라서도 조합원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신규가입자와 가입한지 오래된 사람들을 구분해서 활동이나 모임도 세분화하려 해요. 마을모임에서는 세대별 구성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 동아리나 마을모임을 운영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져서 고민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모임에서 아이 어린 엄마와 아이 다 큰 엄마가 만나면 화제를 유도하기가 어렵고 서로 대화가 재미없어지기도 해요. 자녀 연령에 따라 화제가 아예 다르니까요. 아이 어린 엄마는 아이가 다 큰 엄마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화제에 집중할 동료를 만들 수 있는 큰언니모임도 새로 기획하고 싶어요.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관심사와 필요는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생협이 이처럼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임원 G와 H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2]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 조합원의 활동 풍경

아이쿱에서 이미 동아리, 마을모임 등 조합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슈에 대해 일반 조합원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생협 활동에 보다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활동가들이 활동에 대한 무게감(부담감)도 많이 지니고 있는데, 앞으로 젊은 활동가들도 많이 나왔으면 하구요.

생협이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생협이 자리 잡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지역사회에 잘 알려내고 오가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면서, 주민과 가까운 생협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더 멀리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활동이 생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위 의견들의 핵심은 활동가들이 활동가가 아닌 일반 조합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면서 고립된 또 다른 필요들을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활동가가 여러 조합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과 손잡고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섬'들을 새로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고립된 '섬'들을 발굴하고, 다리를 놓는 과정은 여느 단체 활동가들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F와 H는 지역 이슈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며 느꼈던 좌절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활동하다가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항상 '우리끼리 뿐이야'라는 생각으로 힘 빠지고, 기자회견하고 돌아서면 허탈하고... 하지만 이런 계기로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우리 회원이나 아이쿱 조합원들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하면서 불공정한 지역 사안에 같이 분개하는 것을 보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큰 위안이 돼요.

우리는 거의 늘 실패하고, 턱도 없이 좌절하는 경험을 해왔다고 볼 수 있죠. 여성단체 세력화 등은 떨쳐 일어나서 하겠다는 개인의 의지가 없는 이상 필요한 활동이 있어도 잘 되기가 어려운 것 같구요. 안할 수 없어서 하긴 하지만 크게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에서 소수이고,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색깔과 목소리를 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위 의견처럼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줄 알았던 자신의 필요를 함께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서 심리적 위안을 얻고, 그 위안으로 다시금 '접점'을 만드는 원동력을 찾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이쿱 조합원들의 마을모임과 동아리 활동의 '작지만 큰'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모이고, 모임 간의 연계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활동을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필자는 역시 생협이라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서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구체적인 상부상조의 경험을 하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구체화하고, 다른 조직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터득하는 데 주목한다. 조합원들은 생협을 통해 관심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지역주민을 만나고, 그 주민이 아는 다른 주민을 만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협동이 또 다른 협동을 낳는 '연쇄적인 협동'의 경험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은 협동은 생협이 자리한 지역사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활동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 지역생협 조합원들의 협동 경험은 다른 생협, 다른 지역으로도 '메아리'가 되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한 활동가는 대전에서 열린 연합회의 행사에 다녀온 뒤 활동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다른 지역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활동거리를 구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이러한 실천들이 바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디딤돌이 아닐까. 앞으로 조합원과 지역주민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협동의 경험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5-2) 참고사례: 일본 이케다 시 <지역커뮤니티추진협의회>의 활동[12)]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역에서 고립된 '섬'을 발견하고 주민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일본 이케다 시의 <지역커뮤니티추진협의회>의 활동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된다.

이케다 시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07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13)]. 주민참여예산제란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행정기관 중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의 의견으로 보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의 의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자치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민, 시민단체가 협업하고, 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민관 협동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케다 시는 우선 전체 지역을 11개 초등학교 학군을 단위로 구분하였고, 지역주민, 사업소, 법인, 기타 주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지역커뮤니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대표자와 임원을 선임하고 명칭, 조직, 정관 등을 만들었으며, 시로부터 예산 제안권을 인정받았다. 각 지역 협의회가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담은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지역 전문가나 공모로 선출된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기구에서 계획의 적절성과 공익성을 심사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였다. 추진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시는 지역별로 1,000만 엔 내외를 기준으로, 협의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지원했다.

---

12) 이 부분은 고선규(2011)의 글을 요약, 재구성하여 작성했다.

13) 한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2003년 광주시 북구청이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울산시 동구청과 함께 성과를 나타내 좋은 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 제도가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2011년이다(손희준 2011).

이러한 사업 제안을 통해 행정조직보다 지역 수요에 밝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은 당해 연도 사업 뿐 아니라 중·장기 사업, 인근 커뮤니티와의 공동 사업도 제안할 수 있었다.

협의회가 그간 진행한 사업은 방범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고령자 급식센터 설치, 지역 스포츠센터 정비, 가로등 정비사업, 커뮤니티신문 발행, 교통안전 간판 등으로 다양하다. 모두 주민들의 수요 체감도가 높은 지역밀착형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협의회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효과는 커뮤니티 활성화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상호 협의가 이어지면서 주민 간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시는 협의회가 '지역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의 장'이자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관한 지역분권, 지역 서포터 연수회, 지역커뮤니티 리더 양성 강좌 등을 개설하여 주민교육과 인재 양성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위 사례를 참고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지역주민들과 지역 현안 및 관련 사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내용을 행정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밝은 내일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조합원과 주민들이 논의한 생활 속의 필요들이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로 표출될 날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고선규(2011), “일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와 시민교육”, 『시민교육』 제4호 pp.36-4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손희준(2011),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면 실시에 거는 기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뉴스 레터> 제28호.

신명호·이아름(2013), “원주 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의 효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36(4): 31-58.

염찬희(2014), “협동조합적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조건 탐색: 캐나다 서스캐처원지역 사례를 통해서”, 『한국협동조합연구』 32(3): 151-177.

2015년 대구행복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 자료집

2016년 대구행복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2015년 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8차 정기총회 자료집

2016년 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웹사이트]

대구여성광장 cafe.daum.net/dgwomansquare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www.dns.hs.kr

대구행복아이쿱생협 www.happycoop.co.kr

도원동지역아동센터 www.hjy.kr/biny0718

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www.greentable.or.kr/daegu

이완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www.seelotus.com

포항급식연대 cafe.daum.net/phhappybab

포항바다솔지역아동센터 ion.or.kr/25365/community/notice/list/1

포항환경운동연합 pohang.kfem.or.kr

포항아이쿱생협 www.phcoop.or.kr

[감사의 말]

이 연구는 다양한 분들의 도움 덕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자에게 생협의 활동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소개해주신 대구행복아이쿱생협의 김현숙 활동국장님과 포항아이쿱생협의 박경숙 이사장님, 그리고 서툰 초고를 꼼꼼히 검토해주신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이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생협 매장사업은 지역사회에 무엇을 남기나?
: 대전지역 아이쿱생협[1] 사례연구

정화령[2]

1. 시작하며

생협 사업은 가정공급에서 매장사업 중심으로 변화했다. 아이쿱생협 2015년 사업규모를 보면 전체매출 5,256억 원 중 매장사업 매출이 4,651억 원으로 88% 이상을 차지한다.[3] 2016년 4월 말 현재 아이쿱생협은 전국에 181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월 매출 규모는 약 387억 원 이다. 매장은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생협의 존재를 알려 조합원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이쿱생협은 매장을 통해 지역의 식품안전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는 아이쿱만의 변화가 아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적정한 거래시장 규모를 확보하여 조합 간 중복투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생협들은 매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불편함과 변화된 생활패턴에 대응, 생산과잉물품의 소비문제의 타개책으로 아이쿱보다 앞선 1996년부터 적극성을 띠고 매장사업을 추진하였다[4].(이수현, 2014) 또한 두레생협도 매장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올해 8개 신규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5].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아이쿱생협의 매장사업이 지금까지 양적발전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지역을 대전으로 정한 이유는 역사적 배경과 조합·매장의 규모,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연구[6]의 대상지역 균형을 고려하는 등으로 복합적이다.

매일 4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찾는 아이쿱생협 매장은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처의 역할뿐 아니라 조합의 활동공간이자 교육과 생협 정체성을 홍보하는 복합기능을 하는 장소이다. 사업체로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돈이 순환하게 하며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가 생협 매장과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업체의 근본적인 차이일 것이다.

---

1) 아이쿱생협 내부에서는 대외적으로 조직명은 'iCOOP생협'으로, 지역조합은 '한밭iCOOP생협·대전iCOOP생협'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처나 자료명 외에는 아이쿱이라는 한글명으로, 지역조합은 한밭생협·대전생협으로 표기하였다.
2)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교육부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3) 출처: 2016년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총회자료집
4) 근본 원인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으나, 단순히 소비자의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장을 거점으로 하여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확산시키려는'노력이 있었기에 매장사업이 내부적 설득력을 얻었다.
5) 출처: 2016년 두레생협연합 대의원총회자료집
6)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기념연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경제활동은 지역발전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업체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경제에 기여도는 크지 않다. 전주의 한 백화점의 연간 매출액은 3,200억 원에 달하지만 전체직원 중 정규직은 6.7%에 불과하다. 2015년 2분기동안 지역사회 환원활동에는 39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니 매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7] 대구역시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31곳이나 입점해 있는데, 이들 업체는 매년 3조원의 지역 자금을 서울로 올려 보내면서 지역에 환원하는 비율은 낮다. 대구의 한 백화점은 직원급여이체비율 13%, 지역생산품매입 4,6%, 고용비율 76.1%에 그치고 있고, 직원급여 이체율 0%, 지역민고용비율 55.9%에 불과한 대형아울렛도 있다.[8] 벌어들인 매출은 그 지역에 얼마 머무르지 않고 몇 시간 내에 서울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입점 시 기대하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활동을 하면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자본 동원이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사회 기여에 소홀하다. 위의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 고용창출에도 소극적이며 지역주민은 단지 소비자 중 일부로만 여겨진다. (김기태, 2015)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환경과 소유 구조에서는 지역 소비자가 상품을 사면 살수록 지역의 가치는 수도권,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윤발생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에 주식회사,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9]

그렇다면 실제로 생협 매장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유통업체와 뚜렷하게 다른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포럼 주제인 '좋은 동네'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이쿱 매장이 생기면 그 동네가 좋아지는가?' 또 '아이쿱 매장이 지역사회에 부를 창출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답을 찾고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경제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2015년 12월에는 연구주제와 지역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2016년 1~4월에는 대전지역을 월 2~3회 방문하여 전·현직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작년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하였다. 5월에는 대전지역 아이쿱생협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의 질을 묻는 설문조

7) 전주뉴스 2015. 10. 1 '도내 대형유통업체 지역 상생 외면'
8) 경북매일 2013. 08. 23 오피니언 칼럼 '대형 유통업체 현지법인화 당연'
9) 정원각(2009)

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했다.

인터뷰로 부족한 내용이나, 정확한 수치 확인을 위해 총회자료집, 내부 보고문건, (매출)전산프로그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3. 본 연구에서 개념정리

3-1) 새로운 부(富)의 개념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부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예언자로도 불리는 아담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지역의 토지, 노동의 연간 생산물 전체를 나타내는 총 수입의 개념으로 부(wealth)를 정의했고 주류경제학에서 그 개념은 지금까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10]. 이는 당시에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매우 선구적이며, 시장경제나 불평등을 정의하는데도 적합하고 논리적인 개념이었다. 최근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이해하기》에서 개인·가구·가족 소유의 자산(토지, 은행, 예금, 임대가능 재산, 주식과 채권, 특허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건강상태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가치 있는 물질적 소유물, 또는 자원의 풍요로움이라는 공통된 내용이 있으나, 국가 별로 개념의 차이가 있어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11] 자연인으로 살아가며 얻는 풍요로움을 물질적으로만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좀 더 시야를 넓혀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한 욕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목적을 완성함으로 좋은 삶을 달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욕망은 올바른 목표를 가리켜야 하며, 그 때야 비로소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에서는 쾌락이나 끝없는 욕구를 악덕으로 여기고 단순한 매개체인 화폐를 삶의 구체적 목표로 여기는 것을 거침없이 비난했다. 사람들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12] 하지만 현재 화폐는 목적 그 자체가 되었고, 심지어 돈에 대한 욕구를 활력이라 여기기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돈'이 떠오르는 이유이다. 하지만 공동선을 거스르지 않고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로버트 스키델스키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에서 자본주의로 인해 경제가 점점 화폐화(monetizin

---

10) 『자본주의 이해하기』에 정리된 내용 참고

11) 일본어 홈페이지(https://ja.wikipedia.org/wiki/%E5%AF%8C)에 명확한 개념의 일반적 합의가 되어있지 않으며, 관념적이고 주관적이라 표기됨. 영문 홈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Wealth)는 UN이 자연자본(땅, 숲, 화석 연료, 미네랄 등)과 인적자본(교육 및 기술)도 포함한다고 표기함

12) 네이버 열린연단 2015 오늘을 성찰하는 고전읽기 강연 시리즈 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조대호 연세대 철학과교수 강의록 참고 (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79129&rid=2888#literature_contents)

g) 되면서 좋은 삶의 개념이 희미하게 소멸되어 가며,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상대성 목표만을 가지게 되어 좋은 삶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설명했다.

홍기빈은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에서 돈벌이만을 위한 경제관념이 아닌, 돈을 수단으로 하지만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를 강조했다. 거기에서 '부'라는 것은 생애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무형 수단이며, 인간의 잠재력을 풍부하게 개발할 수 있는 무엇이라 정리했다. 이런 논의들을 참고하면 지역사회에서 생협이 창출하는 부의 가치를 GDP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다면 그 가치의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할 점은 부를 창출하는 주체에 관해서이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은 은퇴하거나 직장에 속하지 못한 남성세대주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기존에 개발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인건비와 유통마진을 취하는 형태가 많다. 자영업이 성공하면 회사를 차려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CEO가 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대부분 남성의 역할이었다. 이에 반해 생협은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다수의 주부들이 스스로 자본을 모아서 참여하고, 사업체를 일으켜서 직접 경영을 하거나 위탁한다. 위탁하는 대상 역시 주부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지역주민이고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나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2) 좋은 동네

'좋은 상태'는 행복감과 연결된다. 행복은 흔히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이해되며 심리적으로 접근한다. 조금 더 나아가 삶에 대한 만족이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얻어지는 감정이다. 좀 더 구체화 하여 브루노 S 프라이는 행복경제학에서 이 좋음과 즐거움을 '안녕감'으로 정의하여 측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스털린의 행복역설[13]에서 알 수 있듯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의 지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업,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민주주의에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역사회가 안녕감을 느끼게 하는지 '좋은 동네'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있다. OECD는 지역의 삶의 질(Region Wellbeing)을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한다.[14] 그 지표는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부분에서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의 크게 9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행복지수인 'Better Life Init

13) 1974년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논문 '경제성장이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가?'에 실린 내용으로, 많은 나라의 행복도와 국민총생산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GDP가 꾸준히 상승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② 사회 전체 소득과는 상관없이 그 사회 안에서 소득 상위층은 행복도가 높고, 소득 하위층은 행복도가 낮다.(소득에 따른 행복도는 상대적이라는 결론) ③ GDP가 15,000달러가 넘어가면 국가 간 행복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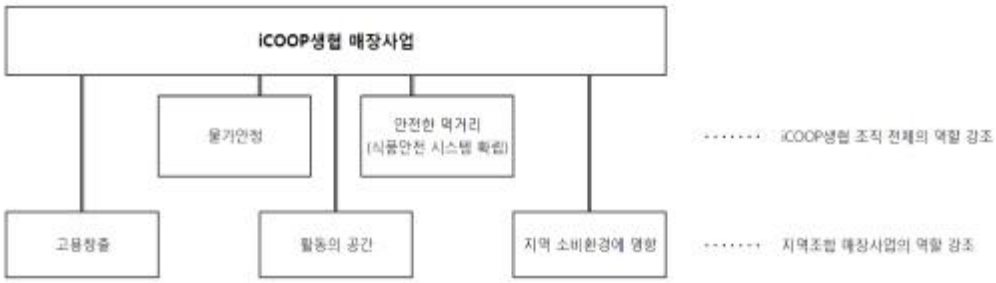
14) RWB

iative)조사도 있는데 RWB의 항목들 외에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친척, 친구나 이웃이 있는지?'(공동체), '규제도입 시 합의과정에 대한 공개성 및 투명성 정보', '투표참여율'(시민참여), '삶에 대한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등이 포함된다.(변미리, 2015) 이러한 지표의 기준이 충족되는 곳으로 좋은 동네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자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경제·문화자본 외에 지역에서의 네트워크나 공동규범 및 상호신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인 대전지역은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연구도 있으며 (정선기 외 2명, 2015) 이는 사회자본이 축적되는데 양호한 요소이다. 이러한 '안녕감'과 '사회자본'을 높이는 요건들이 갖추어진 지역을 좋은 동네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정리한 개념을 통해 생협 매장이 지역의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좋은 동네를 만드는가에 대해 <그림 1>의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1. 매장사업의 효과들[15)]



아이쿱 매장사업은 지역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전제 하에, 효과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보았다. 그 중 식품의 가격안정이나 식품안전 시스템 확립은 아이쿱생협이 연합회 차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매장으로 인해 고용이 창출되고 활동 공간이 생기며 지역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각 지역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지점이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15) 필자 작성

4. 대전지역의 아이쿱생협

4-1) 연혁[16)]

	한밭생협	대전생협
1988. 6	살림의 집 개관	
1990. 6. 28	한밭살림소비자협동조합 창립 (93년 3월, 한밭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1997. 9	21세기생협연대 조직	
1999. 11. 22	한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 창립총회	
2009. 5. 19	자연드림 한밭생협점(둔산점) 오픈	
2009. 11. 5		5일 유성생협(준)발족식
2009. 11. 18		자연드림 노은점(유성생협지정매장) 오픈
2010. 4. 3		대전생협 법인창립총회
2010. 7. 1		자연드림 대전생협 전민점 오픈
2010. 6. 9	제2매장 자연드림 서대전점 오픈	
2010. 11. 25	제3매장 자연드림 월평점 오픈	
2011. 10. 24	둔산점 이전	
2012. 4. 10	한밭센터 개관식	
2012. 10. 17		대전센터 개관 및 자연드림 반석점 오픈
2013. 5. 15	자연드림 송촌점 오픈	
2015. 6	쿱스토어한밭 설립. 매장사업 분리	
2015. 8. 20		전민점 이전
2015. 10		유성노은점 이전, 비어락 오픈
2015. 10. 29	자연드림 서대전점 확장오픈	
2016		쿱스토어대전 설립. 매장사업 분리
2016. 5. 18		도안점 오픈

16) 출처: 한밭생협, 대전생협 2016년 총회자료집 참고하여 필자 작성

4-2) 2015년 사업현황[17)]

표1. 2015년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지역조합 사업현황

	조합원(조합비) (명)	임원 (명)	직원 수 (명)	매장 수 (개)	매장 이용금액 (원)
한밭생협	8,038(5,796)	이사회 13	6		15,498,677,958
쿱스토어한밭[18)]		경영이사 1	57	4	
대전생협	7,150(5,639)	이사회 8	매장 36 매장 외 8	2	8,981,823,794
합계	15,188(11,435)	22	107	6	24,480,501,752

4-3) 대전 지역이 가지는 의미

대전은 아이쿱생협을 처음 시작한 6개 지역조합 중 한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당시 한밭생협 외에는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당시 6개 조합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탄탄한 조합이었기 때문에 이후 아이쿱생협이 전국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데도 간접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아이쿱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만큼 도심지역 중 가장 조합원 확대가 활발한 지역이고 그만큼 아이쿱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한밭생협과 대전생협이 1매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임대료나 재계약 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어려움을 조합원의 힘으로 극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는 점이다.[19)] 도심지역에 센터를 두 군데 세우고 매장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던 원동력은 초기 활동가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그로인한 조합원 간 신뢰가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진경희 한밭생협 전 이사장) (이사장직을 수락한 계기)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이 있었는데 몇 억인지 명확하지도 않았고, 당시 맡을 사람이 없었는데 양심상 넘길 수가 있어야지.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가장 힘들었던 순간) 조합비 제도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25~30%씩 받던 마진을 포기할 때 시간차가 있었어요. 조합비를 낼 사람들이 새로 들어올 때 까지 운영비는 없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빈 시간과 빈 돈을 채워

17) 출처: 한밭생협, 대전생협 2016년 총회자료집 참고하여 필자 작성

18) 한밭생협은 2015년에 매장전문자회사 쿱스토어한밭을 설립하여 한밭생협의 매장 4개를 자회사에서 인수하여 운영 중. 대전생협은 2016년 자회사 쿱스토어대전을 설립하였으나 원고작성 현재 자회사로 양도한 매장은 없음. 또한 한밭·대전생협과 매장전문 자회사가 운영하는 매장 외에 개인매장이 있음 (자연드림 유성노은점)

19) 한밭생협의 1매장 이전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추가 설명함. 대전생협은 1매장(전민점)이 5년 영업을 마치고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스타벅스가 입점하였음

넣어야 하는데, 몇 달이 걸리니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이사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죠. 당시 이사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조합비가 걷히면 갚아가자고 했는데, 결국 나 혼자 남았죠. … 당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6~7천 밖에 안됐는데 다행히 한밭생협은 그 돈으로 위기를 넘겼어요. 투철한 사명감이나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밖에 없겠다 싶은 책임감이 들어서. (퇴임한 연합조직의)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랬어요.

(인터뷰-신현숙 대전생협 전 이사장) 1매장 때는 자금을 모으는 게 힘들었어요. 4억 겨우 모았는데, 2매장 때는 1인당 3천 만 원 한도가 있었는데도 2시간 만에 마감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자가 높다고 해서 아무데나 돈을 맡기지는 않는데 아이쿱 브랜드 파워가 높아진 게 제일 크죠. 만약 브랜드가 떨어지면 다시 돈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 협동조합 간 연대해서 사업연합회를 만들고 하는 게 크게 기여했죠. 진경희회장님 얘기 들으면서 조합원들 많이 놀랐고...

4-4) 매출 흐름

매장이 조합의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매장오픈 시기와 년도 별 총 공급액을 정리했다. 4개 매장이 오픈하면서 온라인 가정공급 비율은 10%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2개 매장이 오픈한 2010년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 공급비율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급액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온라인 주문에서 매장방문으로 구매방식을 바꾼 조합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2. 한밭생협 매출액 추이[20)]

구분	온라인		매장		총 공급액	비고
	온라인 공급액	비율	매장 공급액	비율		
2010	3,874,752,529	46%	4,532,163,815	54%	8,406,916,344	6월 서대전점오픈 11월 월평점오픈
2011	3,246,446,215	27%	8,672,094,609	73%	11,918,540,824	10월 둔산점 확장 이전
2012	2,697,073,654	20%	10,376,827,578	80%	13,073,901,232	4월 한밭센터 개관
2013	2,253,483,424	15%	13,342,079,319	85%	15,595,562,743	5월 송촌점 오픈
2014	1,831,199,979	11%	14,754,712,834	89%	16,585,912,813	
2015	1,689,400,943	9.8%	15,498,677,958	90%	17,188,078,901	

20) 출처: 2016 한밭iCOOP생협 총회자료집

4-5) 센터

인디문화가 융성해서 홍대 앞은 지역가치가 올라갔지만, 건물 임대료가 감당하기 힘들게 올라서 그 가치를 올렸던 당사자들은 상수, 연남 등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이제는 그 동네들도 높은 지대를 요구하는 바람에 문화예술인들은 갈 자리를 잃었다. 최근에는 창동에 홍대 앞의 인디 예술가들을 그대로 흡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새로운 방식의 지역재생이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다. 홍대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자리를 잡았던 성수동 역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종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일부 기업들은 이전하고 있고, 성동구에서 '상생지구'를 만들기 위한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 현상을 막고자 하는 의지도 보인다. 하지만 문제를 막기에는 부족한 시도들로 보인다. 결국 공통목표를 가지고 생산해내는 소유체제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

생소한 개념이지만 위의 홍대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젠트리피케이션[21] 문제가 2010년 대전에서도 발생하였고 이는 도시지역 최초의 센터인 한밭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한밭생협 1매장 이전 및 한밭센터 설립 배경[22]

- 2009년 5월 19일 한밭생협 1매장 둔산점 오픈. 2009. 4. 18~ 2011. 4. 18 2년 간 계약
- 개설에 투입된 초기비용은 보증금 1억, 권리금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약 5억 2천만 원이었으며 월 임대료는 380만 원
- 매장을 운영한지 1년 7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 수신
- 한밭생협은 내용증명에 대해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재계약 금액은 계약만료시점에 결정을 희망했으나 연 내에 확정해야 함을 통보받음
- 2010. 12. 23 이사장, 사무국장 건물주 1차면담. 건물주는 임대료 2.5배를 인상하는 안 외에는 조정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힘
- 변호사에 자문 의뢰. 월세 20% 인상을 타협안으로 건물주에 내용증명 발송
- 2011. 1. 5 건물주로부터 '본인이 사업상 필요하여 재계약 의사가 없으며, 원상 복구하여 명도 할 것'의 내용으로 회신
- 계약 해지통보의 부당함과 만일 매장철거 시에는 권리금과 시설투자 비용을 보상해줄 것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건물주와 조정하는 동시에 매장 이전도 염두에 두어 주변 입지조사
- 2011. 3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후 퇴거 내용으로 명도소송 소장 수령
- 소송의 승산이 거의 없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2~3개월 기간의 비용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매장이전을 알아보기 시작

21) 영국 산업혁명 이전의 젠트리(귀족)계층이 특정지역에 유입되면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 주로 커뮤니티 주거비용이 상승하면 기존의 저소득가구가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과정을 의미하였고, 최근에는 지역의 상점이 쫓겨나고 대형 체인점이나 부티크가 입주하는 현상이 발생함. 맹다미 (2015)

- 2011. 4. 19 현재 한밭센터 건물 매입 계약 체결. 건물주에 이전함을 알리고 이전 시 까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 건물주는 계약완료시점 이후에는 월세를 인상하여 지불할 것을 요구
- 2011. 5. 26 법원의 1차 조정관련 소환. 대리인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조정 불발
- 2011. 6. 16 법원의 2차 조정관련 소환. 건물주 직접 참석. 계약이 만료되는 2011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월 임대료 600만원으로 조정. 원상복구 비용은 조합이 2/3, 건물주 1/3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 2011. 10. 24 둔산점 이전 오픈
- 2012. 4. 10 한밭센터 개관식

■ 과정 상 참고내용
- 최초 계약 시 영업보장 5년을 계약서에 명시해주길 요구했으나 건물주가 계약서에 내용을 넣지 않고 구두 약속함
- 임대금액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대전 1억 8천만 원)를 벗어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음
- 한밭생협은 계약 시 4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불했으나, 다른 가게가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 본인의 사업장(병원)을 확장하겠다고 하여 전혀 보전 받지 못함. 하지만 그 후 건물주는 병원을 확장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함. (현재: 유기농 매장 초록마을 운영 중)
- 매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손실: 새 매장에서 재사용 하지 못한 기기 1억 4700만원 폐기, 감가상각 하지 못한 권리금 2,900만 원 등 설비만으로도 총 1억 7600만원 손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만들어진 한밭센터는 자연드림 매장과 조합원 활동공간 외에도 약국과 민들레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입주하였다. (현재는 약국은 영업하지 않음)

(인터뷰-송직근 민들레의료사협 활동국장) 부동산 횡포를 경험한 한밭생협에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입주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건물들 보다는 확실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 임시총회를 하면서 어렵게 입주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 왜 여기로 오냐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 아이쿱에서 출자도 받고, 센터에서 어르신 노래교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협동조합 간 협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쿱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의료생협에 가입하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대전센터는 반석점 매장 입지를 찾던 중, 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공지에 건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설립하게 되었다.

22) 2010년 당시 한밭생협 조합지원 담당자 내부 보고문건 및 한밭생협 2012년 감사보고서, 인터뷰를 토대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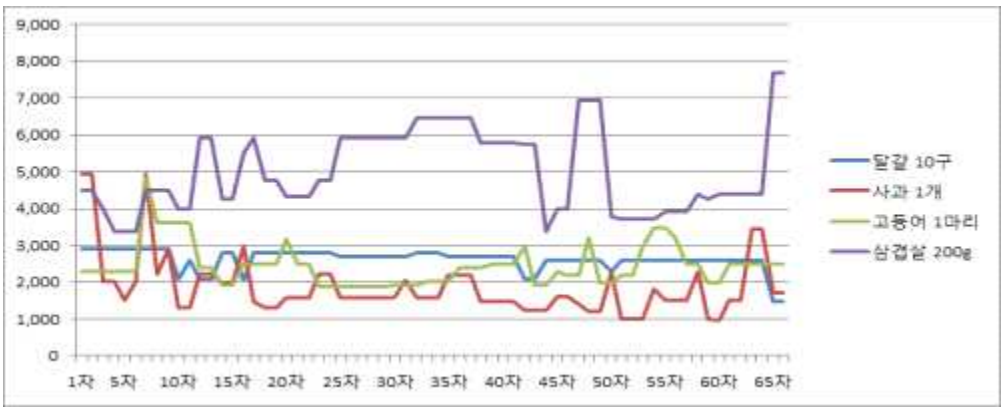
(인터뷰-신현숙 대전생협 전 이사장) 창립하고 바로 2010년 7월에 1매장을 냈어요. 손익분기점 넘기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고전하는 시기에 2매장 내겠다고 해서 … 웬만해서는 노은점(개인매장)에 못이길 것 같아서 많이 준비하고 내자고 책 사서 공부도 많이 했죠. 노은점보다는 크게 내야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리가 없었어요. 사업이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물이 아니라 땅을 보게 됐죠. 마침 빈 땅이 있었는데 LH공사에서 평당 600만원에 싸게 살 수 있었고, 빈 땅이었는데 센터가 생기고 골목이 이정도 활성화가 됐어요. 한밭(생협)은 쫓겨나면서 센터를 세웠지만 대전(생협)은 도심지역에 센터를 낸다는 반발도 있었어요. 그래도 안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운이 좋았죠.

5. 매장사업 효과

5-1) 가격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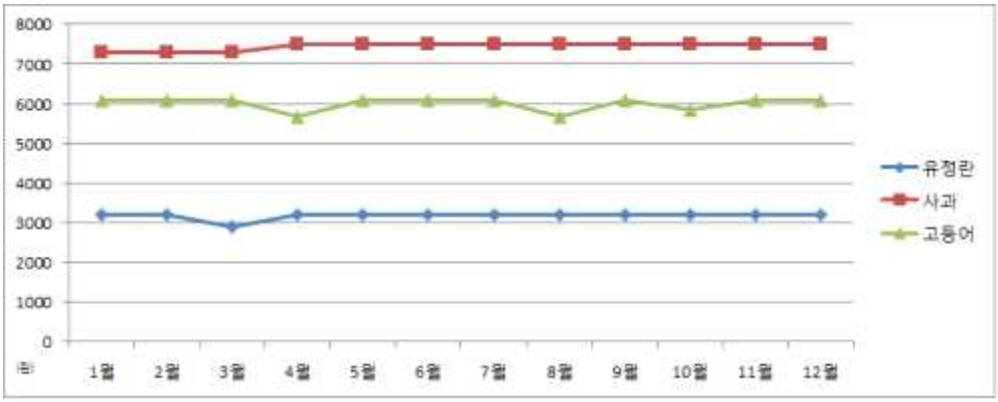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이 안녕감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실생활에서 소비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아이쿱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격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대행제,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클러스터 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는 2015년 한 해 동안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품목은 달걀(10구), 사과(1개), 고등어(1마리), 삼겹살(200g)이다.

그림2. 2015년 영등포구 이마트 농축수산물 가격변동 표[23)]



23) 출처: 서울특별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에서 영등포구 이마트 기준으로 필자 작성

그림3. 2015년 아이쿱 농수산물 가격변동 표[24]



위의 표로 생협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과 이마트의 품질과 가격비교는 어려우나, 같은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이 무척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쿱생협에서 판매하는 같은 품목 상품의 같은 기간 동안 가격변동을 비교해보면 유정란은 3월 중 2주간(단기) 10% 가격인하, 사과는 3월 한 차례 평균 2.5%의 가격인상이 있었다. 가장 가격변동이 잦았던 고등어가 4, 8, 10월에 단기 가격인하가 있었다.[25] <그림2>와 <그림3>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대형마트에 비해서 가격변동이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5-2) 고용

2010년부터 대전지역 아이쿱생협이 고용한 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이는 매장 및 사무국, 식당, 센터 관리 인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표3. 대전지역 아이쿱 지역조합 고용직원 수 추이[26]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밭생협(명)	50	51	51	69	64	63
대전생협(명)	14	16	38	46	47	44
합계	64	67	89	115	111	107

고용의 양을 늘려 지역의 실업률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그것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을 통

24) 출처: 아이쿱생협 장보기 홈페이지 (http://www.icoop.or.kr/coopmall) 가격변동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25) 삽겹살은 온라인에서는 냉동품밖에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가격비교를 해야 하는데, 가격데이터를 구하지 못하여 세 품목만 비교를 하였다.

26) 출처: 한밭생협, 대전생협 2016년 총회자료집 참고하여 필자 작성

해 고용창출과 동시에 고용의 질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법안에 포함되었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 이나 협동조합을 '특정계층이 아닌 모두가 상생 번영하는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로 고려하면서 협동조합활성화를 통해 '공생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그 기대를 추측할 수 있다.

고용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했는가를 확인하고자 대전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주관적 평가를 줄이고 아이쿱생협 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비교를 위해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항목을 활용하였다.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 간으로 대상은 매장 및 지역조합 사무국 근무자로 한정했다. 대상자 110명 중 78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고용조사 개인 인적사항 기초통계

		자연드림매장		사무국		전체	
		인원	%	인원	%	인원	%
응답자		71	*91.0*	7	*9.0*	78	*100*
성별	남	28	*100*	0	*0*	28	*35.9*
	여	43	*86.0*	7	*14.0*	50	*64.1*
출생년도 평균			1976		1983		1977
학력	고졸 이하	22	*100*	0	*0*	22	*30.1*
	전문대졸	19	*90.5*	2	*9.5*	21	*28.8*
	대졸	25	*83.3*	5	*16.7*	30	*41.1*
	대학원졸	0	-	0	-	0	*0*
혼인여부	기혼	44	*95.7*	2	*4.3*	46	*59.7*
	미혼	26	*83.9*	5	*16.1*	31	*40.3*
가족동거여부	동거	56	*88.9*	7	*11.1*	63	*81.8*
	비동거	14	*100*	0	-	14	*18.2*
자녀(18세 이하) 유무	자녀 있음	30	*96.8*	1	*3.2*	31	*44.9*
	자녀 없음	38	*100*	0		38	*55.1*

응답자 인적사항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응답자와 비교하여 여성비율이 높고, 평균연령은 3살 정도 낮았다. 그 외에 학력, 혼인, 동거, 자녀 유무 항목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서도 2012년 비농촌지역 노동패널자료와 비교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직원'-'2014년 노동연구원 협동조합 실태조사'-'2012년 노동패널조사'의 세 그룹을 비교하도록 한다.

① 고용안정: 취업안정성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매장		사무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취업 안정성	매우불만족	0	-	2	28.6	5	2.0	23	0.4
	불만족	6	8.5	0	-	25	9.7	496	9.5
	보통	32	45.0	2	28.6	98	38.1	2385	45.6
	만족	24	33.8	3	42.9	107	41.6	2204	42.1
	매우만족	9	12.7	0	-	22	8.6	124	2.4
	전체	71	100	7	100	257	100	5232	100
평균(5점 만점)		3.51		2.86		3.45		3.37	

② 근무조건: 근로시간 및 작업 환경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매장		사무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근로 시간	매우불만족	2	2.9	1	14.3	8	3.11	43	0.8
	불만족	9	12.9	1	14.3	20	7.78	689	13.2
	보통	21	30.0	2	28.6	64	24.9	2221	42.5
	만족	29	41.4	2	28.6	119	46.3	2183	41.7
	매우만족	9	12.9	1	14.3	46	17.9	94	1.8
	전체	70	100	7	100	257	100	5230	100
평균(5점 만점)		3.49		3.14		3.68		3.31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매장		사무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근로 환경	매우불만족	3	4.2	4	57.1	4	1.56	22	0.4
	불만족	6	8.5	1	14.3	19	7.39	552	10.6
	보통	35	49.3	2	28.6	75	29.2	2433	46.5
	만족	20	28.2	0	-	116	45.1	2147	41.1
	매우만족	7	9.9	0	-	43	16.7	76	1.5
	전체	71	100	7	100	257	100	5230	100
평균(5점 만점)		3.31		1.71		3.68		3.33	

③ 관계: 민주적 운영 및 인간관계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의사 결정 과정 참여	전혀 그렇지 않음	10	13.0	8	3.11	근로자 의견 반영	8	10.4	5	1.95
	그렇지 않은 편	13	16.9	15	5.84		10	13.0	12	4.67
	보통	31	40.3	45	17.5		39	50.6	44	17.1
	그런 편	20	26.0	92	35.8		19	24.7	106	41.3
	매우 그렇다	3	3.9	97	37.7		1	1.3	90	35.0
	전체	77	100	257	100		77	100	257	100
평균(5점 만점)		2.91		3.99		평균	2.92		4.03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동료와 지식 기술 공유	전혀 그렇지 않음	2	2.6	5	1.95	동료와 경쟁 보다 돕는 편	2	2.6	4	1.56
	그렇지 않은 편	5	6.5	2	0.78		4	5.2	6	2.33
	보통	21	27.3	34	13.2		20	26.0	39	15.2
	그런 편	31	40.3	103	40.1		32	41.6	114	44.4
	매우 그렇다	18	23.4	113	44.0		19	24.7	94	36.6
	전체	77	100	257	100		77	100	257	100
평균(5점 만점)		3.75		4.23		평균	3.81		4.12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매장		사무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간 관계	매우불만족	2	2.86	0	-	3	1.17	14	0.3
	불만족	5	7.14	1	14.3	15	5.84	254	4.9
	보통	27	38.6	4	57.1	66	25.7	2709	51.8
	만족	29	41.4	2	28.6	121	47.1	2169	41.5
	매우만족	7	10.0	0	-	52	20.2	84	1.6
	전체	70	100	7	100	257	100	5230	100
평균(5점 만점)		3.49		3.14		3.79		3.39	

④ 보상 만족도: 임금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매장		사무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임금	매우불만족	3	4.23	1	14.3	11	4.28	112	2.1
	불만족	11	15.5	2	26.6	54	21.0	1305	25.0
	보통	36	50.7	4	57.1	122	47.5	2661	50.9
	만족	17	23.9	0	-	64	24.9	1129	21.6
	매우만족	4	5.63	0	-	6	2.33	23	0.4
	전체	71	100	7	100	257	100	5230	100
평균(5점 만점)		3.11		2.43		3.00		2.93	

⑤ 전반 만족도

항 목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매장		사무국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반적 만족도	매우불만족	0	-	0	-	1	0.39	5	0.1
	불만족	1	1.43	3	42.9	5	1.95	280	5.4
	보통	32	45.7	2	26.6	92	35.8	2710	51.8
	만족	31	44.3	2	26.6	125	48.6	2198	42.0
	매우만족	6	8.57	0	-	34	12.2	44	0.8
	전체	70	100	7	100	257	100	5237	100
평균(5점 만점)		3.6		2.86		3.72		3.38	

⑥ 전체 비교

고용의 질 기준	세부지표	대전지역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		한국 노동패널
		매장	사무국	전체	비조합원	전체
자율성	작업내용 방법	3.37	3.71	4.14	3.94	**3.48**
	나의작업일정	3.24	3.29	3.94	3.72	3.31
권한	팀 목표	3.17	3.71	3.91	3.66	2.91
	신입채용	2.39	2.43	3.47	3.25	2.36
고용안정	취업안정	**3.51**	2.86	3.45	3.42	3.37
발전가능성	기술지식 유용성	3.30	2.71	3.38	3.3	**3.3**
	개인발전 가능성	3.03	2.14	3.55	3.38	**3.24**
근무조건	근로시간	3.49	3.14	3.68	3.62	3.31
	작업환경	3.31	1.71	3.68	3.63	**3.33**
민주적 운영 인간관계	인간관계	3.49	3.14	3.79	3.63	3.39
처우의 공정성	인사고과 공정성	3.57	**3.86**	3.68	3.56	3.11

전반적으로 매장이 사무국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사무국 응답자 수가 7명으로 한 사람의 답변이 전반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도 있으나,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수치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매장의 취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비교해서도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응답자 중 79%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반면 사무국의 근로환경 만족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발전가능성 파트에서도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협동조합 고용실태조사보다는 낮게, 노동패널보다는 높은 만족도가 조사되었다.

(인터뷰-매장근무 직원) 향 후 유통이나 친환경 분야에서 일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매장 근무와 활동가의 부분 양쪽 다 얻을 수 있고, 나중에 활동가로 일하고 싶기 때문에, 고객 대면하는데 아무래도 플러스가 돼요. … 직원을 채용할 때는 남자가 좋은지 여자가 좋은지 먼저 물어보고 뽑으니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의견 개진도 자유롭고. 결과가 반영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인터뷰-사무국근무 직원) 이사회와 사무국 간 소통이 잘 안됨을 느낍니다. 사무국에서도 이사회에 참석하지만 결정된 후 통보하는 방식이라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협동조합이라서 직원을 더 위할 줄 알았는데 사기업보다 폐쇄된 느낌이 있고,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불안하다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하는 조직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쿱 그룹 차원으로나 지역조합 이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은 그 결실이 아직 크게 피어나지는 않았으며, 실제 근무자와 고용주의 입장에서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인터뷰-신현숙 대전생협 전 이사장) 올해 5월부터 시급을 7300으로 인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 구직하러 경영학과를 졸업한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3년이 지나면 매니저로 키우려고 해요. 매장은 전부 주5일제로 근무해서 부매니저가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 관리자를 키워내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일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은 하고 한 명이 그만두면 면접 보러 2~3명이 와요. 직원끼리 소개해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차별로 급여에 차등을 두고, 포스직원도 승진의 기회를 줍니다. … 청소나 식당 아주머니도 정직원으로 뽑아서 애착을 가지게 했어요. 1매장은 힘들었지만 2매장부터는 매출이 좋아서 괜찮고 … 경기가 안 좋으니 이사회에서 반대도 조금 있었지만 급여테이블을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올리고 이사회에서 확정했어요

5-3) 활동공간이 주는 효과

센터가 세워지면서 조합의 활동공간이 안정되었는데, 이는 조합원 역량강화로 이어진다. 지역조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크게 '현안에 대한 활동'과 '교육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마르티아 센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교육은 기본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삶이나 활동 자체가 큰 범주의 교육이다. 생협의 활동과 교육 또한 조합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사회자본을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터뷰- 정연희 한밭생협활동국장) 40대인 내 입장에서, 우리 엄마는 희생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잘 배웠지만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과 업종이 많지 않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면 교사나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전부였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결혼을 하면 자녀양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 되었고요. 또래들을 보면 요즘 필요한 실무능력은 거의 없어요. 일을 한다고 해도 괜찮은 일을 하기 힘들죠. 시스템은 너무 많이 변해있고,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지적수준을 풀어낼 만한 장소도 없고, 그런 조직문화를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결정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주 신선한 사회문화를 익힐 수 있는 거예요.

2015년 한 해 동안 대전센터에서 진행된 교육과 행사 횟수와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소모임들이 있으나, 장소와 인원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제외하고 조합원 대상 일반교육, 활동가 및 이사교육, 기타 행사, 회의, 소통팀, 기자단, 참여팀, 캠페인, 물품심의 9가지 교육과 활동 내역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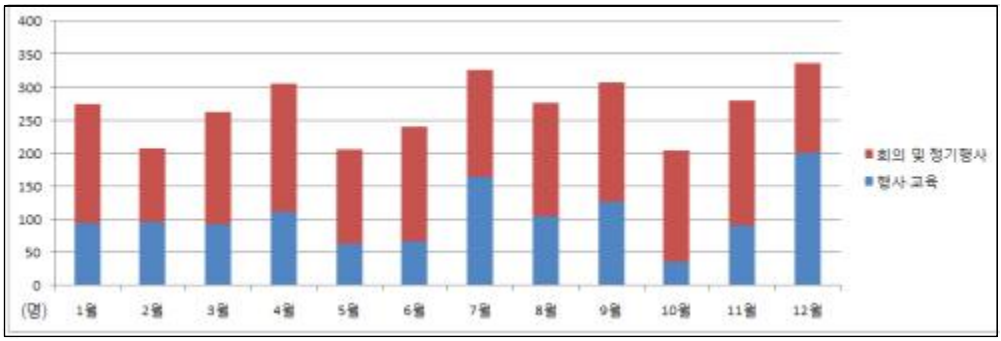
표5. 2015년 대전센터 이용내역[2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행사 · 교육	94	96	92	111	64	67	165	104	127	35	90	201	1,246명
회의 및 정기행사	181	111	171	194	142	173	160	172	180	169	189	136	1,978명
총 이용 인원	275	207	263	305	206	240	325	276	307	204	279	337	3,224명
이용 횟수	36	18	29	30	26	25	32	24	30	26	34	28	338회

그리고 센터활용이 매장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대전센터 1층 반석점의 2015년 4월 매출 데이터를, 센터와 활동공간이 없는 대전지역 다른 3개 매장 매출의 평균과 비교해보았다. 반석점 매출이 일평균 300만 원 정도 높아서, 3개 매장 평균값에 300만원을 더하여 겹친 그래프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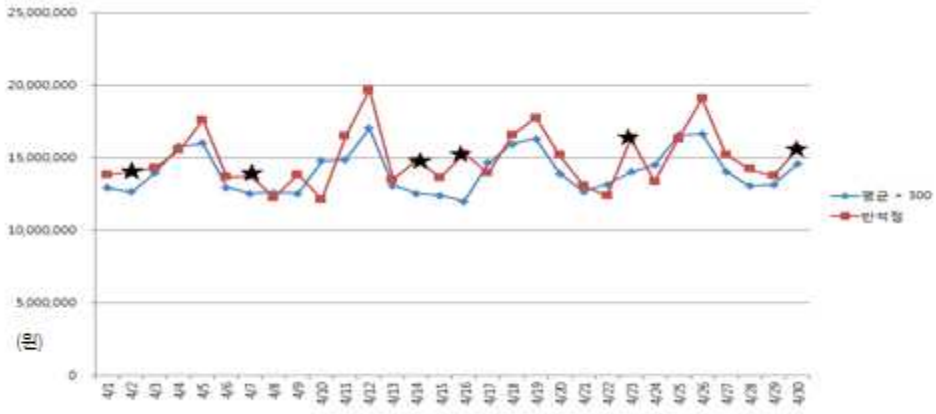
27) 출처: 2016 대전iCOOP생협 총회 별첨자료 3~4 참고하여 필자 작성

그림3. 2015년 대전센터 이용내역



3개 매장 평균 매출은 평일과 주말을 주기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평균매출이 하락하는 시기에 반석점에서 매출이 상승한 지점을 포인트로 두었고 총 9번이 있었다. 이 날들 중 10명 이상이 참석한 교육·행사가 진행된 날을 찾아보니 6번이 겹쳐졌으며 <그림4>에 별표 표시한 날이다.

그림4. 반석점과 3개 매장 평균매출 비교



물론 매출 변화의 요소는 다양해서 반드시 맞는 결과라고 할 수 없으나, 센터에서 많은 교육과 활동을 이끌어낼수록 매장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반대로 센터가 있음에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매장운영에 부정적인 작용이 우려된다.

5-4) 지역의 변화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지역이 있다. 대학이 있는 중심지역에는 저소득층만 살아서 도심이 슬럼화 되었는데, 그 저소득층 사람들을 고용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친환경세탁소나 에너지, 그린하우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금은 클리블랜드 모델로 불리며 지역재생의 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대학 등 쉽게 이전하지 않는 기관이 계속해서 소비해 준다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이 발전하니 시에서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발전이 가속화 되었다.[28]

생협의 매장 역시 그 이전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을지라도, 생협매장이 생기면서 좋은 소비자들이 모인다는 신뢰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 (인터뷰-정연희 한밭생협 활동국장) (한밭생협 1 매장) 원래 몫이 좋은 지역으로 주도로의 이면도로였고 장사하기 쉬운 곳이었어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갔었는데 계약서에 2년 계약만 표기했고, 2년 끝나갈 무렵부터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했어요. … 자연드림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고 자연드림으로 인해서 골목이 활성화된 역할을 했죠. SAY백화점 분점까지 생기고, 학군이나 그런 건 잘 되어있긴 한데.. 특별히 개발될 호재가 있지는 않았어요. 아파트도 전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고요. 처음에는 상권도 없어서 주차도 자유였는데, 나중에 주차관리가 될 정도로 상권이 형성되었어요. … 센터는 체대 입시학원 자리였어요. 지하는 인기 없는 레스토랑이었고, 이 길도 상권이 좋은 곳은 아니었는데 건물도 바뀌고 브랜드안경점이나 레스토랑, 유기농빵집, 체육시설 같이 고급화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갖춰졌어요.

두드러진 변화는 두 센터를 기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밭센터는 인터뷰 내용에서 다룬 바와 같이 주변에 고급 소비를 즐길만한 점포들이 입점했다. 대전센터 주변에는 센터설립 후 반경 200m 안에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건강 도시락 쿠킹 스튜디오, 친환경을 테마로 한 매장이 다수 생겨났는데, 무항생제 정육점, 건강차, 화학조미료 zero 식당, 무농약 쌈밥, 친환경 반찬가게 등 다양한 안전한 먹거리를 테마로 한 점포들이 생겨났다.

5-5) 나눔과 복지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씨앗재단을 통한 민들레의료사협에 17건 (암, 디스크, 치과진료 등) 총 21,100,760원이 지원 되었다. 그리고 두 조합에서 푸드뱅크 지원, 세이브 더 칠드런, 어린이 도서관, 저소득층 물품 지원, 시민단체 후원, 생태하천 보호 운동, 마을축제·음악회 후원, 사랑의 연탄 나눔 등 직접적인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9]

---

28) 출처: 《생협평론》 20호

6. 마무리

생협의 매장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소비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조합원 교육과 사업 참여로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 생협 본연의 목표인 '안전한 먹거리를 좋은 가격에 공급'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도시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금융자본이 아닌 조합원의 힘을 모아서 극복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과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등을 보강해야 더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센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활용도가 낮은 저녁시간과 극장이나 대규모 강의실의 활용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대전 지역에서 두 조합이 매장을 만들고 운영한 역사와 결과물을 바탕으로 '아이쿱생협의 매장사업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였는가?', '아이쿱생협이 있어서 좋은 동네가 되었나?'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을 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이 번창하고 매장사업이 커질수록 생협의 조합원, 활동가 그리고 직원들은 매장사업에 집중하면서 생협으로서 사명에 소홀하지 않은가, 협동조합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가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매장사업이 지역에 남긴 씨앗들을 기억하고, 더욱 좋은 결과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시간과 역량의 한계로, 조합이 관여하지 않은 개인매장과의 관계를 다루지 못한 점과 대전지역적인 특색을 연구에 녹여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그리고 지역상권의 긍정적인 변화가 자연드림 매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숙제로 남기고자 한다.

29) 출처: 2012년 내부보고자료 참고

참고문헌

[문헌자료]
2016년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총회자료집
2016년 대전iCOOP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2016년 한밭iCOOP생협 대의원총회자료집
로버트&에드워드 스키델스키저/김병화역,《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부키, 2013.
브루노 S. 프라이 저/유정식·홍훈·박종현역,《행복, 경제학의 혁명》, 2015, 부키.
새뮤얼 보울스·리처드 에드워즈·프랭크 루스벨트저/최정규·최민식·이강국역,《자본주의 이해하기》, 후마니타스, 2009.
아마르티아 센저/김원기 역,《자유로서의 발전》, 2013, 갈라파고스.
정선기·윤기석·김도균,《대전광역시 사회자본의 구조와 동학》. 2015, 충남대학교 출판부.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iCOOP생협 입문협동조합》, 알마, 2016
홍기빈,《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2012, 지식의날개.
길현종, 안주엽,〈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4.
맹다미,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사례와 시사점〉, 서울연구원, 2015
변미리,〈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2014
이주희,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생협평론 20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53~156쪽, 2015.
전은호,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생협평론 20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63~74쪽, 2015.
이수현(2014)「한국생협의 대안적 유통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정원각(2009)「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협이 되기 위한 조건」(학술단체협의회 자료)

[웹사이트]
위키피디아 일본어 https://ja.wikipedia.org/wiki/%E5%AF%8C
위키피디아 영어 https://en.wikipedia.org/wiki/Wealth
네이버 열린연단 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79129&rid=2888#literature_contents
서울특별시 물가정보 http://mulga.seoul.go.kr
아이쿱생협 장보기 http://www.icoop.or.kr/coopmall

[감사의 말]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연구 자료 제공과 설문에 힘써주신 한밭iCOOP생협과 대전iCOOP생협 활동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

김형미[1)]

1. 시작하며

이 연구는 소비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을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 관찰, 해석한 사례연구이다. 코프 아이치는 일본 나고야 현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며 '실천공동체'는 에티엔 웽거의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에서 주창한 사회적 학습현상, 주민복지활동은 생협의 복지활동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 실현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는 모습을 표현한 개념이다.

연구의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본 연구를 통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활동이 주민복지활동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며 조합원들의 자치와 협동,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2)]이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협동조합의 복지활동은 공적 부조(=국가, 거시)와 사적 부조(=시장, 미시) 중간에 위치하는 상호부조(=공동체, 중간)에로서 초고령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가족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사례연구로서 필자가 채용한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이다. 전통적인 사례연구란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발전시킨 것으로 연구 대상(환자)의 이야기와 행동거지,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인터뷰하고 관련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이다.[3)]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성의 작동을 제어할 장치가 보장되지 않아서 연구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관찰과 기록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수집한 데이터의 계통성을 제삼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으나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자가 연구 질문을 자유자재로 연구대상 및 관련기록에 투영하면서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현장성이 강하고 생동적이라는 매력이 있다. 특히, 전통적인 사례연구방법은 맥락적인 요소를 연구자가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내러티브로서의 지식'[4)]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연구 대상의 행동 방식이 독자들에게 비교적 쉽게 전이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

---

1)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경제학박사, hyungmikr@gmail.com

2) 자발적으로 집단,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행한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김경동은 자원봉사 실천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volunteering을 채용하고 시민의 책임과 의무(책무)로서의 자원봉사 실천이 있다고 본다. 김경동(2016), 16~17쪽.

3) Freud, S (1901) The Case of Dora, *Penguin Freud Library*, vol.8: Case Histories 1, Penguin. 프로이드는 1900년에 수개월간 직접 치료한 여 환자와의 인터뷰, 관련기록을 정신분석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묘사하면서 사례연구로 정리하여 정신분석이론을 발전시켰다.

4)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로서 표현하고 구성하는 지식으로서 전달력이 크다.

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대상인 코프 아이치가 해외에 소재한 점에서 관찰, 분석대상은 주로 문헌이며 인터뷰와 직접 관찰은 부차적이다.[5] 이런 한계 때문에 본 사례연구는 필자의 연구 질문과 사례 분석 도구로서 '실천공동체', '돌봄의 윤리'와 같은 이론적 설명의 도움을 많이 받는 형태로 진행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전통적인 사례연구방법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적 데이터를 통해서 사례의 특징을 명확히 묘사하고 질적 데이터를 통해서는 사례의 경향을 해석하는 계통적인 사례연구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일부 채용했다.

이어 사례연구대상 선정의 이유를 밝힌다. 코프 아이치는 이번 심포지엄의 사례연구 대상인 아이쿱의 지역생협과 같은 소비자들의 협동조합이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131개의 지역생협들[6] 중에 왜 코프 아이치인가.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며 필자의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필자와 코프 아이치의 우연한 만남에서 연유한다.

2010년 10월 나고야 시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BD-COP10/COP-MOP5)에 아이쿱생협의 논습지 활동가들이 참석했을 때 유일하게 일본의 생협으로서 코프 아이치가 부스를 운영했다. 막 합병한 직후의 코프 아이치는 생협의 환경보전활동, 후지마에갯벌[7]의 람사르조약 등록을 위한 활동, 지역 환경단체지원활동을 홍보하였다.

두 번째, 미나미의료생협과 같은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협이란 점이 필자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다. 미나미의료생협은 《살아 숨쉬는 마을만들기:미나미 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의료생협이다.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일방적이고 고통스러운 치료가 아니라 치매, 근육장애 등 난병을 지닌 환자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환자 스스로가 치료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만족스러운 의료를 성취하는 의료, 돌봄의 모습은 기적처럼 놀랍다. 미나미의료생협은 조합원 7만 1500명이 '조합원과 시민의 협동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며 의료, 개호(장기요양), 생활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아이치 현 내 56개 사업소를 운영하며 생활 속의 협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신축한 미나미생협병원은 병상 수 313, 상근직원 370여 명, 응급실, 호스피스 병동, 투석실, 종합검진센터와 같은 종합병원 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환아 돌봄, 조산소, 유기농 식당, 다세대 교류관, 천연효모 빵 베이커리, 잡화가게, 카페, 여행대리점, 메디컬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있어서 병원 부지가 하나의 온전한 마을(community)이다. 병원답지 않은 병

---

5) 코프 아이치 임원 1명을 통하여 인터뷰 질문을 발송, 임원 면담 1회, 조합원 활동가(2명)·관리직원(1명)·복지담당직원(2명)·서비스 이용자(3명)을 각각 인터뷰하고 시설을 1곳 견학하였다. 또한 수차례 전자메일을 통해 임원과 관리직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6) 일본생협연합회 2014년도 전국생협현황 (http://jccu.coop/about/statistics/)

7) 후지마에갯벌은 나고야시 항구에 가깝고 공업지대로 갯벌이 거의 매립된 가운데 남은 곳으로 1984년 나고야 시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에 시민과 환경연구자들이 거세게 저지 활동을 벌여 1991년엔 매립중지를 위한 10만 인 서명을 나고야시의회와 환경성에 제출, 1999년에 매립계획을 철회시켜서 지켜낸 곳으로 2002년에 국가지정철새보호구역 및 람사르조약 습지로 등록되었다.

원 거리를 지향한다. 지역사회에 이런 병원이 하나 있다면 안심하지 않겠는가. 더 놀라운 건 의료거점의 규모나 다기능뿐만 아니다. 미나미의료생협 조합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매우 유명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마다 이들은 조합원 직접 민주주의를 즐긴다. 돌봄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100인 회의, 미나미생협병원 이전을 검토하는 1000명 회의, 50주년 사업을 검토하는 6만인 회의, 미래 구상을 검토하는 10만인 회의 등.[8] 코프 아이치는 같은 지역에서 협력, 또는 경쟁하며 생협의 복지활동에 있어서 미나미의료생협이란 훌륭한 모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아이치 현 내의 두 개의 생협이 합병하여 탄생하는 과정에서 소자녀·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인 조건 아래서 새로운 생협 건설의 비전으로 지역 복지 실현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일본 생협은 동네, 마을 단위로 생겨난 많은 지역조합들이 성장하면서 합병하고, 합병한 지역조합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지역적 특징에 따라 사업연합체를 결성하고 이들이 의료생협, 대학생협, 공제생협과 단결하여 전국연합회를 이루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붕괴하며 자산 가치와 이자소득이 크게 하락,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경영적인 이유에서 합병을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프 아이치의 합병은 일본 생협의 진로로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나 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생협의 비전을 찾고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상당한 기간을 설정한 점, 합병의 비전을 더욱 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한 고령사회의 복지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정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본 사례연구는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을 통해서 협동조합 복지가 지역 복지로 확대되는 과정, 그 속에서 창출되는 지역사회 주체들의 협업과 연계의 진행상을 그려낼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복지활동이 실천공동체의 특징을 지니면서 지역사회 타 주체들과 지역사회 복지실현에 필요한 역량을 생산하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코프 아이치의 사례를 통하여 일본보다 더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9]에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활동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코프 아이치의 탄생: 조합원, 지역, 복지의 관점을 중심에 두다

2-1) 합병과정

코프 아이치는 메이킨 생협(정식 명칭은 나고야근로시민생협, 1969년 창립 시 조합원 1,330명)과 미카와시민생협(1974년 창립 시 조합원1,090명, 명칭은 히가시미카와 생협) 이 2010년에 3월에 합병하여 탄생한 지역 생협으로 아이치 현에 기반을 둔다. 조합원은 44만 1천

8) 수치는 2013년 12월 말 기준.

9)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7%)에서 고령사회(14%)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 시기는 각각 일본이 25년, 11년인 반면, 한국은 19년, 8년이다. 손종칠·윤재호(2015), 8쪽.

여 명으로 아이치 현 세대 가입률 14.55%에 해당한다. 출자금 88억 1,500만 엔, 사업금액은 569억 5,200만 엔으로 아이치 현 내 소매유통 시장 점유율은 3.3%이다.[10] 가정공급 배송센터 15개소, 매장 20곳, 복지사업소가 17곳이 사업거점이며 총 직원 수는 3,209명, 이 중 정규직은 903명이다. 코프 아이치의 조직률은 일본 지역 생협의 평균 세대가입률 36.5%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조직률이 낮은가. 인구 748만 명, 306만 가구 수를 지닌 아이치 현에는 지역생협 6, 대학생협 13, 직장생협 8(도요타 생협은 지역 생협에도 포함됨), 학교생협 1, 의료복지생협 3, 공제 생협 2, 생협만 33 조합이 있다. 지역생협 중 타 생협들은 도요타 생협[11]을 제외하면 규모가 작아서 코프 아이치의 낮은 조직률이 생협 간 경합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코프 아이치의 낮은 조직률은 합병 전의 메이킨 생협, 미카와 시민생협 모두 일본생협의 조합원 조직인 '반'을 기초로 조직 활동과 사업을 펼치면서 매우 늦게 개인별 공급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반은 1920년대 고베 생협에서도 실시되었던 조합원들의 기초 단위이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지역에서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가정공급을 시작했던 시민 생협들의 조합원 협동의 기초가 되었다. 4,5명의 조합원 가정이 모여 하나의 반을 이루어서 매주 1회 반 모임을 열고 반별 공동구입과 일괄 배송, 조합원의 상품개발 참여, 반↔지구↔지역↔이사회로 이어지는 조합원의 상향식 대의제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일본형 생협 모델"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거품경제의 붕괴, 사생활 중시 경향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별 배송과 반 모임, 상향식 대의제 민주주의는 형해화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개인별 공급을 실시하고 반 모임 이외에 주제별 동아리 활동, 비조합원의 참여 인정[12] 등 변화가 일어났으나 코프 아이치가 반별 일괄 주문을 개인별 OCR 요지 기입방식으로 전환하고 개인별 공급을 도입한 것은 수도권보다 거의 10년 늦은 2002년이었다. 현장 직원들은 조합원 확대가 어려우니 개인별 배송을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두 생협의 리더들의 입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화, 고립화하는 사회 풍조 속에서 반 모임은 더더욱 지켜야 할 협동의 방식이자 보루라는 생각이 매우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13] 심지어 반에 가입한 조합원이 아니라면 매장이용도 어려웠다고 하니.

---

10) 2015년 3월20일 현재, 코프 아이치 <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서 (2015년)에서. 이 글에서 년도를 명시하지 않은 코프 아이치 관련 수치는 이 자료에 따른다.

11) 도요타 자동차가 지배하는 지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도요타 시(인구 42만 명)에서는 도요타 생협이 가구 수(16만9천여 가구)보다 더 많은 25만7천여 명의 조합원을 조직했다.

12) 한국생협과 활발히 교류하는 팔시스템생협연합회가 개인별 공급방식을 초기에 개발, 도입하여 크게 성장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생협계의 이단아' 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비판도 많았으나 조합원을 집단으로 치부하지 않고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협동의 새로운 방식을 찾고자 했던 팔시스템생협의 도전은 선구적이었다. 이후 일본 생협은 대부분 개인별 공급을 도입한다. 팔시스템생협의 생협운동론에 관해서는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푸른나무, 2010년).

이 지점은 흥미롭다. 혁신과 보수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용도로 구분할 때 일본생협운동에서 중요한 논쟁 중 하나였던 개인별 공급에 관해서 코프 아이치의 전신이었던 두 생협은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런데, 불과 5년 후에는 '합병'이라는, 생협 전체로 조합원 2/3의 동의와 광역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당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도전에 '혁신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합병하면 조직이 커지면서 이사회와 조합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축소되어 권한이 일부에 집중된다는 문제를 낳게 된다. 권한이 현장에 있을수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창의적이다. 스스로 결정할수록 자유와 책임이 커진다는 것은 일반명제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조합원이 직접 가입한 1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치가 보장되고 촉진되는 구조가 좋다. 더욱이 일본의 지역 생협이 성장과정에서 대부분 합병노선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는 생협 소재 지자체를 넘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강한 법적 제약, 성숙시장 속에서 영리유통업체와의 경쟁 심화, 가격경쟁을 견딜 수 있는 경영체질의 강화와 같은 사업 환경적 요인 이외에 조합원 활동가와 리더의 감소,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해화[14]로 인한 조합원활동의 보수화라는 내적 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이후 전개되는 코프 아이치 탄생의 과정을 보면 메이킨 생협, 미카와 시민생협의 합병 과정은 각 생협에게 기존의 체질과 활동방식에서 달라진, 새로운 차원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역동성을 조직에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재탄생이라는 변화를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신들의 생협운동의 비전을 재설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메이킨 생협과 미카와 생협이 합병 의사를 상호 타진할 때 두 생협의 조합원 수는 34만6,300명, 이 중 미카와 시민생협은 10만1,700명이었으니 2대1의 규모가 된다. 두 생협은 아이치 현을 둘로 나눌 경우 각각 서편과 동편에 위치하여 서로 경합하지 않으며 둘 다 1994년에 코프 기후, 코프 미에와 함께 설립한 도카이코프사업연합의 회원조합이자 창립 후 30여 년이 지나 한 세대가 지나는 시점에서 '아이치 현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생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합병 과정을 추적하면 <표 1>과 같다.

13) 필자가 인터뷰했던 직원 (경력30년)과 조합원 리더(조합원 경력 40년),
14) 대의제 민주주의의 절차와 형식은 강조되나 실제 이를 작동하게끔 하는 조합원 학습과 훈련, 지속적인 조합원 선출직 리더 양성과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권한과 책임의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진 결과, 대의제 기관들이 거수기 역할에 치우치게 되는 현상.

표1. 코프 아이치 탄생에 이르는 합병과정

시기	이사회 수준의 작업	조합원 수준의 작업
2006년	전 단계 <아이치 그랜드 디자인> 합동조사팀 - 각 생협 이사회 직속 TF - 아이치 풍도와 문화, 산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 조사, 미래 일본사회 예측 (특히 인구)	
2007년	합동 이사회 (2회) - 새로운 생협의 지향, 조직운영체계 논의 시작 합병을 향한 3개년 계획 수립 - '네 가지 지향'을 상정	각 생협 대의원총회에서 <아이치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생협 만들기 준비 3개년 계획> 의결 대의원, 조합원 교류 시작
2008년	새로운 생협의 지향, 조직운영체계, 경영계획 초안을 제시 소망엽서를 바탕으로 조합원 참가와 조직운영방침을 점검 합동복지정책검토위원회 설치	'아이치 우리의 생활 나의 생활 대교류회 1' 개최 조합원 논의 시작 ('소망 엽서'형태로 새로운 생협에의 소망, 기대를 모집 직원 교류 추진
2009년	합병 제안 대의원총회 합병 조인식 합병 승인 임시대의원총회 준비 합동복지정책검토위원회, <아이치의 새로운 생협에서 만드는 우리들의 협동조합복지>'를 각 이사회에 제출	"37만 조합원의 대화운동" 신춘 설문조사와 합병 Q&A '아이치 우리의 생활 나의 생활 대교류회 2' 개최 <아이치의 새로운 생협 만들기 > 의사표명(20만 조합원) 각 생협 대의원 총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
2010년	<코프 아이치에서 만드는 우리의 협동조합 복지> 승인 코프 아이치 창립 (3.21.) 제1차 중기발전계획 수립 (슬로건: 안심, 신뢰, 생활을 잇다, 코프 아이치)	조합원 공고 제1회 조합원활동교류회 (11월)

출처: 코프 아이치 제공 내부 자료에서 필자 정리

[4]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

합병과정에서 메이킨 생협은 2009년, 대의원 총회 이전에 100곳에서 조합원 토론을 개최하고 미카와시민생협은 4~9월까지 지구위원회, 조합원 교류회에서 '새로운 생협을 만들기 위한 조합원 모두의 목소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각 생협에서 합병을 의결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주고받은 대의원의 의견은 700건에 달했으며 매월 '조합원통신'이란 소식지를 통해서 합병과 관련한 소통을 전개했다.

평등하고 자발적인 개인이 결합한 협동조합의 합병과정은 주식회사의 그것과는 다르다. 경영상황 뿐만 아니라 비전과 조직 문화 등 서로를 확인하며 수용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다. 수십만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은 창립 후 30여 년 동안의 세월을 거쳐 제도화되어 공기처럼 익숙해진 생협의 운명에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여해야 하는 것으로 고요한 호수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행위였을 것이다.

위 합병과정, 즉 새로운 생협의 탄생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기준 문서인 <코프 아이치의 지향>는 네 가지 지향과 세부목표 21개로 구성되었다. 지면 관계상 네 가지 지향과 4번째 지향의 세부목표만 소개한다. 앞의 세 가지 지향은 그동안 생협이 꾸준히 추진해 온 목표로서 생협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언설인 반면, 4번째 지향은 지역사회를 생협 운동의 주요한 영역(domain)으로 삼아 그 담론(discourse)을 제시한 것이라 세부목표까지 소개할 의미가 있다. 이어서 수립한 코프 아이치의 3개년 발전계획 중에서 <코프 아이치의 지향>은 조합원의 관점, 복지의 관점, 지역의 관점으로 명시되었다. 당시 문헌들을 읽어 내려가면 합병 과정에서 조합원만큼이나 '지역'이라는 말과 관점이 드러난다.

- 조합원의 관점: 조합원이 주인공이다. 협동의 힘으로 사업과 운동을 추진한다.
- 복지의 관점: 생협의 활동을 검토하여 새로운 협동조합 문화를 만든다.
- 지역의 관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지키는 네트워크를 확산한다.

표2. <코프 아이치의 지향>

1. '먹거리 안전·안심'을 우선으로 삼아 생산자와 신뢰,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강화합니다.
2. 조합원의 바람에 부응하는 견실한 사업경영을 실행합니다.
3. 조합원과 가까운 곳에서 즐겁고 활력 있는 생협을 지향합니다.
4. 지역의 모두와 함께
- 어려울 때는 '피차일반'. 가까운 협동, 상부상조를 지역에서 확대하자.
- 환경·복지·방재·방범...지자체와 지역 모두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자.
-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아이치 현의 소비자운동을 담당하고, '생활안심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자.
- 아이치 현의 생협과 협동조합의 연대, 나아가서는 아시아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협동조합운동이 정리한 '협동조합의 정의·가치·원칙'(1995년 ICA)를 소중히 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한다.

출처: 2009년 10월, 메이킨 생협, 미카와 시민생협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합병 후 조합원 조직과 활동은 조합원의 지역 활동을 응원하는 제도를 강화하였다.

코프 아이치의 임원 우시다의 보고에 따르면[15], 코프 아이치 탄생 후 조합원 대표 202명이 모여서 '조합원활동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때 주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지역에서의 불안은 무엇인가. 둘째, 지역 활동을 할 때 생협의 활동과 사업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장보기 불편, 범죄 증가,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짐, 이웃끼리 교류가 희박해진 현상과 같은 사회적 고립을 들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생협의 반 활동, 가정공급과 매장, 생협의 교류·상담 공간('쉬어가는 카페'), 자원봉사활동 마인드를 지닌 인재들이 조합원들 중에 많다, 산지견학, 마르셰 등의 행사는 지역주민에게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 생협, 상품을 이야기하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자고 하여 2013년에는 33 위원회를 조직, 253명이 지역위원들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위원회의 60%가 2013년 새로이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들이니 조합원 조직 활동이 활기차다는 인상을 받는다. 조합원의 생활 구역에서 참가하기 쉬운 활동으로는 식품과 건강을 코치할 수 있는 영양사들을 모집하여 요리교실 '건강 쿠킹'을 개최하여 연 471회, 4,502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2-2) 우리들의 협동조합복지

코프 아이치 탄생의 공통 기반이 되었던 복지정책을 정리한 문서 <우리들의 협동조합복지>(2010.3.11. 확정)에서는 아이치 현의 인구 ·가족 동향, 장기요양보험제도 동향을 정리하고 생활·지역·사회보장의 현재를 진단하여 지역포괄돌봄체계 준비가 시급함을 제기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까지 지역포괄돌봄체계(community care system)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증 요양 상태를 지닌 고령자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예방·생활지원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지역 차원의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때 지역은 차로 30분 이내 오갈 수 있으며 대략 인구 1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중학교 학구를 말한다. 각 지자체는 3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요양보험계획 중에서 지역포괄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복지 거점으로 고령자 상담, 권리보호 및 지역의 지원체제 형성, 치매 예방 등 고령자의 복지 증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역포괄지원센터[16]를 두게 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코프 아이치는 "복지를 통해서, 먹거리의 안전·안심에서 생활의 안전·안심으로!" 이렇게 활동 목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의 복지란 "조합원의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오랜 협동조합 운동 속에서

15) 牛田清博(2015) , pp.62~65.

16) 지역주민의 보건, 복지, 의료 향상, 학대 방지, 예방관리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각 기초 지자체에 설치됨.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 시 제정. 센터에는 보건사, 주임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서 연계하여 일한다.

배양된 자치와 협동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사업이나 활동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생협 조합원, 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그 주체이며 더 나은 생활의 질과 안심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이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생협을 장(場)으로 활용하여 동료를 모아 협동 활동을 일으키거나, 공감하는 동아리 활동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지니도록 함, 고령자, 장애인, 청년, 육아세대, 생활이 궁핍한 자들을 포함하여 지역에 사는 모두가 '피차일반'이란 마음으로 연결되어 생협의 협동 사업과 명확하게 연결시키는 것, 복지 분야에서도 협동조합 원칙인 조합원 자치를 창조적으로 발휘하여, 이용자·가족·이웃이 중심이 되어 복지 직원과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실천을 추진하는 것, 지역의 모든 주체들과 지역 복지네트워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복지에서 핵심은 "사람이 전부"이란 철학이며 실제로 그리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정책문서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방침, 계획을 짜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복지에 관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해서 진심으로 확신하여 열정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전제한다. 왜냐면 복지는 사람을 상대하는 활동이며 일이기 때문이다. 가령,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필요하며 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역 네트워크, 지자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계와 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다양한 신조, 성격,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고 협업해야 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웃고,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서 울고 때로는 감동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가운데 복지의 중심에 사랑과 협동이 있으며 인간을 좋아하게 되며 당사자들의 인간다움이 연마되는 과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복지가 이렇지 않다면 복지는 힘들고 가혹해질 것이다. "사람이 전부"이라는 철학이 배어나오는 복지는 협동조합인들에게 낯설지 않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역량만큼 발전하는 조직으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협동하여) 생활 속의 필요와 문제를 충족,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생, 성장,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프 아이치는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복지 풍토를 만들고 복지 문화를 배양하자고, 조합원 자신이 지역에서 다양한 복지활동을 추진하도록 생협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구체적인 방침은 4절에서 소개한다.

3. 코프 아이치의 협동조합운동: 조합원의 생활을 중심에 두다

3-1) 생활상담 활동

새로 탄생한 코프 아이치는 생협의 사업을 "사람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통해서 시장을 바로 잡고 경제활동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조합원의 생활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동한다.

코프 아이치가 조합원의 먹거리 보장, 생활서비스[17] 제공, 생활의 보장(=복지)과 같이 조

17) 수선수리 알선, 티켓 구입, 여행 및 휴양, 어학연수, 장례 등.

합원의 전 생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아이치 현에 생협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일본 생협의 조합원 조사에서 드러난 평균적인 조합원 연령대 한 여성의 생활을 가상적으로 상정해 본다.

생협이 없는 도시에 살며 3명의 가족이 있는 52세의 전업주부인 가나코 씨는 식생활, 생활서비스를 모두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사고,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대수의 법칙에 기초하여 판매영업비를 포함한 보험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만일의 사태가 터지면 까다로운 신청절차를 거친 후에 겨우 보험보장금을 받게 된다. 불행이 닥치면 심리적, 신체적 충격도 힘든데 혹시나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보험사가 트집 잡아 보장금 지불이 미뤄질까 마음 졸이기 십상이다. 의료와 돌봄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18]이 있어 다행이나 어디를 이용할 수 있을지, 어디가 믿을 만한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한다. 가나코 씨는 홀로 사는 80세 노모가 외롭게 식사하는 게 걱정이다. 노모는 직접 장보기도 힘들어 슈퍼마켓에서 배달을 시키곤 한다. 지금은 그나마 버티지만 노모가 치매를 앓거나 노화가 진행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그 땐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데 비싸기도 하거니와 직원의 학대 사건도 가끔씩 발생하여[19] 안심할 곳을 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처럼 생협 없이 식생활, 생활서비스, 돌봄 모두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면 그것은 각각의 품질을 최대화하여 구매하는 시장거래의 연장선이다. 이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자본주의의 유형에 따르면 제한적인 사회부조와 시장의 극대화를 통해서 대응하는 앵글로 색슨 세계의 자유주의적 복지 실현방식에 가깝다.[20]

그러면 코프 아이치의 조합원으로 생협을 이용할 때는 이런 생활 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화폐를 매개로 식생활과 생활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시장의 교환시스템과 일맥상

---

18)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 하며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40세 이상의 성인남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영어로 long-term care insurance이라 한다.

19) 일본 후생노동성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에 따르면, 2013년도 노인 학대 건수는 15,952 건(보호자가 학대한 건 15,731건,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 221건)이다. 한편, 한국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노인학대 건수는 3,532건, 이 중 2,983건은 가정에서, 246건은 시설에서 발생했다. 두 나라 학대 건수는 모두 노인보호기관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여서 실제 학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20) G.エスピン一アンデルセン・訳：渡辺雅男・渡辺景子 (2000) ,p.239. 에스핑 안데르센은 자유주의적 복지 실현방식을 선호하는 문화, 제도에서는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이들은 시장에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들은 자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족주의적 복지 실현방식을 선호하는 문화, 제도에서는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되 복지 수요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긴밀한 연대로 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며 주로 남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우세하다고 본다. 반면,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기본으로 사회연대로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문화, 제도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실현방식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분석대로라면 일본은 가족주의적 복지 대응에 속한다고 보겠지만 고도경제성장과 핵가족화, 기업 복지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시장에서의 복지 공급을 확대한 현대 일본의 일반적인 복지 실현방식은 가족주의를 넘어 자유주의적 방식이라 하겠다.

통하다. 그런데, 시장 거래를 넘어선 다른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조합원과 생협, 조합원과 조합원,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과 생산자 사이의 '관계'가 엮어내는 추가적인 만족과 안심. 신뢰다. 심지어는 더욱 경제적이다. 코프 아이치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필요와 자원이 연결되어 조합원의 생활 속의 문제를 연계, 협업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된다. 예컨대, 노인을 위한 장보기 지원, 도시락 배달, 조리 지원, 식사모임들은 조합원들의 상호부조, 재능기부와 같은 조합원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혼자서 해먹는 밥이 외롭고 힘들 때 조합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식사모임을 하는 즐거움이 생협과 조합원 모임에는 있다. 생협의 공제는 대수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나 판매영업비가 매우 낮고(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거나 모집하지 않는다) 신청절차는 단순하고 공제보장금 지불은 철저하며 잉여는 매년 총회를 통해서 환원된다. 심지어는, 매년 한, 두 차례, 공제보장금 신청을 잊지 말라는 안내문까지 온다. 코프 아이치가 운영하는 돌봄 시설과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친절해서 안심이다. 직원들이 친절한 이유는 타 곳보다 이직률이 낮고 "생협의 간판을 등 뒤에 달고 있으며" 조합원과 거리감이 없기 때문이다.[21] 조합원은 이용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운영하는 입장인지라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는 마을 모임에서, 대의원 만남의 날, 대의원 총회에서 들어 낯설지 않다. 가족, 지인의 도움을 얻기도 힘든 문제에 직면할 때 코프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정성껏 알려준다.

생협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이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이라면 생협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생협의 다양한 사업과 기능이 연결되어 있어서 조합원은 단순히 화폐를 매개로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과 관계를 통해 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가나코 씨의 노모 집에는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생협의 공급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전달하러 방문한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가 있는데다 생협과 지자체 사이에서 협약이 맺어져 1인 가구 노인의 안부확인을 생협 공급자들이 맡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해 준다. 생협 조합원이라는 멤버십을 공유한 덕분에 관계, 상담기능과 사업 사이에 연계, 협업이 일어나고 조합원의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틀어 생협이 엮어내는 '안심의 네트워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3-2) 코프상담센터의 역할

코프 아이치는 일본의 타 생협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코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조합원의 상품 이용, 민원을 다루는 일반적인 상담창구가 아니다.[22] 이 센터는 조합원의 생활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에 상담을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생협이 상담을 받아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조합원에게 무상

21) 코프 아이치 돌봄 사업 담당자 F와의 인터뷰.
22) 코프 아이치가 운영하는 생협이용에 관한 창구는 '코프 벨'이란 명칭으로 따로 있다.

으로 상담과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야는 크게 소비생활, 가족 생활, 사회(주거) 생활이며 연결해 주는 곳은 생협의 각 부서, 타 협동조합,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다(표3).[23]

표3. 코프상담센터에서 받는 조합원 상담과 알선 내용

	소비생활	가족・가정생활	사회생활
상담분야	생협 이용・탈퇴 상품신뢰・민원, 문의 여가・서비스 사고・보장・공제보험 소비자 피해	집주변 청소, 이불, 피아노 청소, 목욕탕 청소, 수리교환, 육아, 출산, 질병, 이동청소 등, 가사 지원, 가족관계 상담	이사, 운반, 복지용구, 개호승인 및 지원, 통원, 병원간병, 외출, 이송, 독거, 고령, 안심, 시설 및 입소보장, 장례, 묘지, 이웃관계
연결해주는곳	경리부 물류센터, 매장 상품부 생활서비스, 공제, 보험, 여행, 티켓 제휴사 생활 상담실	주거사업, 제휴서비스, 케어 매니저, 복지용구 대여사업자, 가지치기, 생활지원, 도시락배달, 조합원 품앗이 모임, 워커즈 컬렉티브, 생활 상담실	제휴 사업자, 생활지원, 이사업체, 정리업체, 공제, 복지용구 대여사업자, 케어매니저, 방문요양, 지역포괄요양체계, 신원보증 NPO, 장례, 생활 상담실

코프상담센터의 실무를 맡았던 관리직원 M에 따르면[24], 코프상담센터는 조합원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다단계영업, 사기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시절, 생협의 조합원들은 반 모임을 통해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서로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합원들끼리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다. 이 때 '생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당번 세무사, 변호사들이 조합원의 상담을 받아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용했던 조합원들이 고령화되면서 2009년 <코프상담센터>로 전환하였는데 사실 먼저 생활 상담을 시작한 곳은 코프 고베다.

경제위기,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 고령화, 재해, 소비세 인상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조합원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상담을 통해서 알아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뭐든지 좋으니 코프상담센터로 상담하라는 생협의 태세가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안심과 신뢰를 주는지 M는 경험지(experiential knowledge)로서 알았다고 말한다. 현재 연간 상담 건수는 약 1천 건. 가장 많을 때는 3천 건도 있었다. 담당직원은 3명으로 2명은 실제 상담을 받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1명의 관리직은 코프상담센터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역사

23) 向井忍 (2015) 제35회 일본협동조합학회 심포지엄 보고요지에서.
24) 메이킨 생협 출신, 경력 30년으로 다양한 업무를 거친 후 2년 간 관리직으로 코프상담센터를 담당했다. 2016.5.2. 인터뷰.

회의 주체를 발굴하고 생협 내 타 부서와 조율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코프상담센터를 통해서 연결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 협업의 경험에서 코프 아이치는 이후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안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 그 과정은 실천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4. 실천공동체로서의 주민복지활동

4-1) 돌봄의 윤리와 협동, 연대

코프 아이치는 복지를 "조합원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오랜 협동조합 운동 속에서 배양된 자치와 협동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사업이나 활동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생협 조합원, 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그 주체이며 더 나은 생활의 질과 안심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라고 인식한다.[25]

복지를 수혜자(시민)와 제공자(지자체), 복지 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라는 이분법을 넘어 제도적 환경과 자발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복지에 관여하는 당사자들 스스로 만들어 내는 성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필자의 관심을 끈다. 복지란 실업, 질병, 빈곤, 장애, 차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며[26] 좋은 삶(well-being)을 실현하기 위한 도약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전자를 소극적 복지(안전망)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적극적 복지(용수철)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위키 백과에서 복지의 개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 복지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자선행위에서 비롯되는 스티그마(낙인)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최소 수준의 웰빙(생활의 질)과 사회적 지원을 공급하는 것을 함축한다. 이를 '사회적 연대'라고 부른다.[27]

이 개념을 염두에 두면 이 글의 첫 머리에서 상호부조 차원의 복지가 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해진다. 복지가 일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이며, 돌봄을 받는 자와 항시 돌보는 자로 분단이 되어 있다면 소극적 복지는 형식적으로 충족될망정, 내용적인 충족, 더 나아가 적극적 복지로 승화, 실현되는 것은 어렵다. 더욱이 복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에 대립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공적 강제(규제)이거나 힘에 의거하는 것이므로 승자독식과 경쟁 격화를 부추기기 쉽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누리고 서로 지원하고 지원받는 상호부조활동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이 영역이 생기 있게 작동하여야 공적 부조, 즉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도 작동하기 쉽다.

---

25) みかわ市民生協・めいきん生協生協福祉政策検討推進委員会「ユープあいちで創る 私たちの協同組合福祉」(2010 . 3.11)
26) 신광영 (2011),163쪽.
27) 김형미 (2011),33쪽.

일본에서 저명한 사회학자 이마다 다카도시[28]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이나 정의의 이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한다면서,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돌봄은 무엇보다도 타자에의 관심을 중시하며 여차하면 타자에 '관여'한다는 마음 태세에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에게는 돌봄 충동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웃, 어린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전후를 따지지 않고 걱정하고 달려가는 충동이 인간에게는 내재한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돌봄을 배제하는 경쟁사회는 인간의 존재를 삭막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의미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타인의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생애, 타인을 돌보는 마음이 풍성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복지 국가의 비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부조 아니면 당사자의 자조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가족, 지역사회, 각종 단체 등의 중간집단을 매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로 연결되는 것이다. 자조(=시장을 통한 복지 공급), 상호부조(공동체), 공적 부조(=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 특히, 사람은 타자와의 만남, 관계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으므로 호혜적인 지원, 상호부조는 필연적이며 이를 시대와 환경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29]

이마다가 말하는 돌봄의 윤리는 협동과 연대에 기초한 상호부조 없이 성립되지 않는다. 코프 아이치의 복지 철학은 이마다가 강조하는 돌봄의 윤리와 다르지 않다.

4-2) 실천공동체로서의 상호부조활동

어떻게 코프 아이치는 집단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학습하게 되었을까. 필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활동이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CoP)[30]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생각하게 되었다.

실천공동체는 인지과학자 에티엔 웽거와 인류학자 진 레이브가 1991년 발행한 책 『상황학습론: 합법적 주변 참여』[31] 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웽거와 레이브는 유카탄 반도의 산파, 라이베리아의 재단사, 슈퍼마켓의 정육 직원, 미 해병대의 병참 장교 등의 사례를 통해서 신참이 업무 기술과 문화적 역량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탐구했다.

---

28) 今田高俊(1948~), 도쿄공업대학교 사회이공학연구과 명예교수, 일본학술원 회원, 1986년 『自己組織性：社会理論の復活』로 산토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29) 今田高俊(2004)「福祉国家とケアの倫理」『福祉の公共哲学』、東京大学出版会、 pp.225~228.

30) 실행공동체, 지식공동체, 지식실행공동체, 학습공동체로도 소개된다.

31) Lave, Jean and Wenger, Etienne(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편, 웽거는 후일 자신의 책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1998)에서 '합법적 주변 참여'라는 개념 대신 학습사의 이중성과 주변적 궤적, 경계적 궤적을 사용한다.

그들이 도출한 결론은, 신참(학습자)은 고참(활동가)이 속한 공동체에 정식 구성원(member)으로 인정받아 참여함으로써 점차 그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실천들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실천은 고참의 활동, 정체성, 언어와 개념, 방식, 이야기, 문서 등의 인공물, 지식과 실행을 모두 포함한다. 가령, 유명 호텔의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셰프가 되어 정식으로 호텔 주방을 드나들 자격을 얻어 참여하는 것이 학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처음엔 신참이라 청소나 정리, 재료손질과 같은 주변적인 활동부터 참여하나 점차 여러 고참들과 연결되고 협동함으로써 요리의 역량과 관련 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로서의 학습 현상을 웽거와 레이브는 '실천공동체'라고 불렀다.

우리는 종종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지역사회가 좋아진다.",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참여해야 조합이 건강해진다.", "공동체에 구성원이 기여해야 한다."는 언설을 주고받는다. 이 주장은 규범적으로, 연역적으로 옳다. 하지만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건 본인의 선택에 속하는 사항일 뿐이며, 조합원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쉬운 것은 조직일 뿐 조합원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어떤 석연치 않음이 있다. 인식과 설명이 한 쪽으로만 흐르는 일직선이기 때문이다. 실천공동체라는 개념은 역발상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협동조합, 시민조직 등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생의 중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학습과정이라는 것이다. 개인이 공동체에 기여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체가 개인에게 역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상보성을 발견할 수 있다.

4-3) 실천공동체란 무엇인가

이 글은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이 실천공동체의 동학을 보여준다는 필자의 가설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천공동체의 개념과 그 적용을 필자 나름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실천공동체를 검색해 보면 수많은 문헌이 나오며 특히 경영학에서 지식경영의 방법론으로써 조직학습 차원에서 다루는 문헌과 연구가 두드러진다. 필자는 웽거의 책 《실천공동체》[32] 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실천공동체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웽거의 발상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치 활동의 본질과 확장 가능성,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self-assembly)[33]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32) 에티엔 웽거 지음/손민호·배을규 공역, 학지사, 2007년.

33) 외부 시스템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현상. 주로 자연계에서 관찰된다. 오픈 스테이지 테크놀로지(OST) 창시자 해리스 오웬의 발상도 참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21722035&code=100203

먼저 웽거는 학습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제시한다.

표4. 학습이론의 대비[34)]

· 학습은 개인적인 문제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 학습에는 시작과 종료가 있다. · 학습활동과 다른 활동 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 학습은 누군가에게서 의도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는 학습에서 부차적인 사항이 아닌 근본적인 사항이다. · 지식은 가치 있는 사태나 일을 처리하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과학적 탐구를 한다든지, 기계를 수리한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소년 혹은 소녀로 자라난다든지 하는 일이다. · 안다는 것은 그러한 사태를 추구하는 데 참여하는 문제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말이다. ·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일종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의미란 우리가 세상에 관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능력을 말한다.

오른쪽 표가 웽거의 학습이론에 관한 가정이다. 학습이란 누군가와 함께 어떤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활동 집단의 참여자로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 과정에는 의미, 실천, 공동체, 정체성의 요소가 있다. 지식이나 앎은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 경험의 의미를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부차적 산물이다. 따라서 학습은 실천지(實踐知)로 드러난다. 즉, 의미를 공유하고 해석하여 역량체제(regime of competence)로 만들어내는 지적 능력이다. 역량체제는 호혜적 관여(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공동업무에의 책무성(실천공동체의 일을 이해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공동 자산에 대한 협상 능력(공동 자산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실천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어떻게 길러질까. 웽거는 인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기를 수 없으며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진다고 본다. 그렇다고 공동체의 집단수준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역량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개인들 자신이 해당 실천에 참여하는 만큼 갖출 수 있는 구성원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35)] 학습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여 역량

34) 위 책, 19, 22쪽.
35) 위 책, 201쪽.

을 만드는 행위다. 따라서 공동체의 실천의 변화, 발전에 있어서 구성원의 경험과 역량 사이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기제가 된다. 학습은 지식의 혁신과정이며 경험과 역량의 관계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강조하면, 경험이 역량을 규정하고 역량은 경험을 낳기 때문에 실천공동체는 신참들에게 학습을 위한 공간이자 그들의 새로운 통찰력이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이 된다.[36]

실천공동체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대화하고, 성찰하고 교류하는 한편, 물리적이며 개념적인 인공물을 생산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천공동체에서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어휘, 낱말들 (가령 생협, 자치, 협동, 안심, 신뢰), 수단(워크숍, 토론회), 이야기(선구자들의 전통, 선배들의 헌신), 문서, 참고자료, 객체화된 형태 [37](논문, 전시물)들이다. 참여가 없는 인공물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며 인공물이 없는 참여는 일시적이며 정착하지 못하고 의미의 협상과 조율에 사용하기 어렵다.

Lave & Wenger(1991) 이외에도 J.Brown & P. Duguid(1991)는 실천공동체를 일과 학습,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탐구하고 2002년 웽거와 경영학자들과의 공저《실천공동체 육성하기》[38] 에서는 실천공동체를 육성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는 실천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를 영역, 공동체, 실천으로 단순화하고 실천공동체를 육성하는 방법으로써, ① 진화를 전제로 설계하며 ② 내외부의 관점에서 개방적으로 대화하고 ③ 다양한 차원의 참여를 권장하여 ④ 공식, 비공식적 공간을 만들며 ⑤ 가치에 초점을 두고 ⑥친근감과 자극을 결합하고 ⑦ 공동체의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방법론도 발전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최근에 웽거는 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실천공동체를 “스스로 실천하는 그 무엇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을 공유하며 어떻게 더 잘 실행할지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했다.[39] 그러므로 반드시 공동체로서의 외형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거꾸로 공동체의 외형을 갖추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에서 참여의 체험이 의미로 구현되지 않으면 실천공동체라 하기 어렵다. 실천공동체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독창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참여행위가 일어나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구성원끼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서 개인에게 역량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실천공동체 개념은 많은 분야로 보급되고 적용되었다. 기업의 조직이론 및 공공부문에서는 활동가들의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기법으로[40], 교육계에서는 학습기회 설계, 국제기관에

---

36) 위 책, 313쪽.

37) forms of reification. ‘객체화된 형태’란 표현은 생소한데 웽거는 이 어휘는 문자 그대로 “대상으로 만들어 내다” (making into an object) 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Wenger, Etienne(2009), p.1.

38) Wenger, E.,McDermott, R. & Snyder,W.M(2002) *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39) http://wenger-trayner.com/introduction-to-communities-of-practice/

40)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 조직문화 혁신이나 지식경영 측면에서 실천공동체에 주목한 연

서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조직혁신의 발상과 학습기법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일방적인 돌봄 수혜가 아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파트너십 구축의 발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비판도 적지 않다. 주요 비판[41]은, 실천공동체는 개념이 새로워 보이나 근대 수공예 기술 습득의 학습현상에서 도출한 개념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현실에서는 힘(권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공동체라는 표현은 그 공동체가 조화와 동질성을 이루고 있다는 낭만적인 환상을 주기에 딱 좋다. 현실에서 공동체, 지역사회, 조직은 차별과 배제, 갈등과 억압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이란 동전의 뒷면과 같이 쇠창살과도 같이 다양성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웽거는, 실천공동체가 권력에 관한 정치이론이 아니라 학습이론임을 강조하면서도 힘(power)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다.[42] 예컨대, 실천공동체의 세 가지 핵심 속성으로 호혜적인 관여, 공동업무에의 책무성, 공동 자산에 대한 협상 능력이 있다. 이 중 책무성을 무어라고 정의할지, 역량의 질을 누가 평가할지는 사실 힘(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배움은 역량으로 드러나는데 역량의 평가 기준은 공동체의 발전 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역량이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책무성은 훨씬 수평적으로 바뀌면서 호혜적인 관여와 공동 자산에 대한 협상 능력을 높이게 되므로 공동체의 발전 정도가 더 좋아지는 순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주고받음을 웽거는 '의미의 교환 시스템'(economies of meanings) 이라 불렀다. 학습과 힘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의미의 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가치 비교와 판단, 협상을 조절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실천공동체의 사례연구는 수공예 집단과 고도로 조직화된 조직체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과 같이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된 시대에는 공동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여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웽거는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구조화 과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43] 실천공동체는 구성원끼리 연결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네트워크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공동체에는 네트워크에는 꼭 필요치 않은 영역과 관여행위를 수반하는 동일시[44]가 있다. 공동체와 네트워크는 서로 보완적인 장단점이 있다. 만약 공동체에서

구, 사례 도입이 두드러진다. 가령,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행한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라는 용어로 기업 "관심사, 문제나 주제에 관한 전문성과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 분야에서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식공유와 창조를 위한 문화 조성에 관심이 더 있다. 주용국·김수원 (2003), 8쪽. 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경영자, 관리자층이 지식경영을 강조한 나머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학습 설계가 과도하게 앞서거나 포괄적인 역량 강화보다 특수한 지식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은 레이브와 웽거가 개념화한 실천공동체의 본질을 왜소화하거나 전도본말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한다.

41) Barton, David and Tusting, Karin(2005) *Beyond communities of practice: language, power,and social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nger(2009),p.8에서 재인용,

42) Wenger(2009), p.8.

43) Wenger (2009), p.10.

44) 동일시(identification)는 관여행위, 상상, 조정행위를 통해 특정 공동체와 유대감을 형

동일시가 너무 강하면 공동체는 집단사고, 폐쇄성, 근친교배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타 공동체와의 연계를 장려하는 것은 이런 경향을 흔들면서 경계를 개방하는 장점을 발휘하게 된다. 반면, 네트워크는 유동적이며 참여 역시 제한적이다. 이럴 때 공동체의 속성을 가미하는 것은 협력적인 계획을 성사시키고 파트너십을 배우는 능력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복되지만 실천공동체라는 발상은 우리에게 개인이 어떠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생에 필요한 역량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영감을 준다. 학습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서 참여하는(membership) 실천 행위를 통해 의미를 공유하고 협상하며 정체성을 습득해 나가는 현상은 구성원 각자의 역량 습득으로 이어진다.

4-4) 실천공동체로서의 주민복지활동 :코프 아이치의 두 사례

(4-4-1) 토요하시 시 조합원 복지활동 사례 <생활서로돕기모임>[45]

(くらしのたすけあいの会, Kurashi no tasukeai kai)

코프 아이치의 복지사업 및 활동은 주로 고령자 복지에 초점이 있다. 그 배경은 <표5>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표5. 아이치 현의 인구, 노령화, 개호, 치매 추이

	2012년 (a)	2007년 (b)	증가율 (a/b,%)
총인구 (명)	7,425,952	7,351,713	1.01
65세 이상 (명)	1,577,699	1,359,126	16.1
노령화 율 (%)	21.4	18.5	5.7
일반가구 (세대)	2,929,943	2,724,476	7.5
노인부부가구 (세대)	278,356	223,567	24.5
노인단독가구 (세대)	217,326	167,609	29.7
65세 이상 요개호 인정자 (명)	227,656 (2011년)	188,398	20.8
치매 노령자 (명, 추계)	125,525	100,912	24.4
총 개호급부 (천 엔)	318,747,003	254,094,972	25.4
1인당 개호급부 (엔)	1,400,100	1,348,700	3.81

출처: Aichi Healthy Aging Support Center에서 필자 재구성

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는 과정. 에티엔 웽거 지음/손민호·배을규 공역, 280쪽.

45) 생활서로돕기, 생활서로돕기모임이란 용어는 일본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일반명사처럼 쓰일 만큼 보급한 만큼 여기서는 코프 아이치의 모임을 지칭할 때는 < >를 붙인다.

2007년에서 2012년 5년 사이에 아이치 현에서는 총인구 증가율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율이, 노령인구 증가율보다 노인 가구 증가율이 더 높다. 특히, 치매 고령자 수는 2020년에 176,24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2012년에 비하면 증가율이 40.4%나 된다.[46]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2010년 사회보장급부비 중 68.1%를 노인을 위해서 지급했다. 일본 정부가 지역포괄돌봄체계로 전환하고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와 세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 다가온다.

코프 아이치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중시하여 "급속한 노령화, 2015년 아이치 현은 노령자 약 177만 명, 노령화 율 24%를 넘게 된다.", "부부 포함해서 연소득 400만 엔 미만 가구가 38%, 2000년에는 22%였다."(코프 아이치 <제2차 중기발전계획>의 기조)라는 상황 인식 속에서 복지 사업과 활동에 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노인돌봄사업(17개 돌봄 시설 운영 및 재가, 방문요양)이며 주요 활동은 생활서로돕기 활동, 복지기금제도[47]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서로돕기 (くらしのたすけあい)활동은 1983년 나다고베생협(현, 코프 고베)에서 시작했다.[48] 원래 발상은 조합원들끼리의 일상적인 상호부조활동이며 보급,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회원제, 유급 자원 활동, 생협의 보조 및 지원이란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일본생협연합회(JCCU)에 따르면 2013년 전국 55개 생협, 2 연합회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연간 활동회원은 2만7,652명(94%는 여성), 연간활동시간은 연 162만5,469 시간이다. 활동 내용은, 주로 생활지원(정원 손질, 창호지 수선, 목공, 가구 이동, 병원 나들이 지원, 아이 돌봄 등)이다.[49]

코프 아이치의 <생활서로돕기> 활동은 합병 이전 1991년(메이킨 생협), 1993년(미카와 시민생협) 시작되었다. 미나미의료생협을 비롯한 의료생협의 복지활동이 자극제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중요한 특징은 회원을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점이다.[50]

---

46) Aichi Healthy Aging Support Center.

47) 2009년 합병 과정에서 설치. 코프 아이치의 순이익 중 일부를 충당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주민의 자발적이며 계속적인 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 205단체, 2,085만 엔을 지원했다. 고령자, 장애, 육아를 포함해서 누구나 안심하며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한다.

48) 成田直志(2005)「社会福祉と生協」『現代生協論の探究：現状分析編』、p.363.

49) http://jccu.coop/info/newsrelease/2014/20140828.html

50) 필자가 인터뷰했던 활동가 S는, 비조합원에게도 개방했다는 점 때문에 전국 교류회에서 타 생협 참가자들로부터 '생협의 원외이용금지 원칙'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들은 적이 있으며 그러한 시선이 불편하고 억울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합병 전 미카와 시민생협에서는 생협 경제사업의 이용은 조합원만 하더라도 복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생활서로돕기모임>의 회원을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했고 이런 발상은 1995년 고베 지진 후 타 생협에서도 보급되었다고 회상한다.

생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회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협력회원이라 부르고 기부를 통해서 이 활동을 지원하는 회원을 찬조회원이라 부른다. 회원은 매년 1천 엔의 회비를 내고 이용회원은 1시간 이용 당 800엔과 협력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협력회원은 1시간 당 700엔과 교통비를 받는다. 차액이 사무국의 운영 재원으로 쓰인다. 코프 아이치 탄생 1년 후인 2011년 회원은 2,001명(이용회원 516, 협력회원 850, 찬조회원 635명), 연간 활동 시간은 33, 624시간이었다. 2015년 회원은 2,007명 (이용회원 970, 협력회원 535, 찬조회원 502명), 연간 활동 시간은 39,100시간이다. 활동 내용은 타 생협과 그리 다르지 않은 바, 외국인 주민의 산후조리 지원도 있다.

2010년 12월에 실시한 협력회원 설문조사(N=234)에 따르면[51] 응답 회원의 89.7%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60대(35.2%), 50대(27.9%), 40대(19.1%), 70대(11.4%), 30대(5.7%), 20대(0.7%)로,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활동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충실감을 느낀다.' 27.0%, '만족하는 편이다.' 44.2%로 비교적 긍정적인 대답이 많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가 30대(33.3%)라는 점이 특이하다. 활동비에 관해서는 '타당하다'는 대답이 51.8%, '부족하다고 여기나 불만은 없다'는 대답이 35.1%였다. 30대의 '타당하다'는 대답이 64.3%로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다. 협력회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생협 홍보(40.3%)와 지인(33.9%)의 권유가 많았는데 자신의 체험(4.4%)도 드물게 있었다. 피차일반이라는 이념의 상호부조와 활동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치한다.'가 40.9%, '불일치'가 17.1%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생활서로돕기 활동에서 불만스러운 점과 좋은 점, 감동을 받은 점을 개방형 질문으로 던졌다. 그러자, 전자의 응답 수는 59 건, 후자는 199 건이었다. 불만을 느낄 때는 피차일반이라는 상호 존중이 느껴지지 않아서 자신의 활동이 저렴한 가사도우미처럼 취급받는다는 기분이 드는 경우이며 좋거나 감동을 받는 이유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이용회원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실감해서라는, 인간의 이타적, 호혜적 본성이 충족되었을 때가 많았다.

<생활서로돕기모임>을 관찰하면 실천공동체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협력회원들은 생협, 지인의 소개로 회원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설명회, 교류회에서 코디네이터와 선배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 경험을 의미화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며(이념과 활동의 일치) 타인을 지원하는 역량을 습득한다. 동시에,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동하여 역량 습득보다 좌절,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천공동체는 일련의 경험과 참여자들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반복하는 속성을 지닌다.

코프 아이치의 <생활서로돕기모임>은 위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도 운영 중이다. 협력회원 수가 줄어든 이유는 협력회원

51) ユープあいち くらしのたすけあいの会検討委員会「"くらしたすけあいの会"の検討課題と発展方向」(2011年5月27日).

이 이용회원으로 바뀌거나 실질적으로 활동 기회가 적은 회원들이 찬조회원으로 전환하거나 그만두었기 때문이다.[52)]

토요하시 시 (인구 37만 명)의 <생활돕기활동모임>의 경험은 코프 아이치의 노인 돌봄시설의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했다.[53)] 미카와시민생협 시절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생활서로돕기모임>이래, 생협의 복지 활동은 지자체의 신뢰를 받아 토요하시 시에 새로운 돌봄 시설을 개설할 때 지역포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고 '생활·요양지원 서포터 양성강좌'[54)]를 위탁했다. 또한 합병 당시 이사로 재임하면서 새로운 복지비전과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활동가 N(73살)은 <생활서로돕기모임>을 모델로 삼아 복지활동모임을 마을에서 만들어 운영한다. '소소한 원조를 행하는 자원봉사모임'이란 명칭의 이 조직은 3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200엔의 교통비만 받고 행한다는 취지로 2015년 7월에 설립했는데 자원봉사자 회원 100명, 이용자가 40여 명이다. 형광등 갈아 끼우기, 열쇠 수리, 정원수 가지치기,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이다. 예전이라면 직접 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소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어 화가 치밀고 갑갑하지만 포기하고 지내고 있는데 선의로 나서서 돕는 이들을 동네에서 선뜻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의외로 큰 기쁨과 안도감을 주어 생활의 고통을 완화해 준다. 일종의 윤활유, 청량제인 셈이다. 이 활동의 효과(impact)를 N은 "무뚝뚝 체념한 얼굴에서 생기가 돌며 기뻐하는 모습, 소문이 나서 나도 할 일이 없냐고 찾아오는 주민, 나이 들었다고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할 일이 있다는 활력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이라 표현했다. 이 모임은 한 달에 두 번, 토요하시 시 코프 아이치의 신가와 요양시설에 찾아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4-4-2)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코프 아이치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 내 왕성한 연계와 네트워크로 이어진다. 코프상담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점차 노령화하는 조합원들의 일상생활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협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주민조직, 지자체와 연계해온 경험 속에서 탄생한 복지 사업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 NPO 아이치 안키[55)] 네트워크: 코프 아이치, 나고야 제일법률사무소(변호사·직원 60명), 세무법인 OTA이 세운 시민단체로 고령자의 신원보증, 금전관리, 유언장 작성, 성인후견, 사후 채무관계정리, 장례지원, 납골·묘지, 상속 실무 등을 대행한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서비스는 유료, 나고야제일법률사무소의 비전은 "모든 개인이 존중받으며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를

52) 위 인터뷰에서.
53) 토요하시 시의 조합원 수는 20,077명(2016년 4월 현재), 세대 수가 144,492가구이니 조직률은 20.1%로 코프 아이치 전체 조직률 14.55%보다 높다.
54) 노령복지제도의 하나로서, 노인과의 소통능력 함양, 권리옹호 등 노인의 생활과 요양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강좌.
55) '안키'는 아이치의 말로 편안, 안심을 뜻한다.

만들고 계속적으로 사람과 사회에 공헌함", OTA 세무법인의 이념은 "복지·평화의 현장에서 공헌하는 세무사무소"이다.

■ 저소득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활동: 기타의료생협[56]과 나고야 제일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센터를 운영. 기타의료생협은 강사 모집, 나고야 제일법률사무소와 코프 아이치는 학습지원센터 공간을 제공한다.

■ 사단법인 협업·꿈 프로젝트: 2010년 코프 아이치, 미나미의료생협, 대학생협 3자가 미나미 병원 내 매장(식당, 매점, 카페) 운영 성공을 위해 발족했다. 초기 2년간 이 매장운영은 적자였으나 3년차에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흑자로 전환했다. 2년차부터는 신규채용 합동설명회, 협동조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획, 삼자간 교류회를 열고 있다.

■ 지역사회 상담지원 네트워크 만들기: 코프 아이치와 아이치 현의 협업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이치 현을 5개의 지구로 나누어, 지구별로 주민의 생활 상담, 복지 지원, 주민 교류 등의 사업을 펼치는데 산간 과소화 지역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농협, 생협, NPO 등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 교류 살롱 개최, 장애인 작업소 설치, 1인 가구 안부 확인 등을 행한다.

합병을 검토하던 시점부터 두 생협은 '생활안심 네트워크'를 구상했다. 이 구상은 2007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토론에 토론을 거쳐 아홉 번이나 개정되었는데, 지금은 ① 보통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네트워크 (주민회,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상점가 활성화, 직거래시장, 과소지역 장보기 지원, 어린이 광장, 고령자 살롱, 육아동아리 지원, 외국인 무료 건강점검), ② 삶의 권리(존엄)을 지키는 보장 네트워크 (NPO 안키 네트워크, 소비자피해방지 네트워크, 실직자 취업지원), ③ 생활을 지원하는 상담능력과 사업연계의 네트워크 (코프상담센터, 무료법률 상담, 복지사업, 장례사업), ④ 지역을 활기 있게 만드는 생활지원네트워크 (도시락 배달그룹, 생활서로돕기모임, 워커즈 컬렉티브), ⑤ 재가복지를 지원하는 협업 네트워크 (아이치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자 간담회, 의료생협· 복지사업시설·지자체 제휴, 사단법인 협업·꿈 프로젝트)로 실천이 뻗어나가고 있다.[57]

(4-4-3) 실천공동체가 생산하는 역량과 가치

실천공동체로서 조합원의 실천이 주민복지활동으로 확대될 때 어떠한 역량을 부여하고 있을까. 필자는 이를 파악하고자 두 가지 시도를 했다. 하나는, 2010년 12월에 실시한 협력회원 위 설문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199건을 일정한 범주로 분류해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몇 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어휘와 언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

56) 나고야 시 북구를 중심으로 활동. 1966년 377명의 발기인이 창립. 현재 1개의 종합병원, 5개의 의료시설, 4개의 요양시설을 운영. 조합원은 3만2천 명. 나고야 시에는 미나미의료생협, 기타의료생협, 미나토의료생협이 있다. 반 활동을 중시한다.

57) ユープあいち(2010)「安心して暮らせるネットワークのつどい」第9版、文責 向井忍.

표6. 코프 아이치 <생활서로돕기모임> 협력회원 설문조사 개방형 질문 답변 분류(N=199)[58]

분류	빈도 수 (비율)	답변내용(발췌)
① 협력회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배우게 된 충실감, 역량 강화	45 (21.6%)	· 활동을 마칠 때마다 경험이 쌓인다는 자각이 생긴다. · 서로 관계하면서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 사물을 다면적으로 보게 되었다. · 발족 당시부터 회원이 되어 활동하면서 많이 배웠다. 시각장애인의 장보기 보조를 하면서 색, 분위기 설명방법 등 · 고령자의 지혜, 물건을 아끼는 생활자세 등 오히려 접하면서 배우는 게 많다. · 요양보호사 자격을 땄으나 자신이 없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생겼다.(사람을 대하는 법) · 가끔씩 열리는 강좌가 좋았다.
② 자신의 봉사로 타인이 기뻐하고 감사를 받을 때의 충실감과 기쁨	98 (49.2%)	· 내가 조금 도움으로써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기쁘다. · 특별한 능력도 아닌데, 홀로 남은 자신의 식사를 차려주었다고 감격하는 표정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가족에게선 별로 못 듣는 말) · 내가 도움이 된다고 실감할 때 기쁘다.
③ 만남과 교류에서 오는 만족감	36 (18.1%)	· 고령자 이용회원은 청소나 병원 왕래 보조 시 많은 이야기를 한다. 기본은 말 상대를 하는 것인데 서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서로 이어져서 행복하다. · 처음엔 인도인이 요청해서 곤혹스러웠으나 몇 차례 오가며 이제는 신뢰 관계가 생겼다. · 동료들이 늘었다.
④ 기타	20 (10.1%)	· 장기요양보험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원해서 다행이라고 여긴다. · 활동비가 소액이어서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기분이 든다. 일이 아니므로.

출처: ユープあいち くらしのたすけあいの会 検討委員会「“くらしたすけあいの会”の検討課題と発展方向」(2011年5月27日)에서 필자 정리.

58) 199건의 답변은 서술식이라 임의성이 클 가능성이 있어 필자가 2회 분류한 빈도 수 합의 평균값으로 제시한다. 첫 째와 두 번째 분류 시 ①, ②의 빈도수는 일치했으며 ③은 두 번째 분류 시 2건이 적었다.

[4]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

코프 아이치 토요하시 시의 활동가, 직원, 복지담당 직원들은, 생협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59]

돌봄을 받아야 할 연령인 내가 자원 활동 단체를 만들다니... 문제를 느끼면 같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게 생협의 방식이어서. (생협 활동가 N)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생협 활동가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 (생협 활동가 S)

이전 일했던 복지시설에선 경영이 우선, 직원과 이용자는 뒷전이었으나 생협에선 하고 싶은 복지를 할 수 있다는 평판을 들어 생협에 왔다. 10년 지난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돌봄 시설 직원 M)

생협의 간판을 달고 있다는 의식이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허투루 할 수 없다. (돌봄사업 지구총괄 직원 F)

여기는 융통성이 있어서, 음악이 있고 외출을 자주 해서 꽃구경하니 좋고 직원들이 좋다. 생협,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거 안다. (신가와 데이 서비스 센터 이용자 고령자 3인의 여성, 본인들은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어서 생협과 조합원의 주민복지활동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먹거리 안전·안심의 연장선에서 신뢰가 가장 크다. (관리직 직원 M)

협동조합 제휴 시 협동조합이란 그 자체로도 의사소통이 잘된다. 경영, 목표, 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꽤 공통적이다. (관리직 직원 M)

<소소한 원조를 행하는 자원활동모임>은 거점이 없으나 연락하기 쉬우라고 생협 사무실 번호를 유인물에 표시해 놓았다. 그랬더니 생협이 하면 안심이라고 이용자들이 의뢰한다. 원조 받으려면 집안에 사람을 들여야 하는데, 생협에서 하거나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동네 주민들이 안심한다. (활동가 N)

이용자나 자원 활동가나 지자체보다 생협이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활동가 N)

생협은 지자체나 주민조직이 해보지 않은 것을 했고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긴 것 같다. (활동가 S)

다른 돌봄 시설도 있으나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협이 하니까 믿고 이용한다고 말한다.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도 생협 시설임을 알고 이용한다. (돌봄사업 지구총괄 F)

생협은 크니까 안심한다는 이용자 가족도 있다. 영세한 돌봄 시설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기 때문에. (돌봄 시설 직원 M)

59) 2016.5.2. 토요하시 시 신가와 데이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피차일반이라는 공감, 고통에 빠진 이웃을 돕는 노동에서 찾는 기쁨과 긍정 에너지, 사회적 상호작용(만남과 교류)의 중시, 신뢰와 안심. 협동조합의 복지가 지역사회에 전하는 가치, 어휘 중 가장 많은 것은 이것들이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어, 활동가 N과 S는 민주주의도 언급했다. 주민조직 모임에 가보면 토박이, 남자 노인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론 모임이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완장만 차고 있다고. 여기에 생협의 조합원들이 출석하면서 민주화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면서도.

5. 맺으면서

생협이 조합원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공제, 생활서비스, 복지까지를 아우르는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코프 아이치만의 사례도 아니며 일본 지역생협의 공통된 특징이다. 코프 아이치에서 돋보이는 점은, 조합원, 지역사회, 복지라는 관점을 모든 사업과 활동의 중심에 놓고 복지사회 실현에 불가결한 상호부조를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 활동은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주거와 가까운 곳으로 편재하고, 복지 활동은 협동조합의 자치와 협동의 연장선에서 조합원의 자원 활동이 지역사회에 스며들도록, 조합원도 비조합원도 함께 주민복지활동의 일환으로써 펼치고 있다. 이 때 생협 조합원들이 조합원 활동을 통해 배양한 마음가짐, 활동노하우(경험지, 암묵지), 신뢰는 중요한 역량이 된다. 지역사회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모든 주체와 협업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발상과 실천은 다양한 형태의 안심 네트워크로 엮어지고 있다. 인구 추계를 보면 향후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돌봄 부담, 소득감소, 과소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지자체, 협동조합 및 NPO, 주민조직이 협업, 연계하여 지역포괄돌봄체계를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태세가 엿보인다.

코프 아이치의 복지 활동, 특히, <생활돕기활동모임>과 협업·꿈 프로젝트, 저소득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활동은 실천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지녔다. 실천공동체는 회원으로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신참과 고참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고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학습현상을 뜻한다. 각 실천공동체는 나름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기동력이 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실천공동체들이 만나고 협업할 때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게 각 실천공동체의 내부에 자극을 주고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상호 변용하는 실천공동체들의 네트워크가 참여자들의 역량체계를 강화하여 구성원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2015년 8월 일본 생협의 싱크탱크인 생협총합연구소(CCIJ)가 연구, 기획한 책이 이와나미서점에서 출판되었다. 제목은《2050년 초고령사회의 커뮤니티구상》. 이 책의 제언에서 2050년에 확실하게 다가올 일본 사회의 미래 모습은 '초고령, 소자녀, 인구감소, 1인가구, 그리고 건강한 노인'이다.

100명의 마을이라 한다면 19세 이하 13명, 20~69세 55명, 70세 이상 32명의 마을이 된다. 42%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런 초고령사회에서 일상의 생활,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 책에서는 "모임의 집"(集いの館)이란 구상을 제언했다.

> 초등학교 학구, 건강한 노인, 그리고 '모임의 집'이 주축이 된다.
> 전국 1만 5천 개의 학구 모든 곳에 건강한 노인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모임의 집'을 만든다. 크기는 약 90평. 그 중 30평은 그날 먹을 식재료와 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 형태의 매장, 60평은 무엇이든지 상담할 수 있는 코너와 영아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편히 들리고 교류하고 돕는 프리 스페이스로 구성된다.
> '모임의 집'은 더 이상 혈연이 아니라 지연 가족처럼 지내는 주민들의 '집'이자 플랫폼이 된다.
> 건강한 노인이 당번을 정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모든 생활 상담에 응하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육아 세대 가족, 어린이들을 돌본다.[60]

'모임의 집'은 지역사회에서 자동차 바퀴의 축과 휠(hub & spoke)처럼 기능하고자 한다. 모임의 집은 허브 기능을 하고 거기서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 기능은 타 기업, 단체, 개인이 맡고 연결한다. [61]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예측하며 일본의 협동조합 계에서 구상하는 비전은 지역사회의 쇠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협동조합이 실천공동체로서 작동하는 것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경제적 조건, 생활협동조합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은 다르기 때문에 코프 아이치의 경험에서 곧바로 시사점을 얻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한국 사회에서 생활협동조합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왕성한 토론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62]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을 지켜야 한다. 조합원의 생활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이 좋아져야 조합원의 생활도 좋아진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역량을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생협의 조합원 활동이 신뢰와 안심의 식품체계를 실현하는 사업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한 세대를 일구어 왔다면 이제는 조합원의 생활과 복지 실현을 위해 또 한 세대의 활동과 사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무대는 지역사회이지 않을

---

60) 若林靖永・樋口恵子編 (2015)『2050年超高齢社会のコミュニティ構想』、p.5.
61) 白鳥和生「地域の核としての『集いの館』の可能性」,p.114. (위 책의 제6장)
62) 신성식은 2008년 '생협의 소비는 윤리적 소비여야 합니다.'의 글에서는 미래를 위한 생협의 선택을 ① 인간적인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②고령화, 핵가족 사회에 대한 준비 ③ 세계 식량 체계의 불안전성 극복 ④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열거하고 고령화, 핵가족 사회에 대해 생협은 문화와 복지를 결합한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협평론》 준비호, 41쪽.

까. 자치와 협동의 조합원 활동은 지역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실천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역동적인 연계, 협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이 사례연구가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Etienne Wenger 저/손민호·배을규 공역, 《지식창출의 사회생태학: 실천공동체》, 학지사, 2007.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해리 덴트 지음/권성희 옮김,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청림출판, 2014.

손종칠·윤재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재편방향 연구>, 기획재정부, 2015.

(사)한국자원봉사포럼·(사)한국자원봉사학회공편, 《자원봉사의 NEW 패러다임》, 지문당, 2016.

주용국·김수원, <기업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신성식, '생협의 소비는 윤리적 소비여야 합니다.' 《생협평론》 준비호, 아이쿱생협연합회, 32~43쪽, 2008.

신광영,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사람과 정책》 창간호, vol.1, 154~163쪽, 2011.

김형미,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생협평론》 4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32~42쪽, 2011.

Brown,J.S. and Duguid,P. 1991.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mmunities-of-practice :Toward a unified view of working, learning, and innov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 2, No.1, pp.40~57,1991.

Wenger, Etienne. 2009. Communities of practice and social learning systems: the career of a concept. accessed at:
http://wenger-trayner.com/resources/publications/cops-and-learning-systems/

G.エスピン一アンデルセン・訳：渡辺雅男・渡辺景子(2000)『ポスト工業経済の社会的基礎 - 市場・福祉国家・家族の政治経済学』(G.Esping-Anderson.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塩野谷祐一・鈴木興太郎・後藤玲子編(2009)『福祉の公共哲学』、東京大学出版会.(초판2004)

若林靖永・樋口恵子編(2015)『2050年超高齢社会のコミュニティ構想』、岩波書店.

成田直志(2005)「社会福祉と生協」『現代生協論の探究：現状分析編、生協総合研究所.

松本雄一(2012) 「実践共同体概念の考察：3つのモデルの差異と統合の可能性について」『商学研究』60号2巻、pp.163~202, 関西学院大学。

向井忍(2015)「地域における『生活協同』と生活協同組合の役割・制約・可能性～愛知における実践を踏まえて～」、第35回日本協同組合学会大会報告

牛田清博(2015)「合併生協における『組合員参加と運営のしくみ』づくり～ユープあいちの取組み」『にじ』649号、JC 総研

[코프 아이치 제공 문헌]
『語り継ぐめいきんのDNA』、名古屋勤労市民生活協同組合、2009年
(이야기로 잇는 메이킨의 DNA/나고야근로시민생활협동조합)
『みかわ市民生協創立35周年記念誌：つながって～創立から明日へ～』、みかわ市民生協、2010年(미카와시민생협 창립35주년 기념지: 이어서~창립에서 내일로~/미카와시민생협)
「ユープあいち 第1次3ヵ年計画」、2010年 (코프 아이치 제1차3개년계획)
「ユープあいちで創る 私たちの協同組合福祉」、2010年
(코프 아이치에서 만드는 우리들의 협동조합복지)
「“くらしたすけあいの会”の検討課題と発展方向」、2011年
(생활서로돕기모임의 검토과제와 발전방향)
協同ロードマップ「地域における支え合い事業～民間の主体的な相談支援ネットワークによる多様な生活課題への対応～」活動報告書、2012年
(협동로드맵 ‘지역에서의 상호부조사사업: 민간의 주체적인 상담지원네트워크에 의한 다양한 생활과제 대응’ 활동보고서)
「2020年ビジョン 第2次中期計画（案）」、2013年 (2020년비전 제2차 중기계획)
「ユープ地域福祉」展開モデルづくり報告書、2014年
(코프지역복지 전개 모델 보고서)
「ユープあいち新しい福祉政策：”協同助け合い”の輪をつなげ遂げる私たちの地域福祉」、2015年 (코프 아이치 새로운 복지정책: ‘협동과 서로돕기’의 원을 만들어내는 지역복지)
『第6回通常総代会議案書』Ⅰ・Ⅱ、2015年 (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서)

[웹사이트]
코프 아이치 http://www.coop-aichi.jp/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http://jccu.coop/
Aichi Healthy Aging Support Center
http://www.ahv.pref.aichi.jp/kaigo/data/index.html

[감사의 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인터뷰 알선 및 조정, 서면질의에 응해준 코프 아이치 우시다 기요히로(牛田清博)님, 스기하라 마사히로(杉原昌博)님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대 담

대담자

신동욱_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허준기_고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황지애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화령_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김형미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창진_성공회대학교
염찬희_성공회대학교
박종현_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정희_율목아이쿱생협

국가, 공공정책, 협동조합
-지역사회 생활정치를 위한 인식론적 기초와 전략 구상

김창진[1)]

1.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곧 "사회생활의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다소 지나치다면-공적 영역과 구별되는, 개인들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도 존재하므로-"거의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각자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힘을 갖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의 불순한 음모나 더러운 권력투쟁이라는 세속적 이해, 또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D. 이스턴)이라는 정태적인 학술적 정의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형성 및 변화, 그리고 그것(그러한 제도 형성 및 변화)을 주도하는 정책의 생산 및 집행에 관여되는 실천과 인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실천 방식은 그 대상에 대하여 평소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관념과 태도에 의해 틀지워지며(framing), 거꾸로 그 실천의 결과 또는 효과에 따라 기존 인식이 더욱 강화되거나 수정되기도 한다.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라는 주장은 먼저, 우리가 평소 '정치'와는 다른-심지어 무관한-영역으로 여기는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여가생활과 인간관계 등등 거의 모든 사회활동이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들이 한편으로 '정치적 영역'의 영향 아래 놓여 있거나 기본적으로(또는 주로) '정치적 결정'의 효과로서 존재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현실의 경제 영역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결코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며, 개인과 집단, 기업과 국가, 국제기구를 포함한 수많은 활동 주체들의 '더 많은 이윤 또는 더 바람직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의도적 결정'의 복잡한 교직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수준이나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의 개인적 능력이나 시민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처분 소득 수준과 그 정부의 사회·문화정책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쇄도하고 중국 자본이 제주도 땅의 상당부분을 사들이는 현상은 그들이 "관광지로서 제주도를 특별히 좋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와 외자유치 장려라는 국

---

1)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및 엔지오대학원 교수

가(지자체를 포함한) 정책의 효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교육과 종교 영역 또한 다르지 않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교육열'을 단지 개인들의-예컨대 일부 강남 엄마들과 같은-임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국내 및 해외 유학을 포함한 제도권 교육 자체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화는 '국가가 승인한 역사적 사실'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집필진이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선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정'인 한 정치적 의도와 그에 따른 논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진 사회현상이 된 '기독교(특히 개신교)의 정치세력화'는 그 종교-일부를 제외하고-가 남북 분단체제와 종속적 한·미관계, 그리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내는 남한의 반공체제를 지탱하는 기축의 하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집권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시위에 앞장 선 한 노인단체('어버이연합')의 동원 또한 '하루 2만원의 일당'을 벌고자 하는 일부 노인들의 처절한 생존욕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 나라 최고 수준의 정치권력(청와대와 국정원)과 경제권력(전경련)의 합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목격한 바 있다.

이처럼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정치와 무관한 영역이 존재하기는 극히 힘들다. 간혹 천재지변이나 특정인/집단의 돌출행동과 같은 '우연'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그런 우연한 현상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대응조치 조차도 사실은 그 사회 또는 권력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르게 된다.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태'와 그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부적절한, 미온적' 대응조치는 그것 자체로서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얼마 전 여야3당 원내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은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고 대답했다.[2]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지닌 국가권력의 최고 책임자가 '세금'과 '여론'을 이유로 진실의 은폐를 조장하는 생생한 장면이다. 국가의 어떤 제도나 정책이 세금과 무관하고 찬반이 없는 100퍼센트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이 점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또는 현상에 관한 "그 어떤 진실도 정치적으로-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구성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게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이 대부분 다양한 주체들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인류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그 옛날 원시 부족들의 일상생활과 축제마저도 오랜 경험

2) 한겨레, 2016년 5월 14일치(5면)

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기독교 경전에 따르자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행복에 겨운 생활마저도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던가? 이러한 조직성 또는 제도화 그 자체는 인간 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질수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조직화 또는 제도화 현상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조직화 또는 제도화 현상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실제, reality)'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실제'는 다양한 부류의 인간이, 다양한 조건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적응한 것이지, 거대한 바위나 풀 한포기 솟아날 틈새 하나 없는 시멘트 바닥 같이 영구불변할 것처럼 여겨지는 난공불락의 구조물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주의'라는 이름의 완강한 현실 변호 주장을 자주 만나게 된다. '거대한 구조적 현실'과 '왜소하고 무기력한 개인'이라는 익숙한 대비는 과거 왕정이나 독재권력 하의 억압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자민주주의'가 운위된 지 벌써 오래인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독특한 결합체계 하에서도 일상화된 인식틀이다. "현실은, 개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이다.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교육, 대중매체, 그리고 자주 좌절감을 맛보는 일상적 경험들이 그것을 고착화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 불가피하게 꼭 그래야만 했던/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나 경제, 정치는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조직된 활동의 유지 또는 변형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초인적 힘에 의해 애초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또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회구성원들의 의도적 또는 우연한 선택의 누적이거나, 상이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채택된 방식의 고착화인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는, 그것이 종종 그 이전에 선택한 결과나 그로 인해 형성된 조건들에 의해 그 다음 선택의 폭과 실천방식이 규정되는 '경로 의존'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경로 이탈'이나 '경로 개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변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일 뿐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당대의 국가와 특권층, 그리고 자본과 그 선전대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 같은 '거대한 힘'은 끊임없이 "무모하게 세상을 바꾸려는 헛수고를 하지 말라"며 각종 법과 정책을 통해, 사법기관을 통해, 교육을 통해, 선전을 통해, 엄청난 벌금을 통해 설득하고, 회유하고, 압박한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의 변화는 웬만큼 해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가혹한 희생만 따를 뿐이라는 생각이 누대로 자리 잡는다. 체념이 전염된다. 그렇게 전염된 체념 자체 또한 '현실'의 일부를 구성한다. 현실은 가시적인 물질과 제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관념과 이념 속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재생산된다. 현실은 물질적인 구조만큼이나 상상적 질서이기도 하다.[3] 하지만, 체념이 전염된다면 희망도 전염될 수 있다. 한 번의 의미 있는 승리의 기억, 한 번의 보람 있는 연대의 체험은 바윗돌 틈새의 풀꽃처럼 자라나 풀밭을 만든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풀씨들은 들판에 퍼진다.

우리가 '완강한 현실'이라고 부르는 제도와 관행의 변화는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상상, 그 상상력을 해방시키자! 인간의 역사와 (사회·경제·정치·문화) 제도에 관한 다른 인식과 전복적 상상력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로베르토 M. 웅거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것은 구조 물신주의, 제도 물신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체제는 결빙된 정치다. 그것은 실천적·비전적 갈등을 상대적으로 억제하고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데서 발생한다. 우리의 관심과 이념이 항상 사회의 제도와 관행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제도와 관행을 의미화하고 이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념들에 의해 수난당할 때, 우리는 구조적 상상과 구조적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4]

다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그러한 해방을 가로막는 존재와 방식이 무엇이고, 그러한 해방을 촉진하는 존재와 방식이 무엇인지, 그 둘이 어떻게 구별되고 얽혀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핵심적인 제도는 바로 국가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주로 '정치체(polity)' 또는 '국가'를 통해 조직되고, 응축되고, 변형되고, 재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인류사에서 '국가 밖의 사회생활'은 원시적이거나 예외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일탈 형태로 간주되어왔다. 그런 관점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정치사회학적 주제이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대부분 국가 제도 및 정책,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관념과 태도를 가리키는 것들이다. 정치와는 무관해 보이는 사회·문화적 제도와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국가 제도와 정책의 산물이거나 그 대항 관계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순수한 개인'이나 그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사회'를 이론적으로는 상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생존과 생활에 직접·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그 구성원들이 때로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시야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는 그 자체로서 현실이자 관념이자, 다시 한 번 깊이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

3) 로베르토 M. 웅거 지음, 추이 즈위안 엮음, 김정오 옮김, 『정치: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창비, 2015
4) 같은 책, 6쪽

2. 국가가 문제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국가의 성격과 기능에 관해서는 그간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기한 이론과 개념이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제도와 활동)와 관련하여 근대 국가는 주로 '사회·경제적 독점의 보증자'라는 역할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흔히 의회와 사법기관을 통하여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과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의 조정자이자 최종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배이념과 교육,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계급과 계층, 지역, 인종과 민족, 종교 집단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자의 역할을 자임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는 빈번하게 대자본과 특권층에게 이익이 되는 독(과)점의 보증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느라 갈등의 조정자, 사회통합자의 역할을 부차적으로 밀어내거나 심지어는 방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사회적 시장경제' 또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전자(보증자)와 후자(조정자, 통합자)의 균형을 맞추려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나, 영미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전자는 후자에 대해 확연하게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 그리고 그 사회가 연대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들을 선출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2-1) 국가는 사회·경제적 독점의 보증자이다.

국가가 주로 사회·경제적 독(과)점의 보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대 경제체제의 기본을 규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의 성격[5]과 그것을 보증하는 정치제도로서 국가의 위상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흔히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정부의 정책담당자들, 그리고 대중매체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실상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 두 개념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혼용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심지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활동가나 그것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주변부에서 보완할 뿐인 잔여범주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사회·경제제도 형태의 맹아인가?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와 조응하는 경제활동인가, 아니면 그것의 안티테제인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말하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이해' 또는 '공공성'은, 협소한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사실상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자유경쟁'을 통해 실현 가능한가? 궁극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운동은 소소한, 또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는 것을 넘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순전히 경제영역의 활동을 넘어서

5) 이하의 논의는 많은 부분 필자가 쓴 『퀘벡 모델: 협동조합·사회경제·공공정책』(가을의아침, 2015) 서장 내용과 겹친다.

는 것이라면 사회문화적 가치의 추구는 우리 시대의 지배적 가치인 민주주의, 또는 다양한 정치제도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영역에서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은 고답적이고 추상적인, 곧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왜, 무슨 목적으로 '비주류 경제활동'으로 간주되는 협동조합을 하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찾는 시도는 바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보기에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것은 그 실체가 형성, 진화해 온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천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한국에서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그 산하 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이 나서서 자신들이 '시장경제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은 자본주의 제도의 최대 장점으로 간주되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실제로 옹호하는가? 아니면, 틈만 나면 '협력업체'라는 이름의 하청업체나 자체적으로 상당한 기술력과 시장을 확보한 독립적인 중소기업, 심지어 골목길의 자영업자들까지 옥죄거나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최대이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행위를 통해 '자유경쟁'을 억압하는가? 또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면서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정책금융과 국책사업에서 특별하게 우대해주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빈번하게 사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경제'가 발전되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을 단순히 '눈가리고 아웅' 식의 단순한 말장난이나 기만적 수사로 보기 어렵다. 대기업의 경영자들과 그 이익단체, 그리고 국가의 주요 사회·경제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치가들과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자본주의=시장경제"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발상과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시장경제의 수호자'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그들은 틈만 나면 대기업과 재벌 가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각종 법과 제도, 정책, 정경유착을 통하여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억압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면서까지 '자본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자가 "너무나 긴밀하게, 환상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둘을 구별할 줄 모르고, 굳이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탁월한 이데올로기적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특권층에게 극히 유리한, 두 개념의 이러한 '의식적 혼동'이 소상품생산자들, 전문화를 추구하는 중소기업들, 기존 사회경제제도에 혁신적 효과를 초래하는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부문에게도 좋은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시장경제' 또는 '시장 메커니즘'을 인정(활용)한다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일까? 거꾸로,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은 곧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것일까? 나아가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동일한

제도와 성격을 갖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다”고 생각한다. 시장과 시장경제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보다 훨씬 일찍부터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났다. 그것의 발생과 발전은 (자본주의처럼) ‘서구’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바(경제활동의 목적)와 사회적 효과(효용)가 매우 다르다. 시장경제는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의 이해(common good)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자본주의는 먹이사슬 상층의 극소수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전체의 합(total good)이 산출되는 것을 중시한다.[6] 또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과 상거래 관습이 작동하는 시장경제의 효과는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는 (자신의 최대 이윤을 잠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방해꾼으로 여기고 협박과 법적 조치 등 ‘경제외적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억압하려 한다. 시장경제는 적절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본주의는 원가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폭리를 추구한다. 시장경제의 참여자들은 전문화-그것이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유통이든, 서비스 부문이든-를 추구하지만, 자본주의는 이윤이 남는다면 어떤 영역이든 마다하지 않는 하이에나형 잡식성이다.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밤의 손님’이라는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말을 들어보자.

> 이처럼 일상적인 물질생활의 거대한 바탕 위에서 시장경제는 자신의 그물망을 펼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유지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본연의 시장경제라는 바탕 위에서 자본주의가 번성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투명성 위에 위치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환 과정을 왜곡하며, 기존 질서를 교란하는 활동적인 사회적 위계이다. 자본주의라는 경제활동은 시장경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불투명한 영역이며, 시장경제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번영을 누린다.[7]

이처럼 시장경제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온갖 음험한 방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실질적인-입에 발린 선전용 수사로서가 아니라-자유경쟁을 최대한 억압해서 독점(그것이 안 되면 카르텔을 통한 과점)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정치적 기초가 바로 근대 국가와 그 권력을 장악하는 지배정당들이다. ‘자본주의’가 순전히 ‘경제제도’요, ‘경제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자본주의는 자체의 경제논리와 메커니즘을 통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경제현상의 외피는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정책, 인적 커넥션 등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요리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정에 주로 의존하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그것의 안정

---

6) 스테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 지음, 송성호 옮김,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한국협동조합연구소/북돋움, 2012), 33쪽

7) 페르낭 브로델 지음, 김홍식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갈라파고스, 2012), 45-46쪽

적 유지와 재생산을 보장해주는 정치적 기초가 없다면 극히 불안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영국식 '자유방임 경제'마저도 정치적 의도로 설계된 것이었음은 이제 익히 알려진 사실에 속한다.[8] 따라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목격하는, 정경유착을 일삼는 일부 고위관료와 기업인들의 행태는 국가의 그러한 기능을 다소 조잡하게-어쩌면 매우 솔직하게- 수행하는 방식일 뿐이다. '경제발전'과 '국력 증대'를 위한 각종 '친자본주의적' 법률과 제도, 정책, 교육, 선전을 통해 국가는 보다 정교하게, 또는 우아하게 사회·경제적 독점을 보장해줄 수 있다. 그러한 법률, 제도, 정책, 교육과 선전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개인과 집단은 '반자본주의적=반시장적 세력'이요, '반국가적 사범'이 된다. 사회경제적 독점의 보증자, 곧 국가는 따라서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거나 지양하고자 하는 제도와 실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구분하고, 국가를 '독점의 보증자에서 시장경제의 옹호자'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국가가 실제적으로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그들 사이에서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일시하고 혼동하는 한 우리는 독점의 보증자로서 국가의 포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갈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같다. "시장경제는 곧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면서 그 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경제논리'가 그들에게-보통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같은 논리의 회로에 갇히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주장은 다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받는 약자들과 도덕가들의 윤리적 요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흔히 듣는 '경제민주화' 구호 또한 대기업의 경영합리화 주장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구조적인 이유로 재생산되는 빈부격차와 불평등과 부자유한 사회·경제 제도 그 자체를 재구성하고 혁신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곧 카네기나 록펠러, 게이츠, 버핏 같은 자본가들을 '기부 천사'로 칭송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현상유지 목적의 피상적 담론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 자체가 자유경쟁, 나아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증해주는 만병통치의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한낮의 일꾼'인 시장경제가 땀 흘려 일궈놓은 노동의 결실을 자본주의가 그렇게 쉽게 탈취하고 지배할 수 있겠는가? '밤의 손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사적 소유권의 절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동일시하는 것만큼이나 시장경제와 '절대적인 사적 소유권'

8) 미국의 경제사가인 하일브로너는 "강력한 경제사회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정치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 지음, 홍기빈 옮김,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미지북스, 2001), 116쪽

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자는 아무런 모순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시장경제와 절대적인 사적소유권의 결합은 근대사회에서 전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제도적 결합의 한 형태, 그것도 압도적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극히 불리한 것일 뿐이다. 절대화된 사적 소유권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장점이라고 말해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유경쟁'을 '신성불가침의 사적 소유라는 절대화된 권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방해하고 억압하는 정당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양자(시장경제+절대화된 사적소유권)는 최상층 자본가들과 불로소득자들에게는 최적결합이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최악결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규제받을 수 있는 개인적 소유'는 지나치게 강력한 국가권력과 특권집단의 횡포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주요한 물질적 기초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9])

시장경제는 사적 소유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소유, 협동조합적 소유, 사회적 소유, 국가적 소유 제도와도 얼마든지 잘 어울릴 수 있다. 시장경제는 자유방임경제체제와도, 일정한 계획경제체제와도 어울릴 수 있고, 또한 중앙집중적 경제관리체계에도, 분권적(지역·생산단위) 경제관리체계에도 적응할 수 있다. '시장경제+신성불가침의 사적 소유권 제도'만이 최적결합이라는 주장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동일시하는 것만큼이나 일방적이고 편협한 '정치적 가정'일 뿐이다. 한 사회에서(또는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소유권 제도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우리 시대에 사적 소유권을 절대시하는 법과 정책들이 만연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의 관념과 관행이 뿌리내려서 다른 소유권 제도들의 존재와 그 특성·장점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할 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적 소유제가 보편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월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근대 세계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전인수이다. 엘리너 오스트롬이 수많은 경험적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입증한대로 공동체적 소유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사적 소유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분배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다.[10] 그리고, 로베르토 M. 웅거가 강조하는 대로, 세계 각지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상품 생산자들, 장인들, 협동적 노동공동체들은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투쟁'에서 패배한 것이지 처음부터 '경제적 합리성'에서 패배하고 매장될 운명에 처해졌던 것은 아니다.[11] 따라서 우리는 사적 소유제를 인류가 만들어내고 경험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현실'에서 그것이 주류로 보인다

9) 프랑스혁명 이후 아카니스트이자 풍운의 정치가로 활동했던 프루동은 처음에는 "소유는 도둑질이다!"라면서 모든 소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으나, 나중에는 개인적 자유의 기반으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에르 조지프 프루동 지음, 이용재 옮김, 『소유란 무엇인가』(아카넷, 2003) 참조

10)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랜덤하우스, 2010) 참조

11) 로베르토 M. 웅거, 『정치』 참조

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상대화해야 한다. 비로소 그 때 우리는 시장경제+공동체적 소유, 시장경제+협동조합적 소유, 시장경제+사회적 소유, 시장경제+국가적 소유 등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들 각기의 결합태가 초래할 수 있는 장점과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진정으로 대안적인 사회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상대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바란다면 시장경제는 그것이 가진 나름대로의 단점 때문에 내다버릴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최대화할 적절한 소유권 제도와 최적결합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시장경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포섭, 장악, 억압되어 있다. 바로 이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상호관계를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지역사회공동체 운동을 비롯한 사회경제 부문은 바로 그 시장경제와 함께, 하지만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포괄될 수 없는 공공부문을 일정하게 담당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억압되고 장악된 생활인들의 서식지를 시장경제의 본령과 함께 되찾아야 한다.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할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로서, 건강한 사회를 보장하는 '공공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시 자리매김 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2) 하지만, "국가는 하나"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독점의 보증자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국가는 한 사회에서 상이한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의 조정자, 그리고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자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12] 물론 국가 기능의 이러한 세 측면이 항상 동일한 비중으로, 동시에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정권과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그 국가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사회·경제제도와 정치문화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이 일상적(안정적)인가, 또는 비상시국(위기)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능을 이렇게 나눠 보는 것은 '국가'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잘 이해해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념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현실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변화의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국가가 내부적으로 완전하게 단일한 이해관계를 지닌 조직체(즉 단일체, monolith)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구조와 제도들은 수많은 갈등과 모순의 표출 또는 해소-일정한 해결과 진압을 포함한-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유독 한국의 국가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국가

12) 이것은 페르낭 브로델, 안토니오 그람시의 논의를 필자 나름대로 요약한 것이다. 브로델의 관점에 관해서는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성백용 옮김, 『사회과학의 탈피』, 창비, 1994 264-281쪽 참조. 그람시의 논의는 그의 『옥중수고』 참조.

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 사회이고, 사회 자체가 다양한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장으로서 단일하지 않으며, 그러한 모순과 갈등의 지속적 생산의 장이자 그 해소를 요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때로는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빈번하게 갈등을 노출하고 때로 충돌하기도 한다. 심지어 행정부 안에서조차 시민사회의 요구와 압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한다. 같은 정부 안에서도 같은 사안을 두고 국방부와 통일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현상은 중앙(연방)정부 기관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지역) 정부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 지방단체장이 대통령이나 수상과 같은 집권당 소속일 경우에라도 발생한다.[13] 그런가 하면 지난 몇 십 년 동안 국가는 일부 영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혼성기관(hybrid)들을 만들어왔다. 사회·경제 활동가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제도에 결합한 중간지원센터 또는 각종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민간부문의 대표자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공공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정부' 혼자서만, 기존 관료제 체계로만 국가의 기능을 충분히, 또는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존 국가 기능의 한계와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로 침투함으로써 국가능력을 증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이 단일체가 아니라-때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그 내부에 자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대응방식을 가진, 분화된(disaggregated) 조직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이 현실의 변화를 상상하고 시도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국가의 대(對) 사회관계, 더 넓게는 국가-사회 관계가 언제나, 모든 부문(영역, 이슈)에서 동일한 방식이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재)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틈새이다. 국가기구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갈등, 그 입장의 차이를 활용하기!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하여 억압적이고 배타적이기도 하지만, 포용적이거나 개방적이기도 하다. 어떤 국가제도는 시민들을 질곡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공공제도는 시민생활의 합리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어떤 국가 관료들은 고리타분한 사고방식과 타성에 젖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진취적이고 심지어 혁신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국가를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 기관과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개별 국가 제도와 기관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 '권력'의 대부분은 그들이 (시민사회에 대하여) 가진 정보의 비

1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지도지사는 야당 소속 경기도 기관장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칭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 정보가 반드시 양질의 것이라거나 특정 사안에 관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때때로 그 정보들은 매우 편파적이고 심지어 음모적으로 날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물질적·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작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된 것이거나 조작된 것, 또는 그 권력의 운용 경험을 통해 선별되고 누적된 것들이다. 그래서 그 정보 자체가 사회구성원들에 대하여 일종의 '권위'를 생산하고 행사하는 원천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가기관과 그 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는 각급 수준의 행정부와 의회기관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접근은 도지사와 시장, 구청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시·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에서부터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의정활동 참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생활정치 영역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자체가 국가가 수집하는 정보의 원천이요, 그것은 다시 우리의 생활방식과 그 결과를 좌우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거나 정당화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국가를 알아야 한다. 국가는,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나, 우리 자신이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현실적' 표상이다.

3. 지역사회의 협동조합은 공공정책을 주목해야 한다.

3-1) 사회경제 부문에게는 '좋은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기업, 지역사회개발 조직 등 사회경제(social economy) 부문은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만 그것은 좁은 뜻의 경제활동-생산과 유통을 통해 개개인과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경제'라는 관념과 그 활동을 그런 좁은 울타리에서 더 넓은 사회적 맥락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경제가 바로 사회경제다. 본래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간 공동체에서 경제의 본질일 것이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 경제는 결국 자신의 모태인 사회의 꼭대기 위에 올라서서 그것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경제가-즉 경제 권력이- 다양한 사회갈등의 반영 지점이자 그것의 해소 장치인 정치를 포획하고 민주주의를 한낱 주기적 선거라는 형식으로 왜소화하고, 그것마저도 많은 경우 금권정치-'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대표적이다-의 정당화 기제로 타락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런 전도된 경제를 이제 사람을 위한 경제, 사회를 위한 경제,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물질적·제도적 기반이라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사회경제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14]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그 운영상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1인 1표라는, 구성원들의

14) 김창진, 앞의 책, 65쪽

평등한 참여 정신에 따라 민주적 형식이 지켜진다. 물론 특정 기업의 조합원/회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대의제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결정'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1주(달러) 1표의 불평등 원칙이 당연시된다. 사적 소유권의 절대화라는 제도와 관념 속에서 기업의 '오너'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 경영자의 승계도 1인 또는 극소수 대주주의 결정에 따른다. 누구도 애플과 삼성에게 '민주적 경영'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명한 금언대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기업의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하지만, 사회경제 기업들은 자본주의 기업들의 문 밖에 애처롭게 버려진 민주주의를 기업의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데려올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회경제기업들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민주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애초에 기업 활동과 민주주의는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신화이다. 그 양립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주로 '친자본주의적 법률과 제도와 정책' 환경 하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기업 활동의 결합은, 그 조직 방식과 효율성의 정도 문제인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양자의 결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법률과 제도, 정책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처럼, 사회경제와 공공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킨다는 원칙이 사회경제 조직들로 하여금 모든 공공정책을 거부하거나 외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산과 운영에서 전적으로 공공부문과 그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 또한 사회경제조직의 원칙에 어긋난다.) 근래에는 공공 정책 또한 정치가나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 조직과 그 대표자들은 바로 그 '사회적인 것'의 핵심 주체이자 기제의 하나인 것이다. 앞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보자면, 사회경제 조직과 그 대표자들은 중앙 및 각급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을 자본주의에 억압·장악·포섭된 시장경제를 정상화하고 포식자 자본주의의 무한팽창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도록 제안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정치가들과 고위 관료들은 틈만 나면 '규제개혁'-"모든 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 구호가 실제로 실행되면, 많은 경우 실제로 '나쁜 규제'를 없애서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보다는, 소수 대기업들에게 더욱 유리한 사업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어 전체 국민경제에서 그들의 독과점을 더욱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나 '동반성장'은 한갓 헛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의 산출량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자리 유지와 고른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공공정책이 아니라면, 사회경제 조직들을 포함한 시장경제 제도는 점점 더 쪼그라들게 되고, 보통 사람들이 하릴없이 쓰러져가는 사회의 폐허 위에서 자본주의의 하이에나들은 희희낙락 '참 좋은 세상'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3-2) 공공정책을 견인하고 사회제도를 혁신하자!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란 사회정책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취해지거나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공식적인 결정 또는 행동계획을 말한다. 그것은 정부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 법률·조례·입찰·서비스·현금과 현물·신용·설득 등이 그 정책수단이 된다. 공공정책은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자율정책[15] 등으로 나눌 수 있다.[16] 공공정책은 보편적 이해(general interest)를 추구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당국이 개입하는 것이지만, 오직 국가(중앙/연방 및 지방/지역정부, 그들 정부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에만 의존하면 적절한 사회정책 및 공공정책을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사회적 동반자가 필요해진다. 즉 현대에는 국가만이 공공정책의 건축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공공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보편적 이익의 확보를 위한 핵심 목표의 설정,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금 수단의 결정(국가, 민간, 혼합 등), 관계 기관과 제도의 경영에 관한 책임성의 분담, 공공정책의 평가를 위한 체계 수립 등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공공정책이 국가만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면 누가 더, 공동으로 참여하는가? 그동안 공공정책은 주로 국가기관과 더불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문, 즉 대기업 중심의 재계가 동반자관계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정부와 재계의 협력은 지난 시절 '경제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면서 형성된, '민간부문=시장부문=대기업계'라는 편향된 인식의 반영이었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국가와 자본주의의 상호지원·공생관계'는 대자본의 국가 포획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17] 두 번째로 선보였던 모델은 이른바 '노-사-정 위원회'로서 재계에 더해 전국 노동조직의 대표들을 협상 테이블에 초청한 것이었다. '코포라티즘'이라고 알려진 이런 모델은 유럽의 몇몇 나라들-예컨대, 독일기업의 노동이사제를 통한 공동결정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국에서는 압도적인 자본의 힘과 국가의 자본 편향적 이념과 정책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18] 그것은 또한 제도적으로도 매우 제한된 조직율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 조직노동 부문'으로는 충분히 대표될 수 없는, 다른 사회운동 부문과 광범위한 시민사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

15) 사회집단이 자치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전문단체,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자율적 정책을 정부가 인정(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정책의 정의와 분류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문헌으로는 주성수 지음, 『공공정책 가버넌스』(한양대 출판부, 2005) 참조

17) 2000년대 초중반 '참여정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자본주의기업인 삼성그룹과(구체적으로는 그 자본주의그룹의 정책생산 기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정책협조를 시도했다.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18) 최근 서울시가 산하 기관의 운영에 독일을 모델로 제한적이나마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실험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우리는 일부 기득권집단의 특수이익(special interests)의 독점화로 귀결되는 정책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시민을 위한 정책의 생산과 집행을 위해 '민주적, 연대기반(democratic, solidarity-based)'의 공공정책 모델[19]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민간부문이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적절한 역할분담과 책임성을 공유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방적인 재벌기업들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협력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동조합과 사회경제부문의 배타적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노동부문과 인권·환경·여성·소수자를 비롯한 폭넓은 시민사회가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협력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 진영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경제가 국가의 단순한 활용 도구의 지위를 넘어서게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대기반의 공공정책 모델은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제어하고 편협한 공공정책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규범적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빈곤해져버린 민주정치체계 및 복지국가의 갱신에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 수준에서 주민 조직이 지역서비스 공급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과 정책의 변화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근에 각종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구체적 영역들로서는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식품 공급 등에서 교통, 공공주택, 사회서비스 등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 부문이 정상적인-단지 주변부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 주체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좋은 공공정책'을 유도할 수 있을까?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규정한 '협동조합의 정의'(1995년)에 딸린 '협동조합 7원칙' 중 마지막 항목이 '지역사회 기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2011년에 제정된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4장 93조에 따르면,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그 사회·경제적 본질상 지역사회를 쉽게 외면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와

19) Y. Vaillancourt with P. Leclerc, "The Co-construction of Public Policy: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y," in Marie J. Bouchard ed.,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The Québec Experience*(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3), pp. 137-139 참조

환경 개선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 조직들 자체의 자원과 노력만으로 충족되기는 어렵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컨대, 아이쿱생협의 생산단지로서 각종 식품 공방은 물론 직원과 주민들을 위한 카페와 영화관, 맥주집과 게스트하우스까지 갖춤으로써 지역사회 경제·문화생활의 거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전국적인 연수 명소의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는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보라. 그리고 그에 비해 시기적으로 더 먼저,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지역적으로도 중부권에 위치해 있지만 개발 속도가 훨씬 더딘 '괴산파크'를 비교해보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협조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근에 개발된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굳건하게 유지되어 온 토호-관변집단-정·관계 보수 기득권 세력의 커넥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무너져가는 지역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실질적 힘이 그런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부문이 지역사회에서 견실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시장경제의 생태계를 조성, 확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밑으로부터 자본주의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과 조직 활동이 축적되면 그것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정책 면에서 지방/지역이 일방적인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종속되는 중앙집권체제를 희석시킴으로써 정치적 분권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더욱 폭넓은 역사적 스펙트럼에서 보자면 그것은 지역사회를 매개로 개인과 집단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연대의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사회경제적 실험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생산자들과 자영업자들, 자유로운 개인들의 복합체로 이루어진 세계인 지역사회는 공생의 사회관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시대에 자본/주의에 억압당하고 배제되는 '사회'의 재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사업'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전략으로 공공정책을 견인할 수 있을까? 기존에 우리가 많이 접해 온, 또 실행해 온 방식은 특정한 사안이 생기면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에게 그에 상응한 법률과 정책 대안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협동조합기본법'과 그 다양한 후속조치처럼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것은 협동조합 부문을 비롯한 사회경제 진영의 정치적 역량을 반영한 것이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흔하게 통용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도 밖으로부터 요구'라는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사안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에 반응하는 '제도 안의 관계자들'이 얼마 안 되고, 그마저도 주기적인 선거나 순환보직 관행에 따라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통에 상호 업무논의와 정책 시행의 성과가 축적되기 어려운 한계를 자주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에 더해, 좀 더 적극적인 공공정책 견인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제도와 정책은 그것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조정하고, 만들고, 수정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경제제도의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출발점이 '사람'에 두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인가? 정책 역량을 갖춘 생활정치가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 부문을 잘 알고 더욱 발전시킬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그들은 시민사회 출신, 기업가 출신, 심지어 정부 관리 출신일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평소에 발견하고, 기르고, 훈련시켜야 한다. 그것은 단위 조합이나 소규모 조직에서 전담하기 힘든 일이므로 주로 연합회나 전국 조직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활동을 할 때 연합회나 전국조직은 "위로부터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선조직과 긴밀하게 협업을 이뤄야만 한다. 그렇게 발견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평소에 각 조직/부문을 대표하여 정책 당국과 협상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나아가 소수라도-지역별로 역량이 닿는 범위 안에서- 그들의 일부를 주기적인 선거-구·시·도의회, 구청장·시장-에 후보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해 온 것처럼 기존 정당 소속 후보들에게 사회경제 진영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게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이어서 지속할 필요가 있겠지만, 꼭 그런 방식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 지역 사정에 따라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이 다양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만큼 기존 정당과 정부 당국에서도 '제도 밖의 요구'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협동조합 조직 안에서 분열을 야기하는 논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에 나갈 '우리 후보'는 정당 소속으로 보면 주로 '주민 후보-무소속'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당선되고 나면 다른 정당(들)과 사안별로 정책연대를 통하여 '우리'의 요구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한편,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진영의 조합원 및 그 종사자들에게도 보다 폭넓은 사회·경제적 쟁점과 정치적 사안에 관하여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20]

---

20) 제도 정치권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진영에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 '협동조합 정당', '사회경제 정당'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지켜온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실제적 효과 면에서 상당한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캐나다에서는 1930년대~60년대 초반까지 CCF(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라는 정당이 사스캐처원 주에서 창당(1933)되어 무려 20년 동안 집권(1944-64, 1961년에 NDP로 당명 변경)했다. 이 시기 CCF-NDP는 사스캐처원의 토미 더글러스 수상을 중심으로 캐나다 최초로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보적인 제도와 정책의 산실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했다. 이에 관해서는 J. Willam Brennan ed., *Building the Co-opertive Commonwealth*(Regina: Canadian Plains Research Centre, Univ. of Regina, 1985)와 데이브 마고쉬 지음, 김주연 옮김,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낮은 산, 2012) 참조.

다음으로 이미 지역사회의 합법적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선출직 정치가들과 임명직 공무원들의 활동, 그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한국의 협동조합 진영은 '법적인 시민권'을 확보한 상태다.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개혁적 성향의 지자체장이 재직하고 있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부처도 나름대로 필요한 법령과 제도적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합법적 공간과 재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들이 가장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의 명분과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유지할지, 현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어떤 상태인데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민관합동 작업반'을 꾸려 공동 조사와 정책수립 활동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만약 협동조합 부문 자체에서 거기에 참여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단체와 연대하면서 외부의 우호적 지식인/전문가 집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정 정부기관이 그런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민관협치'의 필요성과 시대적 추세를 들어 설득하고 지역 언론과 주민 여론을 통하여 밑으로부터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상위 기관장을 통하여 위로부터 가하는 압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대표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과 홍보 전략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진영은 주로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나 직접 이 부문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집중해 왔다. 그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자체장들이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영역의 가치와 특성에 대해 적절한 인식을 지니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 나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선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활동해 온 조직과 개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결국 헛수고로 돌아갈 위험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공공정책은 지역사회 재건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가 아니라 지역의 분열과 쇠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에 따라 정작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사업은 외면당하고, 애초에 진지한 의도나 사업 경험이 없이 '국고보조'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엉뚱한 날파리들에게 중대한 정책집행을 맡기는 것은 물론 엄청난 예산을 배당하여 혈세를 탕진하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진영은 지자체 대표들 및 구청·시청·도청의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제도 구축 노력과 동시에 특강, 공무원 연수, 원탁회의, 주민과의 만남, 언론 기고, 연례보고서와 영상물 제작 보급, 문화예술행사 초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협동조합진영, 특히 아이쿱을 비롯한 생협부문은 그동안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구상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지금까지처럼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할당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별 조직들의 분산적 참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 기관인 지자체 또는 공공부문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시설과 공공서비스-예컨대, 전국의 각급 정부 산하에 산재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기관들, 즉 공공도서관, 공공회관, 공공주차장, 시민공원 등등-는, 엄청난 물리적 공간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체 숫자는 일반 시민들이 잘 알아채지 못한 가운데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무책임한 관료들에 의해, 또는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면서 경영능력이 결여된 관변단체들이나 기관장들과 정치적 연고를 가진 개인들에게 위탁되어 방만하고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국가기관의 '혈세 낭비'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하는 것도 여론을 환기하고 관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사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부라도 직접 책임경영에 나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명칭만의 '관료적 공공기관'을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또한 '공공서비스 협동조합'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가장 취약한 협동조합 부문을 선구적으로 개척하는 활동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활동은 더욱 넓은 사회적 제도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 절대화된 '신성불가침의 사적 소유제' 중심 정책과 관행과 관념을 혁신하는 시범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협동조합 소유'를 비롯한 다양한 소유형태의 동등한 시민권을 정당화하고 그 장점을 실제의 경영 성과를 통해서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선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운영'! 협동조합 진영은 앞으로 이런 시설과 서비스들을 직접 경영하는 주체로 나설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위해 아예,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와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가칭 '공공서비스 위탁경영 연구회'를 결성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협동조합운동사 100주년이 되는 2019년경에는 실제로 한 두 기관/업체라도 협동조합 진영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진영이 '좋은 공공정책'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인간답고 공동체적 연대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과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들의 자족적 공간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안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협동조합과 사회경제가 '지역 안에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외국의 일부 대규모 협동조합기업이나 한국의 농협처럼 '과감하게 지역을 벗어나 전국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것'이 그 자체 사업 목표가 되면 사실상 '지역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정반대의 부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을 살리되, 다른 지역과 연대하고, 지역을 넘어서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좋은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제도를 혁신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사회제도가 바로 구축되지 못하거나 문서상의 제도만 존재할 뿐 실제로 시

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을 생산·집행해내지 못한다면, 또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까지처럼 주로 협소한 자기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있는 '자본주의자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부문은 언제까지나 독야청청 잘 나갈 수가 없다. 협동조합은 전체 사회라는 큰 그림의 일부이지 과거 영국의 로버트 오언(R. Owen)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세웠다 실패한 것과 같은 "외따로 떨어진, 신대륙의 고고한 협동촌"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하게 "밑으로부터, 그리고 옆으로부터 연대하는 민주적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제도의 혁신과 공공정책의 재구성을 향한 협동조합운동-사회경제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진영의 어떤 사회활동도 조합원들의 열성과 참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소수 활동가들의 헌신에만 의존하거나-그것은 오래 가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 자체가 형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역 아이쿱조직들의 '생활정치' 활동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일반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생협 조합원들은 개인적·가족적인 관점에서 '유기농·친환경 식품 공급과 소비' 이외 다른 사회활동이나 공공정책에 별 관심이 없다. 개인적으로 보면 육아, 집안일, 친척 대소사, 직장, 취미활동 등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더구나 사회활동이나 공공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면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내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들을 어떻게 참여의 장으로 불러낼 것인가?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주된 방법일 수밖에 없지만, 개인들(조합원, 직원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참여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더욱 활성화된 조합원 참여를 위하여 어떻게 다수에게 흥미로운 유인을 설계하고 개발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개인적 이해관계를 충족하면서 사회적 관심사와 공공성을 제고하는 활동을 결합하는 것이다. 전통적이고 원칙적인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말고도 이 복잡하고 현란한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오게 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이 없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은 소수 활동가들의 헌신만이 남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합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 충족과 조합에 대한 충성심은 비례한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21] 그런 점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고,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부드럽게' 사람들의 참여의식을 계발해나가는 활동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

21) 조합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 충족과 조합에 대한 충성심의 비례 관계가 협동조합의 성쇠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는 아일랜드 낙농조합이 있다. 조지 수사·로저 허먼 엮음, 김창진·이현정 옮김, 『협동조합의 딜레마』(가을의아침, 2015) 참조

참고문헌

[문헌자료]

김창진, 『퀘벡 모델: 협동조합·사회경제·공공정책』, 가을의아침, 2015
주성수, 『공공정책 가버넌스』, 한양대 출판부, 2005
<한국협동조합기본법>, 2011
데이브 마고쉬 지음, 김주연 옮김,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낮은 산, 2012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 지음, 홍기빈 옮김,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지북스, 2001
로베르토 M. 웅거 지음, 추이 즈위안 엮음, 김정오 옮김, 『정치: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창비, 2015
스테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 지음, 송성호 옮김,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북돋움, 2012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2010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성백용 옮김, 『사회과학의 탈피』, 창비, 1994
조지 수사·로저 허먼 엮음, 김창진·이현정 옮김, 『협동조합의 딜레마』, 가을의아침, 2015
페르낭 브로델 지음, 김홍식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갈라파고스, 2012
피에르 조지프 프루동 지음, 이용재 옮김, 『소유란 무엇인가』, 아카넷, 2003
J. Willam Brennan ed., *Building the Co-opertive Commonwealth,* Regina: Canadian Plains Research Centre, Univ. of Regina, 1985
Y. Vaillancourt with P. Leclerc, "The Co-construction of Public Policy: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y," in Marie J. Bouchard ed.,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The Québec Experien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3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다시 생각하기

염찬희[1)]

1. 들어가는 글

2016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논의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질문하고자한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삼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요동치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현상적으로 도시보다는 지방경기가 훨씬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감지되었다. 그러자 한국 생협 부문의 대표 조직들이 일제히 지역을 화두로 던졌다. 아이쿱, 한살림, 생협전국연합회는 각각 ‘지역사회 기여’, ‘지역살림운동’, ‘지역과 함께’를 풀어야할 과제로 제시했던 것이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삶의 장소’인 지역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망가지는 지역사회, 특히 지방지역사회를 복원하고 지방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중심 주체로 협동조합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이쿱생협의 예를 보면, 2009년부터 아이쿱생협의 정책 담론의 장에 ‘지역사회’에 대한 언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쿱생협은).. 밖으로는 ICA 가입을 통해서 세계협동조합 운도의 보편적 흐름에 동참하고 안으로는 지역생협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생협이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2)] 그리고 2010년의 사업과 활동의 방향을 “‘조합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협’,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어려운 이웃과 연대하여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윤리적 소비 운동’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잡자고 제안한다.[3)] 이러한 언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상황에서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희망을 지역의 활성화에서 찾으면서 협동조합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한 결과였다. 2009년부터 아이쿱은 지역생협의 모든 활동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연관지어 의미화하는데, 그 중심에 자연드림 매장사업을 두었다. 이러한 의미화 방식은 지역생협에게 그들이 속해있는 장소를 지역 사회로 규정하면서 지역의 사회(local community)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간혹은 폐쇄적인 자기 지역 중심주의, 즉 자기 지역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지역을 배제하는 등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

---

1)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2)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원각 사무국장이 정리한 “2009년 아이쿱생활협동조합연구소 사업 계획” 중에서.
3) 2010 아이쿱생협연합회 총회 자료집에서.

역조합이 '장소로서의 지역'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이 글은 협동조합의 원칙 중 Concern for Community가 번역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어떻게 상상되고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작업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에서 읽는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를 점검하고, 재고하고, 혹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를 점검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기여는 어느 수준으로 담론화되고 있는 것인가? 를 질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글은 지역조합의 지역 범위와 지역사회 기여의 지역 범위는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다. 커뮤니티 기여의 커뮤니티가 로컬커뮤니티로 이해되는 것에 반대하려는 것이다. 반대의 근거는 로컬의 의미가 전국이 아니며 권역이 아니므로 얻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모바일시대에 개인의 몸은 다양한 층위와 다양한 범위의 커뮤니티들이 교차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2. '가치 논의'와 '지역사회 원칙'

ICA가 1995년 일곱 번째 협동조합 원칙으로 공표한 지역사회 원칙은 협동조합이 갖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10년 가까운 긴 시간을 들인 논의의 결과로 탄생했다. 지역사회 원칙이 어떤 맥락에서 탄생했는지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기여가 원칙으로 정형화된 사회 경제적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실천적 의의는 상실된 채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수용되거나 왜곡되어 수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용 맥락에 따라 예상치 못한 요인과 결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동조합 7원칙이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서 등장한 배경은 1980년 모스크바회의에 제출된 레이들로(Laidlaw) 보고서로부터 기원한다.

레이들로(1980)는 21세기 지구상에 있는 여러 커뮤니티들이 당면한 사회 경제적 압력들(위기들)을 헤쳐나가려면, 개인과 커뮤니티들이 환경을 덜 훼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장보다는 절약을 지향하는 사회(conserver society)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소비자협동조합에게 그 과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특히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거점으로 더더욱 협동적으로 다져진 커뮤니티들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했다.

레이들로는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전지구적으로 강요하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더더욱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들(more co-operatively-based communities)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는 사회 경제적으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부각되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세력을 떨치던 상황이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매력을 잃고 생존의 위기에 직

면했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필요에서 레이들로는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직이 협동조합이라고 설파하면서, 비인간적인 시장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인격적 관계가 파괴된 채로 개별로 살아가야 하는 개인들을 그들의 개별성이 군중 속으로 부서져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구제해줄 집단인 커뮤니티를(레이들로, 220쪽 참조)를 협동조합적으로 재편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즉, 21세기에 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로 협동조합을 발전시켜 협동조합 지역사회들(co-operative communities)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이다.(앞의 책, 193-201쪽 참조)

국제협동조합연맹 스톡홀름 총회에서 마커스 보고서가 발표된다. 1988년 마커스(Marcus, Lars) ICA회장은 전세계 협동조합들에게 협동조합의 목적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중요하게 다루어달라고 요청했다.(MacPherson, 2012: 3) 협동조합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파넬(Parnell, Edgar)에게 협동조합의 목적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는 협동조합이 유지되고 지속 발전하려면 조직 형성의 동인, 즉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한다.(파넬, 96-115 참조) 그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수단은 달라지지만, 유형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협동조합의 목적은 삶의 터전으로 인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회를, 폴라니의 용어를 빌려오면, 시장이나 국가가 아닌 사회를 존재하게 해야 한다. 마커스는 협동조합이 매력적이려면 일반 자본주의적 기업과 차별되는 특징이 부각되어야한다면서, '타인들에 대한 배려(Caring for others)'가 협동조합의 특징의 하나로 여겨져야하는지를 질문으로 던졌다. 그 질문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맺을지를 묻는 것이었다. 마커스에게서 타인은 이웃이며, 이웃들의 집단이 커뮤니티다.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에게 이웃은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일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곳의 사람일 수도 있다.

마커스가 던진 질문은 1992년에 제출된 뵈크(Böök, Sven Åke) 보고서에서 풀렸다. 뵈크를 중심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해 3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전세계에서 1만 여명에 이르는 협동조합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 협동조합인들, 특히 성별로는 여성, 세대별로는 젊은층,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일본, 콜롬비아, 스리랑카, 캐나다, 케냐 등과 같은 나라의 활동가들에게서 협동조합과 커뮤니티의 관계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뵈크는 "협동조합 정신(co-operative spirit)"의 반영이라고 이해했다.(ICA도쿄 총회, 뵈크 보고서, 1992) 그리고 그들에게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원 상호간의 혜택을 더 바란다는 것도 확인했다. 뵈크는 마커스가 질문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협동조합의 특징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가치들에는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커뮤니티 전반에 대한 책임이 고루 담겨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협동조합의 설립 동기는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고, 서로를

배려하며, 커뮤니티의 더 많은 부분을 포용할 방법을 찾아낸다.(뵈크 보고서, 215)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선언한 1995년 ICA 맨체스터 총회는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비교적 오랫동안 해온 논의를 마무리하는 장이 되었다. 맥퍼슨(MacPherson, Ian)을 위원장으로 하는 맨체스터 총회 준비위원회는 정체성 선언의 한 부분을 가치에 할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 오래 토론했다. 위원회가 전세계 협동조합인들 1만여 명과 가진 교류에서 발견한 공통된 주제는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였는데, 이것은 전세계 협동조합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었다. 국제 협동조합 운동 차원에서 인지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원칙이란 것을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결과로 제7원칙이 만들어졌다.(MacPherson, 2012 참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협동조합의 가치가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라는 원칙을 통해서 발현되기를 바란 것이다. "개방성", "연대", "공정", "평등"이라는 가치들도 이 원칙과 연관된다.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커뮤니티들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으니, 예를 들면, 개방성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이 성, 계층, 인종, 정치, 종교의 차별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타인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타인의 범위를 협동조합 안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비슷한 가치와 목표를 가졌다면 협동조합 밖의 개인과 조직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공정"과 "평등"도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협동조합 부분의 사람들이나 조직들과 일을 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MacPherson, 2012: 5)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협동조합의 활동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즉,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의 문제는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어떤 부분이 다른 지를 이야기할 때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존재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개의 원칙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추가해서 제7원칙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로 명문화했다.

3. 커뮤니티, 번역의 정치

3-1) 커뮤니티 개념

이 절에서는 7th Principle: Concern for Community가 협동조합의 제7원칙 '지역사회 관여', '지역사회 기여' 혹은 '지역사회 기여'로 번역 소개되면서 어떻게 상상되고 어떻게 의미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community는 흔히 지역사회로 번역되어 쓰인다. 혹은 공동체로 번역한다. 일부에서는 지역공동체로도 쓰이며, 더러는 두 번역이 갖는 편차를 의식해서 중립을 강조하면서 음소표기 그대로 '커뮤니티'로 쓰기도 한다. 각각의 번역은 번역 주체에 따라 편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언제나 특정 지역을 점유하며 거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지역(local)안에서 상호 협력하는 사회집단(community)이 형성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혈연과 태어난 곳이라는 장소에 의한 일차적 관계 집단보다는 계약이나 이해에 의한 이차적 관계에 의한 사회집단이 많아졌다. 게다가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 기술이 기반이 되면서 사회는 더 이상 장소 제한적일 수 없게 되었다. 사회가 빠르게 분화되었고 제한된 지역 안에서 거주민들은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혈연이나 장소를 공유하는 일차적인 유대집단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사회집단들이 출현했다. 이렇게 커뮤니티는 분화되었다.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지역에 사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커뮤니티 개념이 분화된 것이다.

학자들의 커뮤니티 이해는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는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커뮤니티, 집단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동질지역으로서의 커뮤니티, 지리적.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연지역으로서의 커뮤니티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파크(Park)와 버제스(Burgess)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지리적 분포라는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회와 사회집단을 커뮤니티라고 하면서 모든 커뮤니티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커뮤니티는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성, 일체감, 공동 생활 양식,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 공동노력이 강조되는 것은 사회적 동질성을 갖는 범위를 커뮤니티로 본다. 지리적 특성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동질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세 번째 범주의 개념은 사회학의 개념이다. 커뮤니티라는 용어에는 심리적이고 지리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워렌(Warren)이 대표적인데 그에 의하면 커뮤니티는 "심리적인 면에서 '이익집단(community of interest)'이나 '실업계'(business community)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의 이익, 특성, 혹은 연합(association)을 의미하고, 지리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특정 지역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이 두 가지 면을 결합시키는 것"[4]이다.(최일섭.이현주, 4-10쪽 참조)

3-2)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사유

한국 사회운동의 지형은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기존의 체제저항적인 정치운동에서 환경, 여성, 자치, 거주 등과 같은 시민권적 쟁점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출현했다. 그렇지만 시민운동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 지역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운동에 임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한 소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한계에 봉착한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핵심 집단이 중산층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적 판단력을 갖춘 식자층으로 제한되면서, 계급적 성향이 고착화되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운동 본래의 목적인 시민들의 자치와 자율의 주체들이 모호해지면서 오히려 정부나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거나 제도에 흡수되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4) Warren, Roland L., *The Community in America*, Rand McNally & Co, 1963, p.6, (최일섭.이현주, 2011, 10쪽에서 재인용).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2000년대 말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추상적인 수준의 시민사회운동을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인 지역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보편적인 인권이나 민주주의 일반을 강조하는 대신 지역의 특정성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에 뿌리 내린 지역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운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당시 유행처럼 나타난 지역사회의 강조, 생활정치의 강조, 지역정치의 강조는 이러한 관심 축의 이동을 증명한다.[5]

3-3) 아이쿱의 지역사회 담론

지역조합들의 연합조직인 아이쿱생협은, 회원조합인 지역조합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로 번역한다.

진주아이쿱생협은 홈페이지 진주아이쿱소개 공간에 협동조합 원칙을 게재하고 있는데,[6]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설명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로 하고 있다.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정관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지역사회를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로 풀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구로아이쿱생협의 경우, 홈페이지에 올린 설립취지문에서[7] "(전략)...구로생협이 지역에서 탄생한 이후 조합원들의 열성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제 구로생협은 조합원들에겐 소중한 공동체이자 지역사회에선 비중 있는 큰 대중조직이 되었습니다...(후략)"라고 적고 있다. 이 역시 지역사회를 조합이 속한 장소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단한 두 사례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담론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개념들의 기준을 가져와보면,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지리적 분포라는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회와 사회집단으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있다. 기능적 지역사회나 지리적 지역사회라는 분류 틀에 대입해본다면, 공동체가 갖는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전제조건으로 기능적 기준에 의해 형성되며, 그 구성원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개인이나 집단조직체'의 의미보다는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 조건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지역은 동네, 읍, 구, 시, 도, 나아가 한반도, 아시아 이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조합들은 정관에 명시한 사업구역을 지역으로 의미화하는 것으로 읽힌다.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 지역조합들의 현실이다. 앞의 두 지역생협은 공히 정관 제9조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

---

5) 염찬희.엄은희, 2010 참조.
6) http://coop.jinju.or.kr/info/sagae.htm, 접속일: 2016.5.10.
7) http://guroicoop.or.kr/?mid=s01, 접속일: 2016.5.10.

다."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그들 지역조합들이 지역사회 기여를 어느 차원으로 담론화할지를 가늠해보는 것을 어렵지 않다고 하겠다. 앞서 소개한 두 지역생협은 각각 경상남도 일원, 구로구 일원으로 사업구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지역사회 기여는 경상남도 일원과 구로구 일원에 대한 기여가 될 것이다.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사회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사회들이라는 복수의 지역사회들에 대한 관심과 기여로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생협의 조합원은 아이쿱이라는 연합조직의 조합원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도 커뮤니티를 사회로 확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나가는 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들'로, 사회로.

담론은 실천의 방향을 유도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상상이 사업구역으로 제한된다면 지역주의가 나타나고 기승을 부릴 여지도 생긴다. 자기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그 영역적 속성과 범주를 정치화하는 사회정치적 또는 문화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역조합은 자기 지역 사회의 기여를 위해서 배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만의 좁은 닫힌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나아가 타지역에 대한 배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실천으로 구현시킨 철학적 배경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모순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담론 조정에 '모든 커뮤니티는 사회'라는 파크(Park)와 버제스(Burgess)의 정리[8]는 유용하다. 폴라니의 말을 빌리면, 국가도 시장도 아닌 '사회'에 기여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폴라니의 사회론도 커뮤니티를 지역사회의 의미보다 큰 범위와 층위로 확대시키는 담론 실천 작업에서 유용하다. "인간은 유적 존재이다. 고립된 인간이란 하나의 추상일 뿐이다. 인간이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 안에서다. 인간은 이러한 사회 활동 안에서만 비로소 충만해질 수 있다"[9]는 폴라니의 주장은 레이들로의 인간이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지역사회라는 설명과 묘하게 닿아있다. 그는 시장과 국가가 아닌 인간들의 관계로 구성된 것을 사회로 보면서, 사회의 역동에 의해 현실이 결정되고, 현실은 인간들의 자유 의지 등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기 때문에 실천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폴라니의 사회론을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원칙에서 해석해보면, 커뮤니티 기여는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움직임을 포괄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 기여 원칙에 대한 이해는 폭과 깊이에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즉 'community는 개인과 국가의 중간 인식 층위에 존재하는 사회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회에 대한 기여로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모든 활동이다.'라고 담론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지역조합의 시선과 활동을 원심적으로 가두기보다는 구심적으로 산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8) 최일섭.이현주(2011), 5쪽 참조.
9) 폴라니 지음, 홍기빈 편역(2002).

참고문헌

[문헌자료]

김영정(2008), 지역거버넌스와 공동체 운동, 『지역사회학』 제9권 제2호.

MacPherson, Ian(2012), Cooperatives' concern for the community: from members towards local communities' interest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Cooperatives for a Better World"(held in Venice on the 15-16 of March 2012).

Sengenberger, Werner(1993), Loc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mpetiti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2(3).

염찬희.엄은희(2010),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아이쿱생협연구소 제14회 포럼 자료집』.

Parnell, Edgar(2011), *Co-operation: the beautiful idea*, 염찬희 옮김(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그물코.

A.F.레이들로 지음, 염찬희 옮김(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알마.

생협전국연합회(2010), "지역과 함께 하는 생협", 『생협전국연합회 회원조합 지역활동 사례집』.

최일섭.이현주(2011), 『지역사회 복지론』, 제2개정판, 서울대출판문화원.

Polanyi, Karl(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홍기빈 옮김(200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2015),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착한책가게.

폴라니 지음, 홍기빈 편역(2002),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책세상.

이상길(2011), "학술번역과 지식수용", 『언론과 사회』, 19(4).

문성훈(2011),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사회와 철학』, 21.

모심과 살림연구소(2009), 『지역살림운동의 길을 찾아서』

ICA 홈페이지(www.ica.coop)

Böök, Sven Åke(1992), Co-operative Values in a Changing World, *Report to the ICA Congress, Tokyo*.

Marcus, L. (1988), Co-operatives and Basic Values: A Report to the XXIX ICA Congress, Stockholm, July 1988, Agenda & Reports.

지역의 부는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경제학자들의 시각

박종현[1)]

"지금은 시민들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가가 가장 부유한 국가다. 더 이상 풍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열망할 것이 되었다...풍요야말로 인민의 행복, 국가를 넘어서는 정치적 자유, 국가 안에서의 시민의 자유를 지탱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 가에타노 필란지에리

1. 부의 본성으로서의 노동

경제학은 출발부터 부(富)의 문제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점은 경제학의 시작을 알린 애덤 스미스의 책 제목이 『국부론』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때 애덤 스미스가 탐구하려던 부(富)는 개인의 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부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다른 나라는 가난한지, 공동체 전체의 부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를 해명하려 했던 것이다. 이 책이 『국가의 부의 본성 및 원인에 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는 다소 긴 제목을 원제로 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 당대의 사람들은 부를 화폐나 귀금속이라고 믿었다. 반면 스미스는 진정한 부란 화폐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생활필수품이나 편의품이라고 생각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경제학을 완성시킨 알프레드 마셜은 스미스의 이러한 입장을 계승해 부란 인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충족시키는 바람직한 사물들이자 그 가치가 화폐적 단위로 표현되는 사물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스미스는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상적 관찰에 머물러서는 곤란하고 이들 현상에 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가 본성이나 원인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던 것도 이러한 방법론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부를 구성하는 것은 생활필수품이나 편의품이지만, 이들이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점이 분명히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스미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의 본성(nature of wealth)은 노동이며, 부는 노동생산물인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한 국민의 연간노동은 그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 모두를 공급하는 원천이며,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은 연간노동의 직접적 생산물이거나 그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다른 국민들로부터 구매한 것들이다." 그가 노동을 가장 중시했던 것은 노동 개념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 호소력과 당시에 유행하던 담론적 관행에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 "노동은 부의 아버지이자 활성적 인자이고 토지는 부의 어머니이다."는 윌리엄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페티(William Petty)의 격률이나 재산의 토대를 노동에서 찾는 존 로크(John Locke)의 소론, 노동에 준거해 부를 정의한 깡띠용의 아이디어가 대표적 예이다(송현호 1996).

부 또는 가치의 본성으로서의 노동 개념은 현대 경제학의 용어로는 생산요소(production factor) 개념에 가까운데, 여기에는 노동은 물론 자본이나 토지도 포함된다. 국부의 본질이 노동(또는 생산요소)이라고 이해할 경우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일차적 해법은 노동·자본·토지를 생산과정에 보다 투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노동 투입을 늘리는 것은 한층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본 투입을 늘리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연결된다.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부를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근면(industry)과 검약(frugality)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분업과 시장

스미스에 따르면, 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곧,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이 더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들 제품의 생산을 위해 유용한 노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거나, 숙련·기교·판단 등을 발휘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조건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며, 그 핵심 원인들(causes) 또는 방법들은 분업이다. 분업(division of labour)이란 일을 나누어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다시 공장 안에서 직무를 분할하고 전문화하는 기술적 분업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직업을 분화하고 특화하는 사회적 분업으로 나뉜다.

기술적 분업(technical division of labor)은 생산공정에서의 다양한 조작들의 분할과 결합으로 정의되는 생산과정의 조직 원리이다. 스미스는 유명한 핀 공장의 사례를 들어 기술적 분업이 부를 늘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노동자들이 공장에 모여서 직무를 나누지 않고 일을 한다면 숙련공들도 하루 20개 이상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핀 제조 공정을 여러 개의 작업 공정으로 나누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첫째 사람은 철사를 잡아늘이고, 둘째 사람은 철사를 곧게 하며, 셋째 사람은 철사를 끊고, 넷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하며, 다섯째 사람은 머리를 붙이기 위해 끝을 문지른다. 머리를 만드는 데도 두세 개의 다른 조작이 필요하다. 머리를 붙이는 것도 특수한 직업이며, 핀을 희게 하는 것도 그러하고, 핀을 종이로 싸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다. 이처럼 핀 제조 공정을 독립된 작업으로 분할·운영한다면, 10명이 하루에 4만 8천 개 이상의 핀을 만들 수 있다(Smith 1789, 1장).”

기술적 분업으로 인해 노동의 생산력과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노동자 각자의 기교 향상, 이동 중 노동시간의 절약, 노동절약적 작업도구 발명 등 세 가지 사정 때문이다. 첫째, 분업은 각자의 일을 어떤 단순한 하나의 조작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그리고 그 조작을 평생의 유일한 직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노동자의 기교를 크게 향상시킨다. 둘째, 하나의 일로부터 다른 일로 옮길 때 잃게 되는 시간의 절약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보기보다 훨씬 크

다. 사람은 하나의 일로부터 다른 일로 손을 옮길 때 조금은 빈둥거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 가지의 직무만 전담함으로써 직무의 이동 필요성을 없애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적절한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은 대단히 쉬워질 수 있는데, 모든 기계의 발명은 분업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사람은 정신의 모든 주의력을 각종 일에 분산시킬 때보다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킬 때 목적을 달성하기 쉽고 간편한 방법을 더 잘 발견하게 된다. 노동이 매우 세분되어 있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에 의해 발명되었다.

스미스는 분업 덕택에 생산물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 최하층의 국민들까지도 전반적인 생활의 풍족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그런데 이때의 분업에는 기술적 분업뿐 아니라 사회적 분업도 포함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자신이나 가족의 직접적인 사용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까지 생산을 늘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자의 생존을 타인의 활동에 맡기게 되었다. 스미스 자신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고 훌륭하게 활과 화살을 만들며, 그것들과 교환해 동료들로부터 가축이나 사슴고기를 얻는데, 그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얻는 것이 직접 들에서 잡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로부터 활과 화살의 제조가 그의 주된 업무로 되며 결국 무기 제조자가 된다. 다른 사람은 그들의 작은 움막이나 운반하기 쉬운 집의 골격과 덮개를 만다는 데 우수하다. 그는 이 점에서 이웃사람들에게 유용하며 그들로부터 가축과 사슴고기로 보상을 받는다. 그는 이 업무에 전적으로 몰두해 목수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분 모두를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할 수 있다는 확실성 때문에, 각자는 특정의 직업에 몰두해 그 전문 직업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고 완벽하게 만든다(Smith 1789, 2장).”

이와 관련해 스미스는 이러한 분업이 부의 증가나 경제성장을 위한 의도적 결과가 아니라 인간들의 타고난 본능인 교환하고 거래하고 교역하려는 성향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상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현저히 나타나는 재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교환성향이라면, 이 차이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도 이 교환성향이다. 동일한 유(類)에 속하는 동물들은 습관과 교육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재능의 차이보다 훨씬 현저한 차이를 천성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상이한 동물들은 동일한 유에 속하지만 서로에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맹견의 힘은 사냥개의 민첩함이나 애완용 개의 총명함이나 양 지키는 개의 유순함에 의해 조금도 보완되지 못한다. 이처럼 상이한 자질과 재능의 성과는 교환하는 성향이 없기에 공동재산이 될 수 없으며, 유적 존재의 생존조건 향상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가장 차이가 나는 재능들이 서로 간에 유용하며, 각각의 재능에 의한 상이한 생산물들은 거래·교환하는 일반적인 인간성향에 의해 공동재산이 되고, 이 공동재산으로부터 각자는 타인재능의 생산

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구매할 수 있다(Smith 1789, 2장).” 그는 사회적 분업을 옹호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Smith 1789, 2장).”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만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는 『국부론』을 출간하기 이전에 『도덕감정론』을 집필한 바 있다. 이 책에서는 동감과 신중(prudence)의 윤리가 강조되는데, 동감(sympathy)이란 다른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감정을 공유하는 느끼는 동류의식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부와 영예와 높은 지위를 향한 경주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 각자의 내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말이다. 공정한 관찰자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이다. 이제 각자의 이익 추구는 동감이라는 역지사지의 도덕률과 함께 할 경우 공동의 번영으로 연결된다(Smith 1759).

이처럼 부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것이 분업이고, 인간들은 동물과 달리 분업을 행하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왜 지역마다 분업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왜 고대의 이집트가 애덤 스미스 당대의 스코틀랜드 시골 지역에 비해 분업이 더 발달했고 더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 스미스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분업의 발달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따라 제한이 된다. 시장이 매우 작으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직접 소비할 수 없는 모든 잉여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적이 드문 지방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푸줏간이나 빵집은 물론 술집까지도 겸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장장이·목수·미장이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반면 해안이나 하천의 연안에서는 수상 운송에 의해 육상 운송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시장을 여는 것이 가능하므로 모든 종류의 산업이 저절로 세분되고 개량되기 시작한다(Smith 1789, 3장).

3. 수익체감에서 수익체증으로

스미스의 『국부론』이 부와 경제의 성장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그의 계승자였던 토마스 맬서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본주의에서 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정체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수익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이다. 맬서스와 리카도

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을 중심으로 이 법칙을 제시하였다. 인구의 증가에 대응해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본·토지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리면 전체 생산물은 늘어나지만 생산요소의 추가적 투입으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확대하면 어떤 산업이든 생산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평균비용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의 판매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19세기 말 경제학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알프레드 마셜은 생산 규모의 확대가 노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스미스의 핀 공장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훨씬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연이 제공하는 농산물의 추가적 수익은 장기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맞지만, 제조업 등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리면서 진행되는 생산 규모의 확대는 조직의 개선 및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비용 절감과 가격 하락을 낳고 추가적인 판매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셜은 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내부경제(internal economies)란 생산 규모의 확대가 기업 내부적 요인들 사이의 선순환을 통해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때 비용을 절감시키는 요인들로는 분업으로 인한 노동력의 절약, 대단위 고정자본의 이용으로 인한 기술상의 절약, 원재료의 대량구매에 따른 구매비용의 절약, 사업의 확대에 따른 평판의 개선, 보다 양질의 직원 유입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란 다른 기업들의 생산 확대가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 확대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외부경제란 돈이 오고가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얻는 이익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있으면서도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들이 바로 외부경제인 것이다. 이처럼 내부경제와 외부경제가 발휘되는 산업들에서는 생산규모의 확대가 평균비용 인하로 이어짐으로써 더 많은 판매가 가능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Marshall 1920).

수익체증 현상은 초기 단계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후 이후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철도, 전기, 전화 등 네트워크 관련 분야에서 활발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주류경제학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으로 상정하는 완전경쟁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잊혀졌다가, 1980년대 크루그먼에 의해 신국제무역이론에 다시 도입되었다. 모든 경제활동이 수확체감 원리를 수반한다고 가정하면 자유무역을 지지되지만, 많은 산업에서 수확체감 원리가 관철되는 반면 특정 산업에서 수확체증 원리가 작동한다면 이들 분야를 적극 육성해 수출에 주력하는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신국제무역이론의 현실적 시사점이었다. 부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도 비슷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부의 생산을 늘리려면 가능한 한 수익체감이 일어나는 분야보다는 수익체증이 일어나는 분야 쪽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4.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신뢰로

마셜에 따르면, 기업들은 특정 입지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어 경제활동을 벌임으로써 외부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1) 공동의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과 같은 공공재를 공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용절감 혜택 2) 공급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얻게 되는 수송비나 거래비용의 절감 혜택 3)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산업관련 비밀들이 손쉽게 확산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마셜의 시대는 대량생산의 시대로서 외부경제는 상대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에서 더 많이 비롯되었다. 하지만 표준적인 대용량 제품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시장의 변화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부경제의 요인이나 경쟁력의 원천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적 자본, 부존자원, 기업들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고, 지식과 같은 무형의 투입물과 지식의 확산과 같은 세 번째 외부경제 요인의 중요성이 커졌다(Audretsch et al. 2007).

이때 세 번째 외부경제 요인의 의미를 마셜 자신의 목소리로 음미해보자. “어떤 특정 산업이 어느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가능한 한 그 산업은 그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된다. 특정 산업이 선택한 장소를 중심으로 그 산업 분야에 관련된 동일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 되어 주변에 자리 잡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산업분야가 지닌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다. 그 지역 주변에는 마치 그 비밀이 공중에 떠다닌 듯해서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까지도 무의식중에 그 비밀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자리 잡은 산업 분야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으며 기계가 발명되고 기계의 성능 및 공정 등이 향상된다. 더불어 기업조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편되면서 발전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인 다음 자신의 의견과 결합시켜 활용한다. 그리고 그런 결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탄생한다(Marshall 1920, 10장).”

결국 198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성장의 문제는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보다는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진보와 같은 요인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쪽으로 경제학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가장 흥미로운 주장은 시카고 학파의 로버트 루카스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특정 집단 내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개인 생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며 지식의 파급효과(spillover)를 강조했다. 이때의 집단이란 가족보다 규모가 크고, 인류 전체보다 작은 규모의 모임을 지칭한다.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때의 인적자본의 축적은 실제 자본거래처럼 특정 상대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 사람들 사이의 접촉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루카스는 이러한 전제 위에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경제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여줌에도 금전적으로 보상받

지 못하는 외부경제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인적자본 또는 지식의 스필오버 효과라고 규정했다.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회사, 노조, 대학 등 어떤 단체에 속해 집단을 이루어 경제활동을 벌임으로써 홀로 생산할 때에 비해 훨씬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처럼 집단이 주는 가치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행하지 않고도 집단에 소속되어 동료들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필오버가 단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학문의 장과 도시가 있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학과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또는 관심사를 공유하는 학자들과의 학회나 연구회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무료로 배울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지식의 성장과 경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 중 일부에게 교육비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배우는데, 이러한 배움은 상호적인 성격을 띤다. 이런 상호학습에는 학생과 교수의 구분이 없다(Lucas 1988).”

이때, 지식의 스필오버 효과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식의 생산성과 가치를 키운다는 점이다. 루카스의 이러한 깨달음은 지역사회의 복원과 도시 재생의 문제에 평생을 바쳤던 사회운동가이자 저술가인 제인 제이콥스의 저서에서 힘입은 바가 크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도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시의 다양한 동네에서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화교류 현상이었다. 도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뽐내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 사람들의 재능이 모여 있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든다. 루카스는 제이콥스의 통찰에 기대어, 스필오버가 도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 높은 토지임대료는 그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도구라고 주장한다(Warsh 2006).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폴 로머는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식과 체화된 지식으로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첫째, 지식은 성공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 성공적인 생산 여부는 불확실하다. 둘째, 일단 생산되고 나면 새로운 지식은 소유가 불가능하다. 셋째, 지식은 분할이 불가능하다. 분할이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에는 사용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비가 감소하고 수익체증 현상이 발생한다. 넷째, 지식의 가장 큰 특성은 비경합성이다. 비경합재는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용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고갈되지도 않은 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컨텐츠를 베껴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비경합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로머는 지식의 경우 비밀 유지·특허·상표권·접속 암호·소유권 표준·계속적인 혁신 등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는 배제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경합성 및 스필오버 효과로 인해 새로운 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결국 사라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자산으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학공식을 활용해 제약화에 성공하거나,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수많은 지휘자와 교향악단이 오늘날에

도 계속 연주하거나, 고흐의 그림을 머그잔에 찍어내는 것 등 다양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Warsh 2006).

경제성장에 지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경제학계의 상식이 된 이후에는 경제학의 바깥으로부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이 제안되었다. 지식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확산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의 결과물이 바로 사회적 자본인데, 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결망 고유의 특성인 신뢰와 관용의 관계로부터 형성된다. 사회적 연결망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유된 지식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신뢰하게 만들수록 사회적 네트워크 내 지식의 흐름은 늘어나고 지식의 확산도 한층 촉진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퍼트넘은 상호성의 규범과 시민의 참여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상호성이란 단기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즉각적인 대가를 기대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망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편익을 주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한 사회에 규범으로 각인될 경우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커진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 네트워크도 구성원들에게 그 속에 머무를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며 유사한 혜택을 제공한다(Putnam 2000).

신뢰의 중요성은 특히 이탈리아의 시민경제학 전통에서 강조되었다. 이들은 신뢰를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으로까지 여겼다. 나폴리의 경제학자 가에타노 필란지에리에 따르면, “신뢰는 상업의 영혼이며, 신뢰가 없으면 상업의 구조를 이루는 모든 부분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나폴리의 또다른 경제학자 안토니오 제노베시는 “빠르고도 광범위한 경제순환을 위해 공공 신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며, 신뢰가 공공선을 향한 시민의 덕성이자 공적 신의의 성격을 띤다는 점과 신뢰가 경제적 번영의 기초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 시민경제학 전통에서는 신뢰가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경제 속에서의 부단한 활동을 통해 계발되고 고양되는 것으로서 이해되었다. 한편, 제노베시에 따르면, 신뢰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친구와 친지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다. 신뢰는 모르는 사람, 자신과는 다른 세계관과 자원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확장될 때 가장 유익하다(Zamagni & Bruni 2007).

5. 경쟁과 상호성과 협력의 연결망

내생적 성장이론의 출현과 함께 공간의 경제적 특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등 경제성장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해명하려는 시도들도 늘어났다. 여러 학자들은 외부경제, 숙련노동력, 기술혁신과 같은 현상이 특정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경제성장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화의 시대에 지역의 집단적 노력과 그 성공 가능성을 옹호하는 강력한 경제적 논거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우위의 원천을 일관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이후 제도와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의

새로운 흐름과 사회학 등 여타 학문의 도움 속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이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문화적·제도적 장치들의 특성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실리콘 밸리나 에밀리아 로마냐와 같은 몇몇 지역들이 세계화 시대에 높은 경쟁우위를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 지역은 핵심 경쟁력을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 대학 및 연구소, 주변 인근 기업들의 정보 공유 등 학습을 기반으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산업지구 개념을 살펴보자.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s)란 동종 또는 유사 산업에 속한 전문화된 소규모 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있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지칭한다. 이들 기업들은 전체 생산공정 중 특정 단계에 전문화하고 산업지구 내 다른 기업들과 구매 또는 판매 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기업들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지연·혈연·학연 등 강한 사회적 유대를 기초로 공동의 이익을 향해 효과적으로 매진한다. 이들은 강한 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시장변화나 새로운 추세에 신속하게 적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이나 생산공정 혁신을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산업지구의 기업들은 연관 기업들과 비공식적 하청관계를 맺어 거래비용을 높이지 않으면서 과잉설비나 경기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나 공급자들과 긴밀한 인적 교류를 행하며, 경쟁기업들과도 협력관계를 빈번히 형성한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공유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며, 혁신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산업지구가 지식의 생산과 확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지식은 성문화된 지식과 성문화될 수 없는 지식으로 나뉜다. 성문화된 지식이란 대기업의 연구개발 실험실이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생산이 되고, 교과서나 매뉴얼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세계 어디로도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 지식이다. 성문화될 수 없는 지식이란 공장에서의 숙련이나 작업 관행과 같이 도면이나 매뉴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흉내내기도, 모방하기도, 지역을 넘어 확산되기도 어렵다. 그런데 업종의 특성상 이 암묵적 지식이 경쟁우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쟁우위의 원천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암묵적 지식은 숙련 인력 안에 체화된 지식이며 작업현장이 속한 특정 장소의 '산업적 분위기' 속에 묻혀 있으며 솜씨의 뽐냄과 전수를 통해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이 점에서 근접성이나 면대면 접촉과 같이 산업지구가 제공하는 만남의 특성은 문화와 가치의 공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상호이해와 신뢰 등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익히고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Amin 1999).

산업지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는 이탈리아 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경험도 있다. 이들은 경쟁과 상호성의 조화를 꾀하는 산업지구 협력 모델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영미권 자본주의에서의 경쟁은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 위치경쟁인 경우도 많다. 반면 산업지구에서의 경쟁은 성과와 제품의 우수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쟁의 논리는 해당 기업 차원은 물론 하나의 생산시스템인 산업지구 차

원 나아가 에밀리아 로마냐 전체 지역 차원에서 경제적 성과의 표준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특징은 주인이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이 지역 고유의 장인문화(artisan culture)의 전통에 힘입은 것이다. 성공의 척도도, 생산 네트워크에의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것도,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성과이다. 산업지구 내의 기업이 이 클러스터 체계 속에 계속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고 유연성 또한 높다는 평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생산 연쇄 중 하나의 연결고리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호성의 규율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명성과 지속적인 혁신능력 덕분인 것이다(Restakis 2010).

그런데 산업지구는 지리적으로 보자면 변방에 많다. 변방은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전통사회의 성격이 강한 곳으로 모두가 잘 알기 때문에 신뢰와 사회적 제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소기업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절약시켜주며, 유연성을 높여준다. 소기업들은 이러한 특성을 배경으로 숙련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점진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제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틈새시장에 특화할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특성은 산업지구의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전통·믿음·문화 등에 기초한 암묵적 규범은 외부인의 통합이나 새로운 지식의 수용을 방해함으로써 장기적 변화에 대한 해당 산업지구의 적응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지역의 이러한 기풍은 발본적인 혁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에 신제품 출현과 같은 파괴적 변화가 일어날 경우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빠르게 상실할 위험이 상존한다(Audretsch et al. 2007).

산업지구의 이러한 특성과 대조되는 것이 대도시이다. 대도시는 자유와 관용과 다양성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도심에는 풍부한 문화적 유적과 특정한 생활양식을 지원하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고, 외부인이더라도 지역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가 쉽다. 대도시에서는 산업지구와 달리 강한 사회적 유대는 도시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대신, 이웃이나 직장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이들 사회적 연결망은 여타 네트워크들과 '느슨하게' 연결된다. 가령, 한 개인의 친구 네트워크에는 일부 사업적 관계도 포함됨으로써, 친구 네트워크와 사업 네트워크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산업지구의 사회적 연결망보다 안정성이나 결속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외부자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과 신선한 아이디어의 유입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약한 사회적 유대와 느슨한 사회적 연결이다(Audretsch et al. 2007).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대도시에는 다양한 외부경제를 낳을 수 있는 사업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와 관용과 다양성의 토대 위에 경쟁을 벌이는데, 이때에도 경쟁의 모습은 에밀리아 로마냐의 그것과 유사하다. 제인 제이콥스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의 경쟁은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주체들에 체화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놓고 탁월함을 겨루는 이러한 의미의 경쟁은 대도시만의 몫이 아니며 모든 지역, 모든 사회에서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성에 토대를 둔 이러한 만남과 경쟁이 경제의 영역을 넘어 일상과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도 있다. 자율과 자치의 문화에 의해 지역 사회가 문제가 충분히 토론되고, 공적 활동의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공적 공간이 우리 모두의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꿈꿔본다. 이 속에서는 사회적 삶 및 경제적 삶의 여러 영역에서 상호성과 신뢰의 문화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자유와 관용과 개방성과 다양성에 의해 창의와 번영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송현호 (1996). 애덤 스미스의 소위 노동가치론에 대한 재검토. 『경제논집』, 12, 1-20.

Ash Amin. (1999).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 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ume 23, Issue 2, pp. 365-378 11

Audretsch, D., Oliver Falck, Stephan Heblich (2007), It's All in Marshall: The Impa ct of External Economies on Regional Dynamics, CESIFO Working Paper No. 20 94

Lucas, R.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 ary Economics*. Vol. 22. 3-42.

Lucas, Robert E. (1993).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Vol. 61, No. 2. 251-272.

Marshall, Alfred (1920). *Principles of Economics* (Revised ed.). Macmillan, 알프레드 마셜 (2010), 백영현 역, 경제학원리, 한길사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 ity*. Simon and Schuster.

Restakis, J. (2010), *Humanizing the Economy: Co-Operatives in the Age of Capital*. New Society Publishers

Smith, A. (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애덤 스미스(2009), 박세일·민경국 역,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Smith, A. (1789),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 s*, 6th edition, 애덤 스미스 (2008), 유인호 역, 『국부론』, 동서문화사.

Warsh, D. (2006). *Knowledge and the Wealth of Nations: A Story of Economic Dis covery*. 데이비드 워시(2008), 김민주, 송희령 역 『지식경제학 미스터리』, 김영사

Zamagni, S. & L. Bruni (2007), *Civil Economy*, 스테파노 자마니, 루이지노 브루니 (20 15), 제현주 역,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관계 속 행복의 관점으로 경제학을 재구성하다』, 북돋움

지역사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주민복지활동의 힘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을 읽고서

김정희[1)]

일본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은 여러 일본 생협들의 사례에서와 마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아이쿱 지역조합 활동가의 입장에서 매장사업을 안정화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조합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조합 활동과 사업을 구상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인간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완전 정보 상태에서 불안과 불신을 느낀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강한 안심과 신뢰를 갖는 듯하다.

코프 아이치가 제안하는 생활서비스의 특징은 규격화되어 그 품질을 제 3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이 숨어 있어서 실제로 이용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2)]는 점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S.자마니와 L. 브루니는 사회적 품질 시장(social quality market)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관계적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3)]

이런 특성을 가진 생활서비스를 상호부조활동으로 풀어 낸 코프 아이치의 성공담은 기존의 생협 사업을 통한 강한 신뢰가 합병과 주민복지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생활상담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코프상담센터>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4)]의 전 단계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혼자서 성취하기 어려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조율된 집단행동을 하는 조직(organization)을 만들고, 조직에 속한 구성원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과실을 얻는다고 한다.[5)] 논문에서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을 기존 생협 조직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실천공동체'의 동학으로 설명하는데 학습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비 또는 준비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학습과정의 공동체 성격을 잘 보여주는 설명이라 생각하며 공동체와 구성원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변화, 발전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조직 활동으로 생

1) 율목아이쿱생협 이사장
2) S. 자마니와 L. 루마니,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북돋움, 2015
3) S. 자마니와 L. 루마니, 전게서
4) 김기태 김수환 김영호 박지영,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02
5)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제 6판』, 을유문화사, 2011

겨난 사회적 자본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복지체계는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공급 중심축이 이전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것으로 여전이 서비스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6]고 하겠다. 실제로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에서는 실비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재정 조달은 국가에서, 서비스 위탁은 생협이 담당하는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대안 경제 활동으로 거론되는 지역화폐[7]가(레츠 LETS, 아워즈 Hours, 타임달러 Time Dollar)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

마샬은 "경제적 과정과는 달리,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권리가 개인이 갖는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8]고 한다. 코프 아이치는 복지를 수혜자와 제공자, 복지 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라는 이분법을 넘어 제도적 환경과 자발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관여하는 당자들 스스로 만들어 내는 성과로 인식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복지권(사회권)을 시민권의 완성으로 본 마샬의 견해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은 이러한 복지에 대한 권리실현 뿐 아니라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 임금노동의 일자리(job)는 점차 사라지지만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현대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활동(work)을 보여준다. 고정된 일자리가 소멸하는 탈-일자리(dejobbing) 현상을 맞아 민간 부문에서 '해방된' 노동력이 관계재와 가치재를 생산하는 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어야 한다는 S. 자마니와 L. 루마니의 주장도 떠올리게 된다.

아이쿱은 지역조합의 분화를 통해 보다 지역사회에 밀접한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코프 아이치는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활동으로 그 저변을 넓혔다. 조직의 분화와 합병은 어느 것이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처한 시기와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조합원과 잘 소통하고, 설득하며 그 과정을 통한 비전을 제시하는가에 중요하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넘어선 새로운 사업과 활동의 제안에서 이러한 주민복지 활동은 기존의 조합원들과 새롭게 가입하려는 시민들에게 매장사업 이외의 상호부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소개한 논문이 더욱 소중하다.

---

6) 감정기 백종만 김찬우,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12
7) 전게서
8) 마샬, T.H. Marshall, "Value problems of Welfare-Capitalism," *Journal of Social Policy* / Volume 1 / Issue 01 / January 1972, 닐 길버트·폴 테렐, 『사회복지정책론-분석틀과 선택의 차원』에서 재인용

협 동 조 합

2016. 5. 25(수)
13:00-18:00

지 식 의 숲 을 이 루 는

① **기념심포지엄_"좋은 동네에서 살자: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협동조합"**

1.사례연구발표
-조합원이 그려나가는 생활정치: 진주아이쿱생협의 실험
-고립된 섬들에 다리 놓기: 대구행복·포항아이쿱생협의 활동풍경
-생협매장사업은 지역사회에 무엇을 남기나: 대전지역 아이쿱생협의 사업특성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 활동

2.대담
황지애_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화령_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김창진_성공회대학교, 박중현_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염찬희_성공회대학교, 김정희_율목아이쿱생협
김형미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② **기념식** 진행 김창진_정치학자

③ **축하만찬**

일시 2016. 5. 25(수) 13:00-18:00
장소 여성플라자 아트홀 & 국제회의장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주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문의 02-2060-1373
icoop-institute@daum.net

십 년 을 향 해

협동연구(勤)
2016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주년

(재) icoop협동조합연구소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항동)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TEL 02)2060-137 FAX 02)6499-1372
iCOOP-institute@hanmail.net
http://www.facebook.com/icoopisitute
http://www.icoop.re.kr